

2020년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 목적

1.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림
2. 올바른 역사와 사상관 정립
3. 4.3사건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 강구
4.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 수호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후 2시 30분 ~ 5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제주4.3사건진상재조사시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역사두길포럼,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 연락처 : 02-737-0717



목 차

세미나 순서 3

인사말·격려사

 인사말 - 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6

 격려사 - 박정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 8

연사

 1.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 11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2.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69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이명인 역사학 박사

 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85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4. 제주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129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

성명서 147

고발장 153

기자회견 165

실천하는 애국!
번영하는 대한민국!

세미나 순서

사회 : 김상기 FCF 후원회장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14:30~15:00	국민의례
	인사말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전 국회의원)
	격려사박정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 (전 한미연합사대항군 사령관)
15:00~15:20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15:20~15:40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이명인 역사학 박사
15:40~16:00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16:00~16:20	제주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
16:20~16:30	성명서 발표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16:30~16:40	고발장 발표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16:40~16:50	기자회견
16:50~17:00	기념촬영

인사말·격려사

이동복 ·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전 국회의원

박정수 ·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
· 전 한미연합사대향군 사령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The Jeju 4.3 Incident

인사말

이 동 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가 아니라 명백한 공산폭동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정권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올바른 역사관과 사상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역사왜곡하는 무리들을 심판하고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는 제주4.3폭동과 반란을 민중봉기로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라고 하는 가짜 보고서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즉, 보고서는 47년 3.1발포 사건과 48년 제주 4.3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무장봉기로 미화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였고, 수많은 군경과 우익이 학살을 당한 사실은 빼버렸습니다. 제주 4.3폭동 당시 폭도들은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전형적인 민심이반 책동이었습니다. 제주4.3 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공비를 토벌한 것을 어찌 학살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군경을 죽인 2,500여명의 살인폭도까지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왜곡을 바꾸지 못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이 나라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4.3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적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4.3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정치적, 법적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주권자 국민은 공직자들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대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이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수호를 위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국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 6. 4.

이 동 복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The Jeju 4.3 Incident

격려사

박정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우한코로나바이러스 방역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건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주4.3사건’은 오래 전에 이미 진상이 밝혀진 아픈 역사입니다. 문대통령은 4.3사건희생자 추념사에서 제주도민들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으며,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대통령이 지난 2018년 4.3사건 70주년 추념사에서 4.3사건을 국가폭력이 제주도민을 학살한 역사로 규정한, 대한민국이 가해자라는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4.3사건을 조명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 5.10선거를 저지,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며 폭동진압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이는 많은 역사 자료가 증명하고 있으며, 무장반란군 제1대사령관 김달삼은 북한으로 탈출, 영웅이 되었으며, 제2대사령관 이덕구는 48.10.24. 신생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생국가에서 반국가 ‘무장폭동 진압’이라는 전개과정과 원인에는 눈을 감고, 마치 국가폭력이 이념이라는 잣대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역사왜곡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경찰 및 가족들을 비롯한 국가공권력 편에 섰었던 많은 민간인들도 무장폭도들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역사의 원인을 제공한 무장폭동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선의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보다 열린 자세로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또한 4.3사건 당시 현장을 체험한 세대가 살아계신 동안 전후세대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 발제를 맡아주신 이명인 박사님, 이선교 대표님, 김재동 목사님, 멀리 제주에서 오신 이승학 제주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4.

박정수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

1. 제주4.3사건의 정의(定義)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세력들이 5·10 제헌의원 선출 총선거를 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¹⁾는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 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2. 제주4.3사건의 배경

가. 8·15 광복 후의 제주도 상황

(1) 제주도의 군정

8·15 광복 당시 제주도에에는 일본군 60,000여 명이 있었다.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을 대비해서 한라산에 진지를 구축하는 등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항복하게 되었고, 미군에 의해 무장을 해제당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였는데, 무장해제 과정에서 무기와 탄약 일부를 미군에게 반납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산속에 매몰하기도 하였다.

1945년 9월 28일 제주도에에는 일본군항복접수 「팀」 및 무장해제 「팀」이 입도하여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접수받고 무장해제를 시킨 후, 1945년 11월 10일에 제6사단 제51야전포병대대의 분견대가 상주전술부대로서 진주하였다²⁾. 제주도의 미군정은 스타우드 소령이 지휘

1)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세력을 문장을 구성하는 맥 상 인민유격대, 인민해방군, 남로당반란군, 빨치산계릴라, 한라산공비, 잔비, 산폭도, 폭도, 무장대, 무장대반란군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하는 영토형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부대인 제59군정중대가 1945년 일본군 송환이 끝난 후인 11월 9일에서야 제주도에 진주하여 군정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림 1. 일본군 무장해제



그림 2. 일본군 99식 소총 미군에게 반납

군정의 중점은 치안유지와 적산관리였다. 따라서 경찰권과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무관과 일제가 흡수한 국유재산 등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요직이 되었다. 미군정은 현지 사정에 밝은 일제 때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미국인과 한국인 공동 도사제도가 도입되는 1946년 2월에는 박경훈이 한국인 제주도사에 부임함으로써 스타우드와 박경훈이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이들은 1946년 8월에 제주도가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될 때에는 도사 대신 도지사(道知事)로 호칭되었다.

(2) 정치 사회 동향

광복이 되면서 여운형이 조직한 건준(건국준비위원회)이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는데, 건준 지방조직은 신정부에 참여하려는 인사들로 읍·면·동 등 밑에서부터 조직되었으며,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건준 조직이 행정조직을 표방한 제주도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리(里) 단위까지 조직되면서 가장 강력한 조직체가 되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행정기구를 표방했지만 미군정이 이를 인정하

2) 신상준. 제주4·3사건 I. (제주 : 제주문화, 2020), p.134.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지 않았으므로 주로 치안활동에 주력했고, 군정업무를 맡은 제59군정 중대와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이러한 인민위원회와 미군정과의 협력 관계는 1947년 3·1기념 불법 시위 사건을 계기로 첨예한 대립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8·15 후 제주도에서 최초로 결성된 정당조직은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로서 1945년 10월 초에 20여 명이 모여 결성하였고, 중앙에서 좌익 3개 정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을 창당(1946. 11. 23.)한 후인 1946년 12월에 조선공산당을 남로당으로 간판만 바꾸어서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남로당제주도당으로 약칭)를 결성하고 안세훈³⁾이 위원장을 맡았다.

남로당제주도당은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당원 배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청(조선민주청년동맹), 부녀동맹 등 외곽조직을 만들었다. 제주도 민전은 1947년 2월 23일에 결성되었으며, 민청은 1947년 1월 12일에 창설되었고, 제주도 부녀동맹은 1947년 1월 15일에 결성되었는데, 민청과 부녀동맹은 읍·면·리 단위까지 조직을 갖추었다.

한편, 우파세력은 좌파세력에 밀려 조직이 미미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우파단체로는 1946년 3월에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제주도지회가, 1947년 2월에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때는 이미 좌파조직이 지방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단원을 모집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3) 도제 실시

제주도는 1946년 8월 1일부로 행정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되었다.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면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경찰조직도 확대되었으며, 국방경비대 1개 연대가 창설됨으로써 정부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경찰조직의 확대로는 제8관구(전남)경찰청 제22구 경찰서 체제에서 1946년 8월 1일에 제주감찰청을 신설하고 제주읍에 제1구 경찰서, 서귀포에 제2구 경찰서를 신설함으로써 경찰기구가 확대되었다.⁴⁾

3) 안세훈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제주도 최고 책임자로서 4·3사건 전후에 월북하고 6·25한국전쟁 직후 인민군이 낙동강으로 밀려올 때 남하하여, 전남 광주시 하남현 고향 친척집의 마루 밑에 굴을 파서 숨어 살다가 월북하지 않고 죽었다고 전해진다.

4)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서울 : 아성사, 2013), p.43.

국방경비대는 각 도에 1개 연대씩 창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함에 따라 1946년 11월 16일부로 모슬포에 국방경비대 제9연대⁵⁾가 창설되었다.

(4) 3·1절 기념 불법시위와 경찰과의 충돌 사건

(가) 3·1절 기념 불법 시위 사건

1947년 2월 1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서는 3·1절 기념행사를 앞두고 남로당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배후에서 조직적이고도 세밀하게 행사 준비에 대한 지침을 산하단체와 각 읍, 면, 직장 세포들에게 전달하였다. 3·1기념 운동을 통하여 당내의 최고목표를 합법성 쟁취에 두고 당의 최고목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실천에 두어 3·1투쟁의 의의를 하부당 조직에 지시하고 1947년 2월 16일에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 1946년 9월에 발생한 철도파업 및 각 산업부문의 대파업과 대구시민항쟁 그리고 남조선 각 지역의 인민항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현 정세에 결부시켜서 3·1기념투쟁을 실시하라고 지령을 내린다.

제1차 지령서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1947년 2월 16일 자)⁶⁾

- * 각 읍면에서는 인위, 민청, 부동(婦同) 기타 각종 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기념 준비위원회를 즉시 조직할 것. 준비위원회에는 동원부, 선전선동부, 준비부를 둘 것. 각 부락 및 각 직장에서도 이에 준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로 조직할 것.
- * 24일까지 3·1운동의 원인, 경과, 의의, 결과를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의 선전선동사업 및 동원 예상을 반드시 각 읍면 준비위원회에 보고케 하고 즉시 각 준비위원회에서는 도준비위원회에 종합보고를 할 것.
- *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부락 및 직장대회를 소집하여 3·1 시위운동에 전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반(班) 및 직장 단위로 동원 조직하여 지휘자 및 자위대(2, 3인)를 선정하여 부락 준비위원회에 보고할 것.
- * 당일에 지휘자 및 자위대는 반 및 직장별로 동원시켜 시위행렬로 부락 준비

5) 1946년 11월 16일에 제9연대가 기간요원 1개 중대 50명으로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었다(연대장 장창국).

6)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서울 : 실천문학사, 1991), pp.161 ~ 163.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집합할 것.

- * 각 읍면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장소에 각 부락 준비위원회는 동원된 전원을 시위적 행렬로 집합할 것. 단체기 및 표기기(標記旗) 특히 인위기⁷⁾ (人委旗)를 들 것. (이하 생략)

- * 표어 (일반)

민주주의적 애국투사를 즉시 석방하라!

인민항쟁 관계자를 즉시 석방하라!

최고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만세!

정권은 즉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일제적 통치기구를 분쇄하라!

단일 누진제 즉시 실천!

입법위원을 타도하자!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 파쇼분자의 근멸!

삼상회의 결정의 즉시 실천!

인민 경제를 파괴하는 모리배의 철저한 소탕!

언론출판집회결사파업·시위·신앙의 절대 자유!

식량문제 해결은 인민의 손으로!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2월 16일에 세밀한 행사지침인 지령서를 산하 단체와 읍·면 직장 세포들에게 시달하였고, 행사는 민주주의민족전선⁸⁾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책임자 안세훈 외 간부진 수명은 당의 기존 방침에 따라 1947년 2월 17일 3·1기념을 거족적으로 행사한다는 미명아래 ‘3·1기념 투쟁행사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3·1절 기념 행사를 닷새 앞둔 2월 23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일구락부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친일 승려 이일선 사회로 개막되어 제주 민전 의장단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장 안세훈, 승려인 이일선⁹⁾, 제주중학교장 현경호 등 3명이 추대되었다.

7) 인민위원회깃발

8)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은 미군정 시기에 서울에서 결성된 좌파 계열의 연합 단체이다. 약칭은 민전이다. 1947년 2월 23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식이 조일구락부에서 열렸다.

9)『친일승려 108인,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 임혜봉 지음. 제2절 매스컴에 보도된 극성스러운 친일 승려들이라고 이일선을 기록하고 있다. 승려 이일선은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전동

도내, 읍면, 대의원 각 사회단체 대표등 315명과 방청객 2백여 명의 참석으로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 벽두에 긴급동의로 명예의장에 스탈린 수상(소련), 박헌영 (당시 북한에 있었음,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수상겸 외상, 조선공산당 총비서, 남조선 노동당의 실력자), 김일성(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허헌(남로당 위원장,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원봉(민주주의 민족전선 공동의장), 유영준(여성동맹 위원장) 6명을 추대하였다.

추대된 명예의장들은 세계 및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의 최고위급 지도자들로써 특히 김일성을 추대한 것을 보면 3·1절 기념 행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1947년 1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¹⁰⁾(이하 ‘민청’으로 약칭)도 이곳에서 창립되었는데 미군정은 행정명령 제2호로 좌파 청년단체인 조선민청을 테러단체로 규정, 해산명령을 내리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이하 ‘민애청’으로 약칭)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 민애청 조직이 제주4·3사건 때 자위대¹¹⁾와 유격대의 핵심근간을 이루게 된다.

민전 도위원회 공동대표의 한사람인 안세훈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이자 3·1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안세훈을 비롯한 민전 의장단은 2월 25일 경찰고문관 패트릿지 대위를 방문, 집회허가를 신청했다.¹²⁾

한편 제주경찰당국은 2월 22일 3·1 기념행사와 관련,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내용 등 4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① 각 관공서, 기타 각 단체의 기념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② 가두행렬과 데모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함, ③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하고 타 리·동, 읍·면 주민의 참가를 금함, ④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행할 시는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¹³⁾ 등이었다. 그러나 3·1 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 지방에서는 면 단위로 기념식을 갖되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지역만은 제주북국민학교에 모

원부에서 활동하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인 의장단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광사에서 예비검속돼 산지포구에서 수장됐다.

10) 좌익 청년단체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 1945. 8. 18)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조선민청, 1946. 4. 25)을 거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 1947. 6. 5)으로 바뀌게 된다.

11) 남로당 리(里) 세포원중 열성 분자로 조직된 기초 전투 요원

12) 『제주신보』, 1947년 2월 26일.

13) 『제주신보』, 1947년 2월 24일.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여 연합으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2월 28일 제주도 군정장관 스타우트 소령이 3·1기념행사위원회 대표 안세훈 등 여러 명을 미군정장관실로 초치, 3·1절 기념행사에 대한 협의회에서 강인수 감찰청장, 패트릿지 대위, 강동효 제1구경찰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려면 읍내를 벗어난 서비행장에서 거행하라는 최후적 지시를 하였다.¹⁴⁾

3·1기념 투쟁위원회는 암암리에 각읍면 리동 부락 좌익계통에 지령하여 당국의 지시에 순응함이 없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미군정을 비방하고 강력한 지하공작을 전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찰관 및 그 가족을 위협, 협박하면서 자연히 직장을 이탈케 하는 공작을 펼쳤다.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행사장인 제주읍 북국민학교에 남로당이 동원한 군중이 모였다. 군중은 각 마을별로 동원되었고 참가를 거부한 주민들은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였다. 학생들은 이날 참가하지 않으면 민애청 가입 학생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날 모인 군중들은 제주읍내를 비롯하여 조천, 한림, 애월, 구좌 등지에서 좌익계의 선동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들이다.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리던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민애청의 학생들도 대거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미 이날 오전 9시께 오현중학교에 집결, 한 차례 행사를 치른 다음이었다. 오현중학교 주위의 길목에는 군중들이 대거 집결하여 3·1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지지”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등 포어와 프랑카드들을 들고 있었으며 부녀동맹원들은 붉은 완장을 두르고 반미 뼈라를 뿌리고 있었다.

이 기념식에서 대회장인 안세훈은 “3·1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통일 민주국가를 세우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¹⁵⁾. 친일 승려 이일선은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서쪽에 저 동백꽃을 보라’고 하면서 대중연설을 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또 식당내에서는 양과자를 먹지말자,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등의 반미 구호와 미군정 기구의 비방, 경찰에 대한 적개심 양양

14)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 : 일신옵셋인쇄사, 1990), p.282.

15) 이 행사에서는 옛 음조인 애국가와 소위 적기가, 김일성장군 노래 등을 선창하며 행사가 진행되었다.(증언: 2008.04.02. 김하영 증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등 장내의 분위기는 험악하였고 일부 군중들은 경찰서를 습격하여 피검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박수로 찬동을 얻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삼창으로 식은 끝났다.

기념식이 끝나자 남로당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원들이 군중들에게 전 참가자들은 읍내로 시위 행진에 옮길 것으로 긴급 동의를 얻고 8명씩 1조로 어린학생들은 앞에 세우고 뒤에는 젊은 청장년들이 스크럼을 짜고 북국민학교 정문을 나와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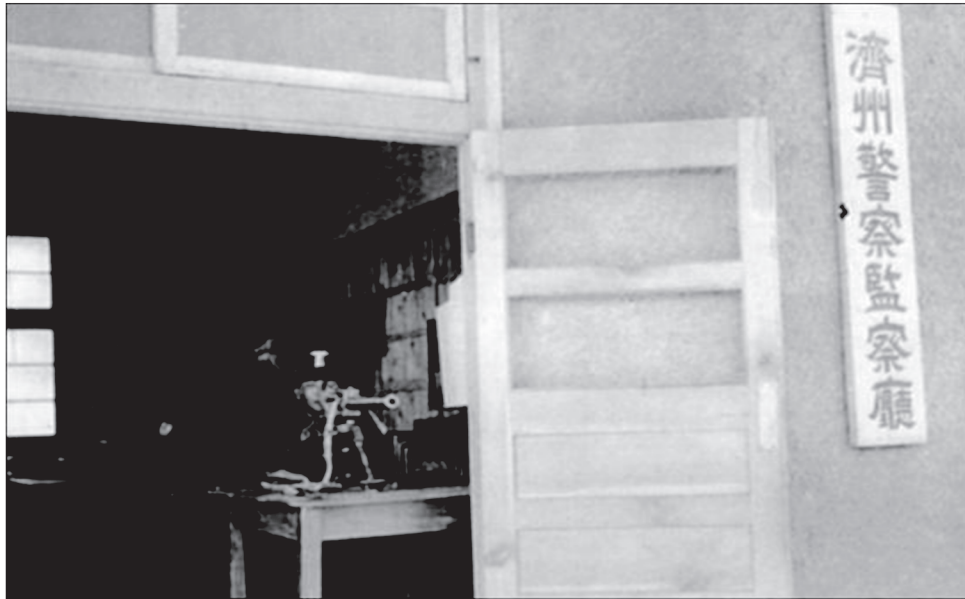


그림 3. 제주경찰감찰청(북제주 관할 제일구경찰서, 남제주관할 제2구경찰서를
뒀)정문에서 캘리버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경계를 서고 있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이 날의 행사에 대해 제주경찰감찰청은 경찰병력을 읍내 요로에 배치하여 군중들에게 귀가할 것을 명하였으나 3·1불법시위에 참여한 군중들은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제주북국민학교 행사는 불법집회인가? 합법집회인가? 『제주경찰사』는 이에 대해 ‘무허가 집회’로 기록하고 있다.¹⁶⁾ 또 미 6사단 정보참모부도 24군단에 제출한 정보보고 제1보에는 이 날 행사를 ‘허가받지 않은 집회’로 규정, 보고했다.¹⁷⁾

이날 오후 2시께 기념행사가 끝난 후 미군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제주북국민학교를 나온 시위행렬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 대열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는 관덕정 광장을 거쳐 서문통으로, 다른 한 대열은 제주경찰감찰청이 있는 북신작로를 거쳐 동문통으로 이어졌다. 제주 읍내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 주민은 서쪽 대열에, 동쪽 지역 주민들은 동쪽 대열에 합류하여 마을로 돌아가면서 시가행진을 하며 위세를 부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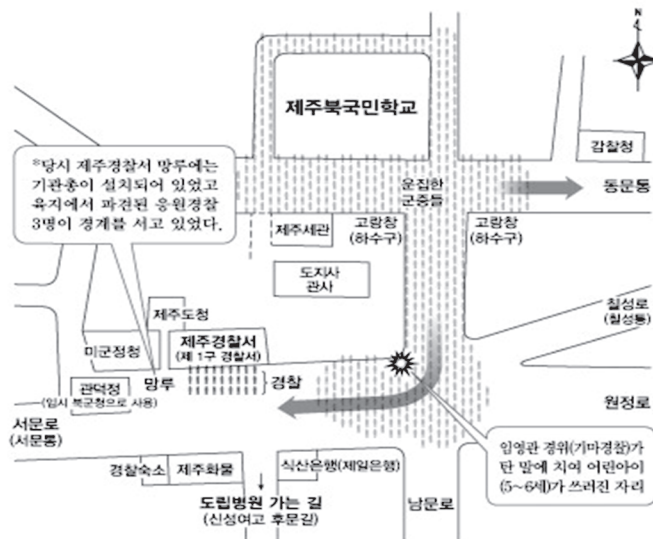


그림 4. 3.1절 기념 불법 시위 사건

3·1기념행사를 하고 오후 2시경부터는 미군정과 경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행진을 하였고, 많은 제주읍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구경하였다.

북국민학교 앞에서 제1구 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던 시위대의 돌격대라고 생각되는 선두의 젊은 청년들의 무리가 몽둥이를 들고 경찰과 미

16) 상계서, pp. 282~283.

17)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00, March 2, 1947.

군헌병들에게 무력을 행사하였다.



그림 5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읍내 기마경찰 모습

이를 주시하던 기마경찰관 임영관¹⁸⁾ 순경이 말을 잡아타고 시위대 앞을 막아선다. 이어 강일평 순경이 말을 달려 감찰청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섰다. 이창후 순경도 학교앞 서쪽 길을 내달았다. 이러는 순간 시위대의 행동은 더욱 난폭해졌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플래카드용 장대를 뽑아내 임영관 경위가 타고 있는 말의 항문을 찢러대는 바람에 놀란 말이 이리저리 뛰었다.¹⁹⁾ 말이 요동치는 바람에 시위대 5~6명이 쓰러졌다. 그 사이에 시위대는 갑자기 앞까지 진출하였다. 놀란 말이 앞발을 쳐들고 날뛰는 것이다. 이때 오후 2시 45분경 갑자기 튀어나온 6세 가량의 어린이²⁰⁾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영주여관 길 옆 배수로에 떨어졌는데,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미한 사고로 보아진다.

갑자옥 앞에서 임영관 순경이 탄 말의 고삐가 시위대에 잡혀 말머리가 땅바닥에 닿는가 했더니 말이 괴상한 울음을 하며 하늘 높이 치솟는다. 와!! 하는 놀란 함성과 함께 말고삐를 잡은 서너 명의 시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 ‘사람 죽인다’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이때였다. 어린 아이를 안고 갑자옥 벽에

18) 임영관 순경으로 1948년 4·3사건당시는 성산지서 주임으로 근무했다. 1951년 9월 19일 성판악 물장 오리 전투때 남로당 반란군의 총알에 전사했을 때 경찰토벌대장으로 당시는 경감이었으나 후일 경무관으로 추서하였다.

19) 고문승 편저. 제주사람들의 설움<4·3사건>. (제주 : 신아문화사, 1991), p.313.

20) 구 도지사관사 앞 영주여관의 셋째 아들로 김구○으로 알려졌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붙어서 구경하던 여자가 넘어지는 사람 밑에 깔린 것이다. ‘순경놈이 어린 아이를 치어 죽게하고 도망친다! 저놈 잡아라!’ 넘어졌던 사내가 일어서면서 샷대질을 하며 고함친다.

기마경관이 어린이가 길 옆 배수로에 떨어진 사실을 몰랐던지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관람 군중들이 야유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부 군중들은 “악질 경찰 놈 때려 죽여라. 악질 경찰 놈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다. 저 놈을 붙잡아라”고 소리치며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다. 임영관, 강일평, 이창후 기마경찰관은 시위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말을 오락가락 물면서 선두 교란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기마 경찰대가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는 소문은 곧 남로당제주도 당위원회 간부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여 기마 경찰대가 어린이를 치어 죽였다고 흑색선전을 시작했으며 경찰에 반감을 사고 있던 군중들은 투석과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라는 등 사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시위대들은 세 기마 경찰관을 밀치고 관덕정 앞으로 돌진하였다.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진하였다. 강동효 제주경찰서장은 “시위대 여러분께서 해산하지 않고 경찰서로 쳐들어 온다면 무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을 저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시위대들은 “미친 개놈! 개수작 하지마라!” 아랑곳없이 여기저기에 고함을 치며 “쳐들어 가자! 와!” 함성과 함께 경찰서 앞까지 밀린 저지선이 무너질 순간이었다. “발포하겠다” 강동효 서장이 다급한 목소리였으나, 시위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 후미에서 “전위는 무엇하느냐?” 고함 섞인 확성기가 강동효 서장의 목소리를 제압하듯 시위 군중들을 독려했다. 와! 와! 함성과 함께 경찰서 정문 저지선이 무너졌는가 생각하는 순간 요란한 총소리가 관덕정 마당의 공중을 메아리쳤다. 빵-! 빵-! 천지를 뒤흔들 듯 고막이 터지는 듯한 총성이 들렸다. 위협 발포인 것 같았다.

시위대들은 “개놈들이 무차별 사격이다. 사람을 마구 쏘아 죽인다.” 군중속에서 아우성이 터짐과 동시에 서로 진입하려던 시위대오가 흩어지고 관덕정 앞 칠성로 서문로 할 것 없이 시위군중이 곳곳으로 피신하느라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때 경찰서 건너편인 식산은행 부근에서

경비중이던 기마경관 한명이 부근에 있던 남로당원 청년들에게 다리가 붙들려 말에서 끌려 내려지고 있었고, 이런 광경을 본 관덕정과 경찰서 망루에서 근무하던 응원경찰이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사격을 했다.²¹⁾ 이때 사격은 경찰서 망루대 위에서 먼저 발포하자 옆에 있던 응원경찰관들도 위협사격을 했으며²²⁾ 당시 경찰서의 정문이나 망루 및 관덕정 등에는 응원경찰이 무장을 한 채 경계를 서고 있었다.

경비 경찰들이 총격함으로서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도립병원 앞에서 두 번째 발포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응원경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극명하게 표출한 사건이었다. 당시 도립병원에는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한 응원경찰관이 입원해 있었는데 동료 2명이 경호 차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덕정 쪽에서 총성이 나



그림 6. 제일구경찰서 망루

고, 피투성이된 부상자들이 업혀 들어오자 그들 중 한명인 이문규(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순경이 공포감을 느껴 소총을 난사, 장제우 등 행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²³⁾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도립병원 앞의 발포를 ‘비이성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2건의 발포자들에 대한 심리분석을 다음과 같이 했다. 즉 “그들은 대전에서 훈련을 받았고, 1946년 가을 좌익 폭도들에 의해 동료 경찰이 잔혹하게 당했던 사실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²⁴⁾는 내용이다. 이것은 ‘대구 10월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로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심리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21) 가. 제주도경찰국, 전계서, p. 284

나. 강용삼·이경수, 대하실록제주백년. (서울 : 태광문화사, 1984), p.557.

다.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제주 : 신아문화사, 1991), p.314.

22) 강재훈, 제주4·3의 실상. (제주 : ○○○, 1988), p.59.

23) 『제주신보』, 1947년 3월 22일.

2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 도서출판 선인), p.110.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남로당제주도당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反警) 활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뼈라 붙이는 일과 사상자 구호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제주 민전은 각계가 참여하는 3·1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3월 3일 관(官) 중심으로 조사단이 구성됐다.²⁵⁾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이런 좌파세력의 움직임을 배후에서 주도해 갔다. 그리고 3월 7일 각 읍·면 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란 장문의 제10차 지령서를 내려보냈다. 이 지령서의 주요 내용은

- 지난 3월 1일 제주읍에서 일어난 발포살해사건에 대하여 제주도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주읍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연석회의에서 대정면의 건의문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동시에 ‘당 투위’를 구성하고 이 투위가 전체적 3·1사건 대책 투쟁을 지도하기로 되었음.
- 투쟁방침으로는 ① 3·1 투쟁방침의 연장으로서 당의 영웅적 대중투쟁을 위한 합법 전취 ② 미제 및 반동 진영의 약체화에 대한 결정적 최후적 투쟁 ③ 제2혁명단계의 대중적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정치적 사상적 무력적 준비.
- 조직활동은 도·면위에서는 당내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투쟁위원회’를,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면·리·구에 구성할 것.
- 파업단에서는 다음의 요구조건과 성명서 1통은 미 지방장관에게, 1통은 중앙 장관에게, 1통은 각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 요구조건은 ① 발포책임자 강동효 및 발포한 경관을 살인죄로써 즉시 처형하라 ② 경찰관계의 수뇌부는 즉시 책임 해임하라 ③ 피살당한 동포의 유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피상자에게 충분한 치료비와 위로금을 즉시 지불하라 ④ 3·1사건에 관련되어 피검된 인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하라 ⑤ 경관의 무장을 즉시 해제하라 ⑥ 경찰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즉시 축출하라.²⁶⁾

이런 방침에 따라 3월 5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간부 수십 명이 제주읍 삼도리 김행백²⁷⁾씨의 집에 모여 ‘제주도 3·1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25)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

26)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장간호, 실천문화사, 1991, 189~195..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관·민 총파업을 주도했으며,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하고 도내 전 기관과 단체가 총파업을 하였고, 총파업은 3월 말로 진정되기 시작했는데, 4월 10일까지 5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중 260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훈방되었다.

제주4·3사건은 3·1불법시위사건 다음 한달 후가 아니라 13개월 후인 1948년에 사건이 발발했다. 3·1시위사건을 4·3의 원인으로 보기에 현저한 차가 있다. 그리고 3·1기념식의 발포 사건은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정읍·순천·영암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끼리 충돌, 또는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1947년의 3·1기념식은 전국에서 좌우익이 따로 행사를 열었고, 가두시위를 벌이다 서로 충돌하며 경찰의 발포가 있었다. 3·1기념식의 발포로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사망자 16명, 부상자 22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제주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사망 6명, 부상 6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이다.

3·1시위발포는 당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이 충돌하는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3·1시위발포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만 폭동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3·1기념식의 목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촉구를 위한 투쟁이었고 4·3무장폭동의 목표는 한 달여 후에 있을 5·10제헌의원선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대중의 저력을 응집하여 투쟁력을 강화하였다. 표면상으로는 3·1시위발포 사건으로 야기된 도민의 순수한 저항이 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들 주장하지만, 그러한 불상사가 아니었더라도 남로당제주도위원회는 3·1시위를 계기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세력 확장을 도모하여 언젠가는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다.²⁷⁾

(나) 관·민 총파업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관·민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근

27) 제주읍 칠성동에 있는 중앙이발관 주인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선전부장이었고, 4·3사건이 발발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목표로 피신하였다 한다.

28) 현길연.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경기 : 백년동안, 2014), p.32.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로자, 각급 학교,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 등 공무원과 회사원, 노동자, 교사, 학생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경찰의 3·1 시위 발포와 그 대응에 항의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지만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 파업단체 대표들은 3월 11일 회동, 파업의 효과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연합적인 전선을 펴기로 하고 ‘제주읍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고예구)를 구성했다.²⁹⁾ 파업은 제주읍 뿐만 아니라 삼시간에 각 면으로 퍼졌다.

(다) 검거 선풍

3월 10일부터 시작된 제주도 총파업은 3월 20일 전후해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의 지시로 3월 15일부터 파업단 관련자 검거에 나선 경찰당국은 단속 첫날 3·1절 기념행사를 주도한 김두훈·고창무 등 제주 민전 간부들을 구속하는 것을 시발로 파업 중이던 직장의 간부들을 속속 연행 조사하기 시작했다.

(라)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

3·1사건 이후 지역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1947년 3월 우도와 중문리사건을 시발로 6월 종달리사건, 8월 북촌리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우도사건’은 1947년 3월 14일 우도의 민주애국청년동맹원들이 대중시위를 감행한 후, 우도경찰관과견소의 간판을 파괴 소각한 사건이다.

‘중문리사건’은 1947년 3월 17일 시위군중에게 응원경찰이 발포, 주민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1947년 3월 17일 오전 11시 중문면사무소 소재지 중문리 향사에서 지역주민들이 3·1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하자 오후 1시께 중문지서로 몰려갔다. 시위행렬이 지서 앞에 이르자 경찰 지휘관은 해산명령을 내렸다. 여러 차례 해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발포했다.³⁰⁾ 이 발포로 지역주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³¹⁾

구좌읍 ‘종달리사건’은 1947년 6월 6일 조선민주청년애국동맹의 불법

29) 『제주신보』, 1947년 3월 12일·3월 14일.

30) 『제주신보』, 1947년 3월 24일.

31)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제주 :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p. 80.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오히려 집회 참석 청년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날 밤 8시를 전후해 구좌면 종달리 바닷가에서는 마을 청년 2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민애청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미군정은 5월 16일 행정명령으로 민애청을 해산했는데, 중앙 민애청에서는 5월 21일부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5일 합법단체로 민애청을 조직, 군정청에 등록했다. 종달리 민애청은 이런 과도기에 민애청의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런 집회 개최 정보를 입수한 세화지서 소속 김순영, 황종욱, 최한수 경찰관 3명은 단속차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 집회 참석자들이 동요하자 종달리 민애청 부위원장인 부옥만이 나서서 “우리가 잘못된 일이 없으니 도망칠 이유가 없다”면서 민애청 청년들을 선동했다. 곧이어 좌익 민애청 청년들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됐고, 수세에 몰린 경찰관들이 급한 김에 바다에 뛰어 들었다. 부옥만은 해초를 끊어 모으는 갈고리가 달린 장대로 경찰관들의 체복 옆구리를 걸고 잡아당겼다. 결국 실신상태의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소지했던 포승줄에 묶이고 말았다.³²⁾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마차에 실려 세화지서로 옮겨졌다. 경찰은 곧 비상을 걸었다. 경찰당국은 6월 16일 종달리사건 관련 71명을 수배하고 수배자 71명 중 42명이 검거돼 재판에 회부됐다.³³⁾

‘북촌리사건’은 1947년 8월 13일 조천면 북촌리에서 불법 삐라를 단속하던 경찰관과 지역주민들이 충돌, 쌍방의 부상자를 낸 사건이다. 광복절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순찰 도중 북촌리에서 삐라를 붙이던 사람들이 달아나자 뒤쫓으면서 총격을 가했다. 이 발포로 10대 소녀 장운수를 비롯해 여자 2명과 남자 1명 등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에 흥분한 한 소녀가 사이렌을 울려 마을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경찰과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때마침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김병택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붙잡혀 집단폭행을 당했다.

북촌 주민들은 이에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지 마을에서 3km 가량 떨어진 함덕지서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였다.³⁴⁾ 함덕지서에서는 지서 지

32)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서울 : 전예원, 1994), p. 446

33) 『제주신보』, 1947년 6월 26일.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붕에 기관총을 장착, 공포를 쏘면서 시위군중들을 해산시켰다.

한편 이 무렵 전국적으로 뼈라 부착운동이 전개됐는데, 특히 제주도가 심했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17일부터 미·소 공동위원회가 속개되자 이 기간에는 정치적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3호를 발포했다. 이를 전후해서 제주도에서 마을마다 뼈라 부착과 무허가 집회가 성행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마) 우익진영 강화

제2차 미·소 공위가 결렬되고 1947년 9월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 서방진영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입된 유엔에 상정되면서 제주도에서 1947년 9월부터 우파청년단체의 조직 강화가 두드러졌다. 4·3사건의 발발배경과 진행과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대동청년단과 서북청년회 제주조직이 바로 이 시기에 발족됐다. 또한 광복군 출신 이범석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 제주도단부도 창립됐다.

대동청년단 제주조직은 각 지방으로 확산, '4·3' 사건 발발 당시에는 경찰지서에서 단원들이 철야근무를 하는 등 남로당반란군들을 진압하는데 경찰에게 많은 협조를 하였다.

3. 4·3사건의 발발과 미 군정의 대응

가. 제주도의 2월 폭동

한반도 문제를 상정한 유엔 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결의는 한국 국민 대표들을 선거로써 뽑되 공정한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하며, 선거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거 후 가급적 빨리 국회를 구성,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투쟁'이었다. 남로당은 이때 9개항의 투쟁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제주 :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6), p. 82.

1.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한국위원단을 반대한다.
2.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3.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인에 맡겨라
4. 국제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김성수 등 친일파를 타도하라
5. 노동자, 사무원을 보호하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를 즉시 실시하라.
6. 노동임금을 배로 올려라.
7.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8.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³⁵⁾

한편 2월 7일 제주도는 경찰의 비상경계 속에 의외로 조용했다. 그러나 2월 8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사계리 경찰관 린치사건은 1948년 2월 9일 일어났다. 안덕면 사계리 청년들은 이날 향사에 모여 남한 단독선거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마을 안에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급습하게 된 것이었다. 청년들은 경찰관들을 향사로 끌고가 마을에 머물게 된 경위와 밀고자를 대라고 추궁했다. 청년들은 3·1사건 이래 마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정보가 누설되고 있다고 보고 내통자를 찾는 데 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못매를 맞던 경찰관들은 뒤늦게 출동한 경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³⁶⁾

한경면 저지서 습격사건도 2월 9일 발생하였다. 당시 지서에는 지서주임 등 4명이 근무중이었는데 4개 마을 민애청 청년 150여명이 어두워질 무렵에 몰려와 무단 시위를 벌였다³⁷⁾. 이에 지서주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부하 직원들에게 총기를 감추고 일시 몸을 피하라고 하였다. 이에 저지서는 곧 불을 소등하고 굳게 잠겨졌다. 민애청 시위 청년들은 지서를 향하여 고함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서의 유리창이 깨어졌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시위 청년들은 힘이 지쳤는지 한 몽치의 남로당 선전 뼈라를 뿌리고 훌

35) 대검찰청 공안부, 『좌익사건실록 제1권』, 1965, 372쪽.

36)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543~544쪽.

37)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서울 : 아성사, 2013), p. 111.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어졌다. 경찰은 다음날에 주모자급 20여명을 체포하여 그중 일부를 송치하였다.

고산지서 발포사건은 2월 10일 시위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발포, 주민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음력 설날인 이날 한림면 고산리 민애청 청년 100여 명은 마을을 돌며 ‘왓샤 시위’를 한 뒤, 지서 앞으로 몰려왔다. 이때 지서 안에는 경찰관 3명뿐이었다. 경찰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겨누며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청년들이 응하지 않자 발포, 마을 청년의 다리에 총상을 입혔다. 이 한 발의 발포로 군중들은 흩어졌다. 나중에 시위 주모자 10여 명이 검거됐다.³⁸⁾

나. 남로당제주도당의 무장투쟁 결정과 준비

1) 신촌 1·22와 애월 1·26 검거사건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① 1월 22일 새벽 3시 경찰이 남로당 조천지부 불법집회장을 급습, 106명을 체포한 것을 시발로 1월 26일까지 모두 221명을 검거했고 ②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는 내용의 문건 등을 압수했으며 ③ 연행자중 남로당원 63명을 방면했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도 남로당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주한미군 971 방첩대 보고서에는 압수된 문서 중에 유엔 위원단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³⁹⁾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이하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약칭)는 1947년부터 대규모 세력확장을 시도하면서도 당원들을 비밀리에 관리했다. 특히 3·1사건 이후 몇 차례 검거선봉이 불어닥치면서 철저한 점조직으로 당원들을 관리했다. 당시 미군정이나 경찰 측에서는 남로당 제주도 조직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계보나 당원 범위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비밀의 베일에 가려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체계가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1948년 1월 중순께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김생민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런 정보를 토

38) 양순봉(81세, 제주시 일도2동, 당시 고산지서 주임, 2002. 1. 23. 체록) 증언; 『제주신보』, 1948년 2월 14일.

39) 나중삼, 제주4·3사건의 진상.(서울 : 아성사, 2013), p. 284.

대로 1월 22일 조천면 신촌리를 급습한 것이다. 신촌리는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의 핵심인 조직부 아지트가 있었다. 조직부장은 바로 김달삼이었다. 이때 붙잡힌 이덕구는 심한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조직부 연락책의 전향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1·22 검거사건 이후에 전도적으로 경찰의 남로당 간부 검거작업은 지속되었다. 한편 비밀회의장이 경찰의 급습을 받아 많은 남로당원들이 연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안세훈은 연행자들의 구출 방법으로 시위, 석방공작, 경찰서 공격 등의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월 26일 밤에 북제주 애월면 애월리에서 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1947년에 중문리 강정리 남로당 세포책 김석천을 체포한 바 있어 이를 통하여 비밀회의 정보를 얻고 경찰은 트럭 4대에 경찰을 가득 싣고 애월리로 출동하였다. 은밀히 마을에 도착한 경찰은 신속히 길목을 장막하고 포위망을 좁히다가 일시에 회의장을 덮쳤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안세훈, 조몽구, 김달삼 등의 거물급들과 11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⁴⁰⁾ 연행도중 4·3폭동 반란의 핵심인 김달삼과 조몽구는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호송차가 관덕정 부근을 지나갈 때 경찰의 감시가 허술함을 알아채고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김달삼은 짧은 혈기로 죽자살자 뛰어 도망쳤고, 조몽구⁴¹⁾는 칠성통에 있는 금강약국에 일단 숨었다가 도망을 쳐 경찰을 따 돌렸다. 일설에는 김달삼은 일본 성봉중학교에서 배운 유도기술(유도 2단)로 경찰관을 엮어 눕혔다는 설과 호송 경찰관이 프락치가 아니었나하는 말도 전해져 온다.

제주도 남로당 조직을 전면으로 노출시킨 이 검거선풍의 사후처리는 흐지부지됐다. 폭동음모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데다, 1948년 3월에 이르자 5·10선거를 앞둔 미군정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요청⁴²⁾을 받아들여 정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사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남로당 거물급 인사들도 ‘4·3’발발 이전에

40) 나중삼. 제주4·3사건의 진상.(서울 : 아성사, 2013), p. 109.

41) 칠성통 금강약방에 잠시 피신하였던 조몽구는 남로당의 직장세포가 강했던 측후소에 숨어 살았다.

42)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분위기에서 선거 실시하라는 요청.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모두 석방됐다.

남로당 제주도당에게 내린 폭동지령은 상급당인 전남도당 및 중앙당의 지시였다. 이는 제주도당이 전남도당의 예하여서 중앙당의 폭동지시를 전남도당이 예하인 제주도당에게 이첩, 하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⁴³⁾ 그리고 지령문중 폭동일자가 육지부에서처럼 2월 7일이 아니라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 라고 융통성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폭동의 장기화를 목표로 삼은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가능케한 부분이다. 2·7폭동이 제주도에서는 육지보다 비교적 조용했던 것은 1월 22일과 26일 등 폭동을 위한 비밀회의현장을 경찰이 2차례나 급습하여 남로당 핵심당원 220여명을 구속한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제주4·3사건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 내부에서 무장투쟁이 결정된 것은 1948년 2월 신춘회의에서 였다고 한다.⁴⁴⁾ 제주도당은 당면문제 해결 등 진로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주도당과 제주읍당 간부 및 면당책임자 등 주요 간부만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2월 초순경부터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한 보름동안 구좌면과 조천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나 개최되었으며, 최종회의는 1948년 2월 20일경 신춘에서 열렸다.

무장폭동 결행방침은 1948년 3월 15일께 전남 도당 조직지도원(오르그)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로당 제주도당상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⁴⁵⁾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 반동 경찰을 위시한 서청, 대청의 작년 3·1 및 3·10 투쟁 후의 잔인무도한 탄압으로 인한 인민의 무조건 대량검거, 구타, 고문 등이 금년 1월의 신춘사건을 전후하여 고문치사 사건의 연발로써 인민 토벌 학살 정책으로 발전 강화하자 정치적으로 단선·단정 반대, 유엔 조위(朝委)격퇴 투쟁과 연결되어 인민의 피 흘리는 투쟁을 징조하게 되었다.

3·1 투쟁에 있어서의 각급 선전 행동대의 활동은 그후의 자위대 조직의 기초가 되었으며 3·1투

43)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서울 : 아성사, 2013), p. 110.

44)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163쪽.

45) 이 유격대보고서는 이덕구가 1949년 6월 7일 화북지서에서 출동한 서북청년단 출신의 김영주 경사와 모두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대원 10명, 젊은 민보단원 10명에게 포위되어 이때 이덕구의 호위병 양생들을 생포하는 과정에 권총 1정과 탄알 수발을 노획하면서 문창송 경위(제주경찰서 화북지서 주임)는 이 호위병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진실을 밝히는 귀중한 문서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압수하였다.

쟁 직후 도당의 지시에 의하여 각 면에 조직부 직속 자위대를 조직하게 되었으나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사태가 더욱 악화됨을 간취한 도상위는 3월 15일경 도(道)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진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하였다.⁴⁶⁾

이것으로 보아 결국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은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1)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제주4·3사건 지령

제주4·3 무장반격전을 최종 결정한 소위 신춘회의에 참석했던 이삼룡의 '당시 중앙당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다. 오 르그는 늘 왔으며 김두봉의 집이 본거지였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정부보고서나 진보좌과학자들은 4·3을 일으키라는 중앙당 지령설을 전면 부인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련의 위성국화 전략과 북한 정권 수립과정에 대한 러시아측 자료를 비롯해서 4·3관련 자료는 북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굴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당 및 전남도당 지령이 있었다는 근거는 분명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지령'이 남로당 전남도당이 이첩·하달한 지령문⁴⁷⁾으로 보인다.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켜라. 경찰간부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무기를 노획하라. 총선거와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폭동 지령문은 2·7폭동과 관련하여 제주도당에 내린 지령문으로 1948년 1월 22일 조천에서 열린 남로당제주도당위원회의 비밀모임에서 경찰이 입수한 내용이다. 또 2월 12일 남로당제주도당위원회 본부를 급습해 "194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계속하여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령문을 압수하였다.⁴⁸⁾

폭동지령문이 1월 22일과 2월 12일 등 2회 압수된 것으로 보면 남로당중앙당은 전남도당 이첩 폭동지령을 2회 문건으로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⁹⁾

46)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1995, 16~17쪽).

47) 7[미국자료편 ①]1948.2.5.~1948.2.6(No. 제주43사건자료집752, 1948. 2. 6. 보고). p.50.

48) 6th Infantry Division, USAFIK, G-2 Periodic Report,1948.2.12~13(No847)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2) 제14연대 조사과장 김안일⁵⁰⁾ 소령과 빈철현 대위의 증언

구두지령은 남로당 중앙당의 김삼룡과 이주하, 남로당 군 특수부장 이재복은 전남도당 위원장 김동백과 제주도에서 강력한 단선반대 무력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복⁵¹⁾은 전남도립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출신 조경순⁵²⁾(조천 출신 1930년 6월 21일생)의 안내를 받아 1948년 2월 중순경 제주도에서 경찰의 연행 도중 극적으로 탈출한 김달삼(남로당제주도당조직부장)을 만나

“제주도에서 단선반대투쟁만이 남로당이 사는 길이요, 제주도에서 강력히 반대투쟁을 하면 육지부 전국에서 적극 호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선을 못할 것이다⁵³⁾. 단선을 못해야지. 단선을 하게 되면 남쪽에 반공국가가 탄생하게 되어 남로당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주요 지시내용이었다고 한다. 김달삼이 이재복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시점이 신춘회의 앞전인 2월 중순으로 추정된다.



그림 7. 남로당 마을 자위대가 파손한 도로 현장을 경찰관이 조사하고 있다(1948. 5)

49)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p.536 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50) 육사 2기. 1949년 숙군 수사를 총괄하는 육본 정보국, 특무과장이었다. 김지회의 처 조경순을 직접 심문하였다.

51) 1948년 당시 46세. 원래 목사. 평양 신학전문대학 졸업 후 일본 동지사대 신학부를 나와 경북지방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사회주의자가 된 그는 해방 뒤 경북 도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을 거쳐 남로당에 입당하여 남로당 군사부 총책이었다.

52) 14연대 반란 주동자 김지회 중위(육사 3기, 군번 10505)의 약혼녀

53) 이선교 백운교회 담임 목사. 이선교는 여수·순천 반란사건 조사반장로서 김지회의 약혼녀 조경순 등을 신문하였던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의 빈철현 대위(양구 거주.1999년 작고), 육본 정보국 특무과장 김안일 소령(의왕시 거주. 2014년 작고) 등을 면담하였는데 빈철현 자택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3)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의 4월 3일의 무장폭동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올랐는데, 이는 무장공격을 계획대로 개시하라는 남로당제주도당의 신호였다.

이 봉화를 시작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400여 명의 인민유격대는 지방에 있는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공격하여 경찰 및 우익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경찰무기를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절단하고, 도로상에 돌무더기를 쌓거나 웅덩이를 만들어서 경찰의 통신을 차단하고, 경찰기동대의 차량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날 남로당측은 제1구 경찰서(제주경찰서) 관내의 삼양, 함덕, 세화, 신업, 애월, 외도, 조천, 한림, 화북지서와 제2구 경찰서(서귀포경찰서) 관내의 남원, 대정, 성산지서 등 12개 경찰지서 공격에 성공하였고, 저지지서와 모슬포지서 등 2개 지서는 공격이 실패하였다.

그런데 이 날 제주읍에 있는 경찰의 중추인 감찰청과 제1구경찰서를 분쇄하는 임무가 주어진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출동하지 않아 거사는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장교프락치인 제9연대 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비대 동원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거사 전날에 도당총책이 차량 5대를 이끌고 모슬포의 9연대에 가서 하사관 프락치인 고승옥 상사와 문덕오 상사를 찾았으나 그들은 영창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9연대 동원은 성사되지 못했다⁵⁴).

만약 계획대로 남로당프락치 9연대가 이 날 동원되었다면 제주읍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이 남로당제주도당의 통제 하에 들어갔을 것이고, 여·순 반란 때처럼 우익 주민에 대한 남로당의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제주전역이 남로당제주도당의 해방구가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남로당제주도당은 4.3사건을 일으키면서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통일독립, 반미구국투쟁을 기치로 내

54) 1948년 4월 2일. 이 날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로당 전남도당은 10월 19일 여·순반란을 일으킬 시 제14연대에 침투시킨 하사관 프락치에게만 반란 지시를 하였고, 하사관 프락치는 장교프락치에게 알리지 않고 하사관 조직만으로 병력을 동원하면서 반대하는 장교들과 하사관들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그리고 반란이 성공한 후인 다음날에서야 하사관프락치들은 장교프락치들에게 반란군의 지휘권을 인계한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세웠으며, 슬로건, 경찰에 보내는 경고문, 시민 동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포고령 등을 뿌렸다. 슬로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인민공화국 절대 사수.
- 5·10 단선단정 반대, 군정수립음모 분쇄.
- 미 점령군 즉시 철퇴.
- 경찰의 일체의 무장해제.
- 응원경찰대의 전면 철수.
- 인민유격대의 합법화.

이들이 내 세운 슬로건은 5·10 총선거를 하지 말고, 미군을 철수시키며, 경찰은 무장해제하고, 인민유격대를 합법화 하며 조선인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남한에 정부를 세우지 말고 북한에 흡수 통일하자는 정치적 주장이어서 미군정이나 우익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포고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제주4.3사건 때 제1구경찰서 소속 함덕지서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서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 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서 유

엔조선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에 철폐시켜 외국
의 간섭 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이 포고령의 내용은 한 마디로 반란을 의미하고 있었다.

4월 3일의 첫 공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
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인민항쟁가와 적기가 또는 소련 국가를 부르면서
행진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한라산 깊은 숲 속으로 몸을 감췄다.

이들은 경찰이 무력해지자 다음날에도 지서 습격, 경찰관 및 우익인
사 테러, 전신주 및 도로 절단, 왓샤 시위 등을 계속했으며, 때로는 경
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제주읍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
이 밤에는 인민유격대의 세상이 되고, 낮에는 군경 측 세상이 되었으
며, 경찰력이 못 미치는 중산간 지대는 낮에도 인민유격대 측 세상이
되었다. 인민유격대측은 주로 야간에 우익인사는 물론 비협조적인 인
사들을 납치하여 살해하였는데, 인민유격대 내부분건에 나와 있는 4월
3일부터 7월 중순까지의 주요 전과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서 습격 : 31개소 / 소각 : 6 / 파괴 : 3

경찰관 살해 : 56명 / 부상 : 23 / 가족 사망 : 7

반동(우익)살해 : 223명 / 부상 : 28 / 가족사망 : 12

무기(소총) 노획 : 25정 / 공기총 : 1 / 일본도 : 4

전선 절단 : 940개소 / 도로파괴 : 170 / 교량파괴 : 3

우익인사 살해 223명중에는 독립 운동가이며 제주도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목사는 일제 강점기 16년 동안에 10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등 목회활동을 맹렬히 하였고, 1948년 6월 16
일 복음전파활동을 하다가 귀가 중 산길에서 인민유격대에 붙잡혀 생
매장 당하였다.

라. 남로당제주도당 및 인민유격대 조직 및 편성

(1)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무장대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 시기별로 그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즉 무장봉기가 시작되기 전 고문치사 사건 등이 벌어지자 각 면리(面里)에 자위대가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대중적인 열망과 원호의 토대 위에서 한라산 등 산악과 밀림지대 등 각 지구에 유격대가 편성됐다는 것이다.⁵⁵⁾ 이 책자는 이어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에는 “무장대를 일층 강화 발전키 위해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에서 열렬한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인민유격대(속칭 인민군)’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그의 기동성과 민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하였다”면서

“△제1연대=조천·제주·구좌면-3·1지대(이덕구)

△제2연대=애월·한림·대정·안덕·중문면-2·7지대(김봉천)

△제3연대=서귀·남원·성산·표선면-4·3지대(?)”로 연대 구분을 하였다.

이밖에 독립대로서 경찰임무를 하는 특공대, ‘반동’들의 동정과 지방자위대의 폐단을 감시하는 특경대가 조직되었고, 유격대의 사상교육을 위한 정치소조원을 각 대와 소부대에 배속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민유격대 재편성과 함께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가일층 주동성을 갖고 활발하게 전개키 위하여 각 읍·면과 행정단위로 강력한 자위대(10명)도 조직하였다”고 밝혔다.⁵⁶⁾

복잡하게 소개된 무장대 구성을 무장봉기 직후 시점에서 정리하면, △ 본격적으로 입산해 활동을 하는 정예의 ‘인민유격대’(각 면에서 30명씩) △ 각 행정단위에서 활동하는 ‘자위대’(10명) △ 경찰 임무를 하는 ‘특공대’ △ 각 지방 상황을 감시하는 ‘특경대’ △ 유격대 사상교육을 하는 ‘정치 소조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도 당부 간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도 당부’책임=안요검, 조몽구, 김유환, 강기찬, 김용관

△ ‘도당 군사부’책임=김달삼(본명 이승진), 김대진, 이덕구

△ 총무부=이좌구, 김두봉

△ 조직부=이종우, 고칠중, 김민생, 김양근

△ 농민부=김완배

△ 경리부=현복유

55) 김봉현·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대판 : 문우사, 1963), pp. 77~81.

56) 상계서, pp. 88~89.

△ 선전부=김은한, 김석환

△ 보급부=김귀한

△ 정보부=김대진

△ 부인부=고진희⁵⁷⁾

도 당부 책임자나 군사부 책임자가 여러 명인 것을 보면, 위 조직표는 어느 한 시점의 것이라기 보다는 시기별 책임자 전부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⁵⁸⁾

한편 남로당인민유격대 노획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시기별로 조직과 병력, 그리고 무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데 내용을 보면

- 조직체계 : 10인으로 1개 소대, 2개 소대로 1개 중대, 2개 중대로 1개 대대
- 조직 : 유격대(제주읍, 조천·애월·한림·대정·중문·남원·표선면 등 8개 면에 조직. 구좌·성산·서귀·안덕·추자면 등 5개 면은 제외). 특경대(도 군사위원회 직속)

- 인원수 : 320명(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 병기 : 99식 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다이너마이트) 25발, 연막탄 7발, 나머지는 죽창

△ 제1차 조직 정비(무장봉기 직후)

- 병력 정비 : 유격대를 250명으로 정리(이는 첫 무장봉기 때 톱 부대인 유격대와 후속부대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한 이후 함께 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있어 혼란이 있고 보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 강화한 것)하였다가 재차 병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 400명 정도로 확충

△ 제2차 조직 정비(5·10선거 직전)

- 동기 : 엄격한 규율과 치밀한 기밀확보 그리고 신속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상의 필요에 의해 각 면 투쟁위원회 군사부 직속의 각 유격대를 도 사령부 직속으로 편성
- 체계상의 정비 : 1개 분대 3명, 3개 분대로 1개 소대(10명), 2개 소대로 1개 중대(23명), 2개 중대로 1개 대대(49명), 2개 대대로 1개 연대(110명)
- 병력 : 3개 연대로서 370명(特務部 20명 포함). 특경(特警)을 해체해 사령부 각 부문에 전원 배치

57) 상계서, pp. 89.

58) 이덕구의 호위병 양생들을 생포하는 과정에 권총 1정과 탄알 수발을 노획하면서 문창송 경위(제주경찰서 화북지서 주임)는 이 호위병으로부터 제주4.3사건 진실을 밝히는 귀중한 문서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압수하였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 제3차 조직 정비(5월 말일)

- 동기 : 국방경비대의 대량 입도(4,000명)와 그의 포위 토벌전이 전개되자 충돌 회피와 비합법 태세 강화의 필요상 인원을 대량 감소 정리
- 체계상의 정비 : 1개 분대 5명, 3개 분대로 1개 소대(16명·이 중 제3분대는 취사분대)
- 인원 정리 : 370명을 240명으로 정리

△ 제4차 조직 정비(6월 18일 착수)

- 동기 : 새로운 투쟁에 대비해 조직의 시급한 정비·강화의 필요성
- 체계상의 정비 : (관독 불능)
- 병력 : 3개 소대로 1개 지대(支隊) 편성. 1개 지대 인원수는 60명. 총 4개 지대 합계 240명에 도사령부 26명으로 총계 266명

△ 제5차 조직 정비(7월 15일 정비 완료)

- 인원수 : 501명(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
- 병기 : 소총 147정(M1 6정, 카빈 19정, 99식 117정, 44식 4정, 30년식 2정), 소총 탄환 7,740발(M1 1,396발, 카빈 1,912발, 99식 3,711발, 44 식·30년식 721발), 경기관총(일본제) 1정, 척탄통(擲彈筒) 2문(탄환 8발), 수류탄 43발, 다이너마이트 69발, 신호탄 2개, 군도(軍刀) 16정, 권총 8정(6연발 1정, 8연발 6정, 10연발 1정). 탄환 합계 119발, 기타 라이깅 103발, 지뢰 라이깅 8발, 야포탄환 4발
- 주의 : * 각급 정치부원은 상급 정치원 소속. 최상급 정치부원은 도당책 소속
 - * 특무대(特務隊)는 지대(支隊) 정보과 소속(임무는 정보수집, 개인 테러, 군 활동에 호응 보급의 원조 등. 조직은 각 면에 특무대장 1명과 연락원 수 명을 두며 그 외에 3인 1분대, 1소대(10명)로 하고 1개 부락에 1~2명 정도로 조직하되 특무대원은 세포로부터 제외한다.
 - * 사령부 및 지대를 사령관(지대장)과 정치부원과 작전참모(작전교육과책)의 3인으로써 최고지도부 구성
 - * 각 지대 중 특무대는 각 면, 각 부락에 주둔하되 지대 지도부 통신대 각 유격대 소대는 지대 지도부 중심으로 밀집 생활함.⁵⁹⁾

59)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헌진 4.3의 진상.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제주 : 대림인쇄사, 1995), pp. 17~29.

이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의 투쟁보고서를 보면 소위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이라 불리는 인민유격대의 조직과 무기력을 매우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미군정의 대응

(1)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미군정은 무장봉기가 발생하자 4월 5일 아침 전남 경찰 약 100명을 응원대로 편성해 급파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사령관으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를 파견하였다.⁶⁰⁾ 미군정은 또한 제주도 도령(道令)을 공포하여 타 지역과의 해상교통을 일체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였다.⁶¹⁾ 이어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2차로 파견해 경찰력을 더욱 강화했다.⁶²⁾ 또 서청 단원들도 증파되었다.

4.3사건 발발 보고를 받은 조병옥 경무부장은 당일로 전남경찰 100명을 제주도에 급파했고, 4월 10일에는 경찰간부후보생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으며, 반공의식이 강한 서청단원들도 급파하였고,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경찰력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력을 강화해도 제주도에서 연일 소요사태가 계속되자 미 군정장관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4월 16일 경비대 투입을 지시했다.

이에 부산의 제5연대 제2대대가 제주도에 출동하였는데 4월 19일 밤에 진해를 출발하여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한편, 미 군정장관은 제주도 59군정중대장 겸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제주도의 9연대 1개 대대와 증파되는 5연대의 1개 대대도 귀관의 지휘하에 둔다고 하면서 “대규모의 공격 전에 소요집단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 군정은 경찰력만으로는 사태수습이 안되므로 제주도의 9연대 1개 대대와 5연대 1개 대대 등 2개 대대로 사태를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60) 『독립신보』, 1948년 4월 7일 ; 『제주신보』, 1948년 4월 10일.

61) 『조선일보』, 1948년 4월 17일.

62) 『동광신문』, 1948년 4월 13일.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5연대 2대대장은 오일균⁶³⁾ 소령으로서 경비대에 침투한 골수 공산주의자였다. 오일균 소령은 제주도에 도착한 후 부하들 정신교육에만 몰두하면서 출동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정신교육의 개요는 “경찰이 나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유격대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경비대는 중립을 지키자”라는 것이었다.

제9연대도 출동명령을 받았으나 간부들 분위기는 “이번 사건은 경찰과 유격대와의 관계이며, 경비대와는 관계가 없다. 경찰녀석들 혼쭐 나 보라”고 하는 등 대체로 출동반대였는데, 3중대장 문상길 중위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당시는 경찰과 경비대는 서로 상대를 얹잡아 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한편,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증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9연대 프락치인 문상길 중위는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⁶⁴⁾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 대책을 논의했는데, 정보교환, 무기공급, 탈영병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국방경비대의 4·3사건 폭동의 합류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2) 키순공작 실패와 제9연대장 교체 및 제11연대 증파

딘 미군정장관이 “대규모의 공격 전에 소요지단 지도자와 접촉해서 항복할 기회를 주라”는 지시에 따라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인민유격대장 김달삼과의 접촉에 나섰으며, 벽보, 전단지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시도 끝에 유격대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4월 30일 12시 대정면 구억리 초등학교에서 두 사람이 대면하고 협상을 하였는데, 공산유격대측은 내부분건에 의하면 “경비대측의 협상제의를 교묘히 이용하면 경비대의 유격대 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협상을 수락했다”고 했다.

김익렬의 유고에 의하면 김익렬은 ①인민유격대의 완전 무장해제 ②살인, 방화, 강간범의 자수 ③인민유격대 간부 구금 등 3개항을 요구했고, 김달삼은 ①단정반대 ②제주도민의 자유보장 ③경찰의 무장해제 ④고급관리의 전면 경질 ⑤고급관리중 뇌물 받은 자 처벌 ⑥청년단체의 산간부락 출입금지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사항에 관하여

63) 오일균 소령은 군에 침투한 남로당의 핵심분자로 4.3 사건 진압 차 부산 5연대 휘하 제2대대를 제주 9연대로 편성할 때 대대장으로 파견된 자였다.

64) 김달삼은 대정초급중학교 축탁 교사였으며, 제9연대와 대정중학은 일본군 병영이었던 곳을 나누어 쓰고 있었으므로 김달삼과 문상길은 평소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김익렬이 제시한 경비대측의 3개 요구사항은 대체로 합의를 보았으나 김달삼이 제시한 유격대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김익렬은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구호를 알려주고 경비대 관련 이외의 사항은 행정관리들에게 잘 주선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북한측 문헌에는 ①단선단정 반대 ②경찰 무장해제와 토벌대 즉시 철수 ③반동 테러단체 즉시 해산과 서청단 즉시 철거 ④피검자 즉시 석방과 비법적인 검거, 투옥, 학살 즉시 중지 등에 합의하였다고 기록하였음)

회담을 마치고 복귀한 김익렬은 협상결과를 미군측에 보고했는데, 미군정은 김익렬이 가지고 온 협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군정은 단선단정 중지, 경찰의 무장해제, 고급관리의 전면 경질, 토벌대와 서청 등을 철수시키라는 유격대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5월 3일에 귀순자 총격사건이 일어나고 5월 6일에는 협상 당사자인 김익렬 중령이 제9연대장직에서 해임되므로서 귀순협상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5월 5일 이날 밤, 통위부⁶⁵⁾ 야간회의에서는 제주도 병력증파문제와 제9연대장 교체문제가 논의 끝에 결정되었다. 증파부대로는 5월 1일부로 갓 창설된 제11연대가 결정되었고, 제9연대장으로는 박진경 중령이 선발되었다. 한편, 제9연대장으로 명령받은 박진경 중령은 5월 6일 아침, 항공편으로 제주도로 가서 김익렬 중령과 교대하였고, 동일부로 9연대 1대대장에 임명된 임부택 대위를 공석중인 연대 작전과장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의 인사이동 내용이 군에 침투한 프락치에 의해 즉시 남로당 중앙당에 알려졌고, 남로당은 당일로 올구(지도원)을 제주도에 보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5월 7일에 선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지도원은 남로당제주도당 대표와 경비대에 침투한 프락치 대표 간에 회합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남로당측에서 군책 김달삼과 조직책 김양근이, 경비대 프락치로는 5연대의 대대장 오일균 소령과 9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가 5월 10일 회합을 하였으며, ①상호 긴밀히 협조

65)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군정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라고도 한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②신임 박진경 연대장 등 반동장교들 숙청 ③정보교환과 무기 공급 및 탈출병 적극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바. 남로당의 5·10총선거 방해

(1) 선관위원·선거사무소 피습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상황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전국적으로 5·10선거 반대자들에 의한 경찰서·선거사무소 습격이 줄을 이었다.

특히 제주에서는 ‘단선·단정 반대’가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킨 무장대의 주요 슬로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미군정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 제주 사태를 조기에 진압해 당면 현안인 5·10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선거를 앞두고 △경비대 9연대장의 교체 △경비대 병력 증강 △응원경찰 파견 △향보단 조직·배치 △군정 수뇌부의 현지 시찰 등의 대책을 세워갔다. 그러나 최종 선거인 등록 결과 제주도 등록률은 64.9%로 전국 평균 91.7%에 훨씬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관리사무소가 습격을 당하거나 선관위원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4월 중순경에 이르자 선거사무소 습격 사건이 시작됐다. 4월 18일 새벽 제주읍 도평리 투표소가 피습 당해 선거기록을 빼앗겼고, 4월 19일에는 조천면 신촌리 투표소가 피습 당해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모든 기록물을 잃었다. 투표소 피습에 이어 선거관리위원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습격사건이 그치지 않자 중산간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은 자기 마을을 떠나 해변마을로 피난했다.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그림 9. 남로당은 조직을 통하여 마을자위대로 하여금 5·10총선거의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까지 산(오름)으로 올려보내어 선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한편 남로당제주도당은 선거를 보이코트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주민들의 산행은 5월 5일경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오름이나 숲으로 가서 머물다 선거가 끝난 후에야 마을로 돌아왔다. 그래서 선거 당일 마을에는 경찰 가족이나 대동청년단 간부, 선거관리위원 등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2) 2개 선거구 무효화

미군정은 미군과 경비대, 경찰, 향보단까지 총동원하여 선거를 독려했지만 경계가 삼엄했던 제주읍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제주도 지역은 3개 선거구의 총 유권자 85,517명 중 53,698명이 투표해 62.8%의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중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선거인수 37,040명 중 3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이 당선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총선거인수 27,560명 중 1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46.5%(총선거인수 20,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⁶⁶⁾

결국 제주도의 투표 상황은 북제주군 갑구(甲區)는 73개 투표구 중 31개 투표구, 북제주군 을구(乙區)는 61개 투표구 중 32개 투표구만 선거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국회선거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선거법 제44조에 의해 갑구의 최고득표자 양귀진과 을구의 최고득표자 양병직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고 19일 군정장관에게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한 무효 선포를 건의하였다.

이로써 제주도는 5·10선거를 거부한 남한의 유일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꼭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그림 10. 고 박진경 대령 11연대장 고별식

사.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피살사건과 경비대 개편

(1) 제11연대장 피살

1948년 5월 6일 제주 제9연대장 김익렬⁶⁷⁾ 중령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박진경 중령은 제주 부임 한달 만에 6월 1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그의 진급은 동료 장교들과 비교할 때 초고속 승진이었다고 백선엽은 자기 수기에서 말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으며 선 선무공작, 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재임기간은 1개월 13일(43일)에 불과하

66) 『조선일보』, 1948년 5월 20일.

67) 김익렬은 그의 유고에 박진경과 고향 친구이자 결혼할 때 들러리를 섰다고 밝혔다.

다. 실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이보다 더 짧다. 5월 10일(총선거일) 제주읍에서 김달삼은 오일꾼 등 양측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교환, 무기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을 암살하기로 합의⁶⁸⁾

이것은 박진경 부임 4일 만에 암살계획 결정한 것이다.

제11연대⁶⁹⁾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시내 있었던 옥성정, 그의 진급 축하연은 미군 장교와 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위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릿집 ‘옥성정’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한다.

관덕정 북쪽에 자리 잡았던 옥성정⁷⁰⁾은 당시 제주읍내에서 가장 큰 2층집 요정이었다. 1948년 6월 18일에 제11연대본부에 위치한 그의 숙소 침대에서 부하에 의해 암살되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된 제11연대본부는 당시 제주농업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젊은 고급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의 그때 나이는 28세였다. 박진경 대령의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이는 9연대 출신 문상길 중위였고, 수사 결과 그를 포함해 신상우 일등중사,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가 사형을 선고 받았고, M-1 소총으로 직접 박대령을 쏜 범인은 부산 5연대에서 파견됐던 손선호 하사로 밝혀졌고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의 한 기슭에서 총살형이 집행됐다. 박진경 연대장의 암살, 여수 14연대 반란 등을 계기로 육군본부는 남로당의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된다.



그림 11. 고 육군대령 박진경추도비

68) 문창송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제주 : 대림인쇄사, 1995), pp. 79~80.

69) 육지에서 창설된 11연대가 제주도로 진주하여 주둔하면서 9연대는 11연대로 편입된다. 박진경 대령 암살 이후 1948년 7월 11연대가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고, 이후 송요찬이 9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9연대는 전도적으로 주둔지를 넓히고 2연대로 교체되기 전까지 제주도 토벌대의 핵심이 된다.

70) 옥성정은 탐라여관으로 변하여 1960.1970년대 제주도에 영화 촬영 온 유명한 스타들이 묵었던 여관이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2) 진압부대 교체

경비대총사령부는 7월 15일자로 경비대 제9연대를 부활시키면서 연대장에 기존 11연대 부연대장인 송요찬 소령을, 부연대장에는 기존 11연대 대대장인 서종철 대위를 각각 임명했다고 하며 5월 15일 11연대에 합편됐던 9연대가 꼭 두 달만에 병력이 바뀐 채 재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 주둔군 책임자를 최경록에서 송요찬으로 바꾼 것이다.

병력 교체의 진정한 이유로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제주 상황을 확실히 정리 마무리하려는 정책이었다.

4. 남로당의 지하선거와 해주대회

가. ‘남조선 대의원’ 선거

1948년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지하선거’가 열렸다. 이는 북한의 정권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정권을 세우는데 있어 명분을 세우기 위해 ‘남북협상’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런데 남한에서 5·10선거가 치러지고 정부 수립이 임박해 오자, 제2차 연석회의가 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세워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정부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선거도 북한지역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통틀어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공개적인 선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2중 선거’를하기로 결정했다. 즉, 각 사군에서 5~7명씩 뽑힌 대표자들(1,080명)이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남한 전역을 술렁이게 했던 ‘지하선거’란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남측 대표자 1,080명을 뽑는 선거였다.

그런데 당시 4·3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백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받아 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에서의 지하선거는 주로 중산간 마을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나.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 1대 사령관 김달삼 월북

남한의 각 지역 대표 1,080명이 참가하게 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모두 1,002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1일 대회가 열렸다. 1,002명 중에는 제주도 대표도 6명(안세훈·김달삼·강규찬·이정숙·고진희·문등용)이 포함돼 있었다.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 초대사령관인 김달삼도 해주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하선거로 52,350명의 투표지를 갖고 1948년 8월에 화북포구에서 제주를 떠났다. 김달삼은 일행 4명과 함께 8월 2일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 된다. 가운데 ‘문등용’은 생소한 이름으로 아마 가명으로 보아진다.



그림 12.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참석한 김달삼을 남로당위원장 허헌이 악수로 맞고 있다.

해주대회 첫날인 8월 21일, 35명을 뽑는 주석단 선거가 있었는데 20대 중반의 김달삼이 허헌·박현영·홍명희·김원봉 등 좌파 거물들과 나란히 주석단 일원으로 뽑혔다.⁷¹⁾ 이어 8월 25일에는 남한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북한 측 대의원 212명을 뽑는 총선거와 동시에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을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하는 일이었다. 입후보자 360명이 발표된 가운데 찬반투표의 요식행위를 거치는 형식이었다. 이 때 제주도 대표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뽑혔다.⁷²⁾

김달삼은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앞서 벌어진 ‘입후보

71)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 중앙일보사, 1993), p. 381.

72) 상계서, 530~531쪽.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자에 대한 토론' 시간에 토론자로 나서 제주4·3사건에 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은 우선 박헌영에 대한 지지를 밝힌 후 무장봉기의 발발 원인과 관련,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실시에 따른 분노가 폭발해 벌어진 자연발생적인 총궐기라고 주장했다. 김달삼은 이어 5·10선거를 보이코트 한 인민유격대의 '전과' 등을 길게 설명한 후, "민주조선 완전자주독립 만세!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마쳤다.⁷³⁾

한편 인민유격대 총책이던 김달삼이 제주도를 떠남에 따라 유격대 조직은 개편되어 이에 따라 이덕구가 김달삼에 이어 인민유격대의 2대 사령관 지휘 총책으로 맡게 된다.

5.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의 진압작전

가. 신생정부의 진압방침

5·10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시급한 문제는 빨리 새로운 정부수립과 미합중국의 군정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는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식이 끝나자 다음날인 16일에는 정권이양에 대한 한·미회담이 열리어 행정권 이양에 관한 대통령 제1화가 공포됨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독립국가 가 되었다.

남쪽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하자 북쪽에서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남로당제주도당의 인민유격대는 신생 대한민국정부에게는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1)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

(가) 군사력·경찰력 강화

1948년 9월에 접어들자 지하선거와 안세훈, 김달삼의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참석 등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제주도의 인민유격대 활동이 9월 들어 활

73) 현길연.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서울 : 태학사, 2016), p.381.

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한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사태가 악화될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정부에게 제주4·3사건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9월 20일경부터는 제주도 곳곳에 북한의 인공 깃발이 펄럭였으며, 대청요인이나 민보단장 등 우익인사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2개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5명을 살해하고 2명을 납치했으며, 우익인사 4명을 납치, 살해했고, 10월 6일에는 경찰과 남로당인민유격대가 교전을 했으며, 9일에는 국군과 남로당인민유격대가 교전하기도 했다.



그림 13. 선무공작으로 귀순한 입산 청장년들

경비대총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⁷⁴⁾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나) 포고문 발표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한 지 6일만인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했다.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 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

74)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4·3' 발발 직후인 1948년 4월 5일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조직된 경찰의 조직이다. 반면에 비슷한 명칭인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1948년 10월 11일 창설)나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유재흥 대령, 1949년 3월 2일 창설)는 군대 조직이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 지령을 봉지(奉持)하여 치등(此等)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此)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⁷⁵⁾

또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도에 증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9일 제주에 파병될 예정이던 제14연대가 제주출동을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강경작전은 더욱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여·순반란’사건은 강경진압작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다.

(다) 남로당인민해방군 선전포고문 발표

1948년 10월 18일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에 제주도 증파명령을 내리자 10월 19일 여수 14연대 반란사건⁷⁶⁾(여수·순천사건)이 발생한다. 여수 14연대 반란은 제주 남로당 반란군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게 되었다.

14연대 반란 5일 후 남로당 반란군측은 소위 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 명의로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다음과 같은 ‘선전포고문’과 ‘국방군과 경찰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약 3,000매를 제주신보사(주필 김호진 등 3명)에서 인쇄하여 요소요소에 살포했다고 한다.

선전 포고문

잔인 무도한 경찰관들이여!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개들이여!

너희들은 무고한 도민,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있다.

하느님도 사람도 용서 못할 만행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범해왔다.

75) 『조선일보』, 1948년 10월 20일.

76) 육본은 여수 우체국 일반전보를 통해 “제14연대 1개 대대는 1948년 10월 19일 20시에 여수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내렸으나, 14연대 박승훈 연대장이 보기도 전에 우체국에서 일하는 남로당원→여수인민위원장→전남도당 책임자 김백동→남로당 군사부장 이재복→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증업→14연대 지참수 상사에게 폭동 지령내림.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너희들의 극악비도한 악사를 동족이라고 해 부끄럽지만 참고 견디고 왔지만 우리들은 인민의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은인자중도 한계에 이르렀다.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권토중래할 것을 결정했다.

남로당 반란군, 흔히 말하는 바대로 인민해방군 사령관격인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문에서 “머지않아 권토중래 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 것은 1948년 11월 1일을 기해 군·경 프락치들과 합세하여 공세를 취하여 군과 경찰을 일거에 제압하고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다.

국방군과 경찰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親愛하는 將兵, 경찰관들이여!

銃부리를 잘 살피라. 그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이 피땀으로 이루어진 稅金으로 산 총이다.

총부리를 당신들의 父母, 兄弟, 姉妹들 앞에 쓰지 말라.

귀한 총자 총탄알 허비 말라.

당신네 父母兄弟 당신들까지 지켜준다.

그 총은 총 임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人民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의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美帝를 이 疆土로 쫓겨내기 위해

매국노 李承晩 一黨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부리를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人民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 나라 내 집 내父母 내兄弟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人民의 榮譽로운 자리를 차지하라'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반란군 사령관 이덕구 명의의 ‘선전포고문’과 ‘호소문’의 뼈라가 제주신보사에서 인쇄되고 뿌려진다는 정보를 서북청년단에서 입수하였다.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경찰은 제주신보 기자들을 잡아들였고, 김호진 편집국장과 공무국장 등이 9연대 군당국에 구속되었다. 김호진은 이 뼈라 인쇄후 신변이 위험을 느껴 남로당인민유격대가 있는 곳으로 입산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당시 제주에 주둔한 9연대 정보과 군당국은 이 정보를 알고 관음사 숲속 근처에서 김호진을 붙잡고 제주농업중학교 천막에 수용했다가 1948년 10월 31일 박석내(소용내)에서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라) 군·경 프락치 사건

남로당제주도당은 10월 24일 조직을 개편하고 인민유격대사령관 이덕구의 이름으로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그들은 군과 경찰에 침투시킨 프락치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장악하려 하였음이 밝혀졌다.

여순반란에 대한 진압작전이 끝날 무렵인 10월 28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조천지역 좌익들을 소탕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경비대 일부병력을 여수의 반란군으로 가장하여 조천지역 해안으로 상륙시키고, 이 때 환영 나온 좌익들을 일망타진하는 개념이었다. 이런 계획을 홍순봉 제주경찰국장에게 통보하려고 밤에 전화기를 들자 합선으로 인하여 연대의 모 하사관이 폭도들에게 작전계획을 누설하는 것을 감청하게 되었다. 이에 송요찬 연대장은 헌병을 불러 교환병들을 체포하고 취조한 결과 주로 심야를 이용하여 작전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자백을 받았으며, 제주도에서 창설된 9연대 1대대 요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연대구매관 강의원 소위와 박격포 소대장 박노구 소위를 포함한 좌익세포 80여 명을 검거하였는데, 강의원과 박노구 등 핵심요원은 즉결처분하고 나머지는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들은 연대장 등 장교 및 하사관들을 사살하여 부대를 장악하고 인민유격대와 합세하려 했다가 발각됨으로써 도리어 그들이 체포된 것이다. 제9연대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다음날인 29일 장전리를 급습하여 장전리 전투를 치르게 된다.

경찰 측에서도 10월 31일 프락치사건을 적발하고 많은 좌익들을 검거했다. 제주의 경찰특별수사대는 좌익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모임을 급습하여 7명을 연행하고 이들을 취조한 결과 오후 7시경에 이들로부터 “오늘 저녁 10시에 남로당제주도당인민유격대가 제주를 총 공격한다”라는 자백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긴급히 부대를 제주읍 외곽에 배

치하는 한편, 관련자 색출에 나섰는데, 이튿날 아침까지 경찰청, 제주읍사무소, 세무서, 검찰청, 법원, 해운국 등 여러 기관에서 8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A급 20명, B급 41명, C급 22명으로 분류하여, A급은 군 정보기관에 인계하고, B급은 군법회의에 회부했으며, C급은 훈방 조치하였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폭동연루자 수백 명을 체포하였다.

이리하여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한 남로당제주도당은 11월 1일을 기하여 인민유격대가 군·경 프락치들과 합세하여 반격을 가하여 제주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려 했던 계획이 군과 경찰 쪽에서 사전 발각됨으로서 수포로 돌아갔다.

군·경 프락치 사건은 정부가 유화책 대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진압방침으로 가는데, 휘발유에 불을 놓은 역할을 하였다.

1) 장전리 전투

제9연대는 제1대대를 제주읍에, 제2대대를 성산포에, 제3대대를 모슬포에 주둔시켰고, 각 대대는 대대책임지역을 중대별로 할당하여 경계나 수색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9연대는 군 프락치 사건 다음날인 1948년 10월 29일 장전리에서 남로당인민유격대세력들의 회합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고⁷⁷⁾ 이를 급습하기로 하고 병력을 출동시켰다. 9연대는 애월면 장전리에서 회합중인 남로당반란군 200여 명을 급습하여 13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나머지는 산속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은 군·경프락치와 합세하여 정부 측에 반격을 가하려는 인민유격대와 남로당제주도당 요원들이었는데, 전날 밤에 군 프락치들이 일망타진이 되는 바람에 군의 작전계획을 연락받지 못해서 기습을 받은 것이다.

(마) 서북청년단회, 대동청년단, 민보단 등 진압에 참여

서북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이 남로당제주도당반란군을 진압하는 작전전위에 서서 군·경 못지 않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가족이 인민유격대에게 희생당한 유족들을 경찰조직에 편입시킴으로써 진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주민들에게 민보단을 구성케 하여 마을 경비를 맡겼

77) 신구범. 제주4·3진실도민보고서. (제주 : 제주문화, 2018), p. 53.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고, 민보단원 중 청년들은 다시 특공대로 편성해 적극 진압작전에 앞장세웠다. 학생 조직인 학련도 진압작전에 활용했다.

서북청년단회 대원들이 경비대나 경찰에 대거 투입된 것은 단순한 병력 증강만이 아니라 제주출신 군인과 경찰들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압당국이 제주출신 군경은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제주도민으로서 온정을 베풀 수 있으므로 강경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민보단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외곽조직이 되었다. 당초엔 민보단의 전신인 향보단이 있었다.

마을 지서에는 비상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이렌이 울리면 민보단원들은 수분 내로 집결하였고 민보단 단원들은 군경 진압작전에 곧잘 동원되었다. 그들은 죽창 등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무기를 들고 군인이나 경찰관보다 앞서 최전방에 섰고 단원들 가운데는 진압작전에 참여했다가, 혹은 보초를 서다가 남로당인민유격대의 기습을 받아 목숨을 잃는 일이 많기도 하였다. 65세의 노인과 아낙네들까지 남로당반란군계릴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벽을 쌓는 일에서부터 밤에는 교대로 성을 지키는 보초의 일을 의무적으로 했으며 민보단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은 다시 ‘특공대’라는 이름 아래 재편돼 군·경이 전개하는 진압작전에 투입되었다.

(바) 계엄령 선포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合圍)지경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⁷⁸⁾

계엄 해제에 관한 문서는 ‘대통령령 제43호’로서 “제주도지구의 계엄은 단기 4281년 12월 31일로써 이를 해지한다”⁷⁹⁾고 적혀 있다. 제주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됐고, 12월 31일 해제될 때까지 한

78) 『관보』 제14호, 1948년 11월 17일.

79) 『관보』 제26호, 1948년 12월 31일.

달 보름간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1) 남로당반란군 강경 진압 배경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과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 강경작전의 준비작업을 완료한 정부진압군은 소개된 중산간 마을소개령을 내리는 등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했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벌어진 강경진압작전은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의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시키고, 해변마을에서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남로당반란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초토화작전은 중산간 마을에서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남로당반란군 세력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분리시킨다는 것이었다.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중산간마을을 공동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제2연대의 진압작전

제2연대(함병선, 1949. 1. 1 대령 승진)는 1948. 12. 29부로 제9연대와 교대했다. 제9연대는 대전으로 이동하고 대전의 제2연대가 제주도로 이동한 것이다.

정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1948. 11. 23 이후로는 유격대의 조직적인 저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격대가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1948. 12. 31부로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그림 15. 제2연대 본부



그림 14.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

도착하자마자 제2연대는 선무공작, 주민과 인민유격대 분리, 산악지역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소탕 등 3단계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1949년초부터 인민유격대의 공격을 받았다.

(1) 오등리 피습과 월평리 전투

1949년 1월 1일 밤, 인민유격대 100여명이 제주읍 오등리에 주둔한 제2연대 제3대대를 기습, 공격하였고, 제3대대는 이에 응전함으로써 교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제3대대는 고병선 대위⁸⁰⁾를 포함하여 10명의 전사자와 27명의 부상자를 냈고, 인민유격대는 30명이 전사하고, 10명이 포로가 되었다.

1월 6일, 월평리에 유격대 1개 중대가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는 제2대대를 출동시켰다. 공격 선두에 나선 제6중대는 야간 진출중 인민유격대와 마주쳤으며, 돌담을 사이에 두고 교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화력이 약한 인민유격대측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6중대가 이들을 추격했는데, 이들은 관음사 외곽에서 저항을 하였으므로 다시 교전에 들어갔으며,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근접전이 전개되자 이들은 관음사를 불태워 연기속으로 사라졌다. 남로당반란군의 일제 99식 장총으로는 제2연대의 화력을 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교전에서 제6중대는 전과로는 유격대 30명을 사살하였고, 피해로는 3명이 전사하고 중대장 등 수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 의귀리 전투⁸¹⁾

제주도에 온지 2주정도 된 1월 12일 새벽, 200여명의 인민유격대가 표선면 의귀국교에 주둔한 제1대대 제2중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제2중대는 1개 소대가 표선면에 파견나가 있었으므로 병력은 2개 소대 80여명이었다. 제2중대는 민간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라 유격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학교 담벼락 밖에 청음초를 운용하였는데, 청음초의 신호에 따라 전투태세를 유지하다가 교전에 들어갔다. 양측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총격전과 수류탄전까지 하는 등 숨가쁜 교전을 했는데, 날이 밝아오면서 유격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학교 지붕위에 거치된 기관총이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유격대가 퇴각하게 되었다. 이 때 최수길 상사가 추격조를 이끌고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

80) 육사 5기 고병선 대위는 12월 15일에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였는데, 진급 16일만에 전사함으로써 대위로 진급되었으며, 피습시 현저한 공적을 감안하여 1949. 11. 1 다시 소령으로 진급시켰다.

81) 이윤. 진중일기. (서울 : 여문각, 2002), p.100.

였고, 때마침 응원나온 서키포의 제4중대와 함께 이들을 소탕하였다. 제2중대는 이날 전과로는 사살 96명, 생포 14명, 소총 노획 60정이었고, 피해로는 전사 4명, 부상 5명이었다. (미군 기록에는 사살 51명, 소총 노획 17정, 전사 2명, 부상 10명이었다) 인민유격대 200명이란 숫자는 남원면 인민유격대 세력이 거의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며 51명의 사망자를 내고 패퇴함으로써 남로당반란군 세력이 급속히 약화됐을 것으로 보아진다. 인민유격대들은 일본군 철모에다 99식 장총과 산에서 제작한 도검 등을 지니고 있었다.

(3) 남원 전투⁸²⁾

1949년 2월 15일 2연대는 남원면 산록에 반란군 주력이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연대장이 직접 1개 중대를 인솔하고 출동에 나섰다. 밤 2시경 먼저 정보를 입수한 700여 명의 반란군이 야영 중이던 정부군을 공격해왔다. 탄약이 떨어질 정도로 4시간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반란군은 160여구의 시체를 버리고 패주했다. 이 전투에서 타격을 입은 이후 인민해방군이 대대적으로 마을을 약탈하는 대규모 습격은 없어졌다.

(4) 북촌리 사건

이 사건은 유격대의 기습으로 피해를 당한 국군이 민간인을 보복 살해한 사건이다.

1949. 1. 17 아침, 제3대대 일부 병력이 북촌마을 어귀에서 유격대의 기습을 받고 2명이 전사하였다.⁸³⁾ 피습 현장에는 돼지고기와 쌀밥 등 유격대들이 먹다가 버리고 간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군은 이 음식이 마을에서 제공한 것이며, 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와 내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1:00경, 무장군인들이 북촌리 마을을 포위하고 400여체의 가옥을 불지르고 1,000여명의 주민들을 북촌국교에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군,경,민보단 가족들을 분리시킨 후 40명씩 120명을 사살하였고, 다음 차례를 사살 준비중 연대인사과장을 통해 연대장의 주민사살중지 명령이 내려왔다. 연대장 명령을 가져온 인사과장과 3대대장간에 서로 권총을 겨누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82) 나중삼. 전계서, p.298.

8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계서, p.314.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5) 총기 피탈사건

1949. 2. 4, 제2연대 제3대대는 M-1소총이 지급되자 지금까지 사용하던 일제 99식 소총을 연대에 반납하기 위하여 150여정을 2대의 차량에 싣고 20명의 경계하에 수송하였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입수한 유격대가 금녕 부근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여 소총 150정을 모두 빼앗아 갔다. 이날 호송병력 20명 중 인솔장교를 포함하여 15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사. 제주도 전투사령부의 진압작전

육군본부는 3월 2일부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유재홍 대령, 참모장에 제2연대장인 함병선 대령을 임명하고 예하부대로는 제2연대와 제6여단 유격대대를 지명하였다.

유재홍 사령관은 부임하자마자 해안마을에 있던 부대를 한라산 중간으로 올려 보내어서 유격대에 압박을 가하면서 산중에 피난한 주민 20,000여명을 하산시키려 했다. 이들 피난민은 소개령시 해안마을로 소개하지 않고 한라산으로 소개한 남로당측과 우호적인 주민들이었다.

유 사령관은 함병선 제2연대장의 강경진압방침을 바꾸어서 사면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 즉 산간에서 잡은 포로나 주민들을 심문하고는 유격대원이 아니면 즉시 석방함으로써 항복만 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퍼트려 유격대나 피난민들을 귀순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많은 입산자들이 하산, 귀순하였는데, 5월 11까지의 귀순자는 6,000여명이라고 보도되었다.

(1) 노루오름의 피습

1949. 3. 9. 노루오름에서 6여단 유격대대 1개 중대가 출동하다가 인민유격대의 기습을 받아 병력과 우익청년단 등 36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애월면 원 마을에 주둔했던 유격대대 1개 중대가 작전으로 경계도 없이 종대대형으로 도로를 따라 노루오름으로 출동했는데, 이를 사전에 알게 된 인민유격대 50여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선두를 통과시키고 중앙부를 공격함으로써 중대는 분산, 패퇴하였는데, 중대장이 부상당하고, 소대장 1명이 전사했으며, 병력 27명과 민보단 및 대한청년단 등

우익청년단 9명 등 36명이 전사하였다. 부대가 출동하는데 민간인을 대동한 것은 기밀이 누설되는 원인이었다.

이 전투는 4.3전개과정에서 군이 단일전투에서 입은 최대 피해였다.

(2) 녹하악⁸⁴의 대승

제주도전투사령부는 3월 말에 4개 대대를 동원하여 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작전개념은 3개 대대를 압박부대로서 북에서 남으로 공격하고, 1개 대대를 차단부대로서 적악-노루악-현대악을 잇는 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쫓겨오는 유격대를 섬멸하는 작전이었다. 차단부대인 제1대대 4중대는 계획된 차단선으로 새벽녘에 진출하다가 5시경에 유격대와 조우하였다. 남로당유격대가 고개마루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리하였지만 중대장은 정면의 적을 견제하고 일부병력으로 적의 측후방으로 기동시켜 기관총으로 공격함으로써 당황한 적은 10여명의 시체를 버리고 1km 정도 물러섰다. 포로를 심문한 결과 이들은 남로당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직접 지휘하는 1,000여명의 병력으로서 1중대 기지를 습격하려고 이동중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많은 병력은 도당에서 관장하는 유격대와 면당에서 관장하는 자위대가 합세한 병력이었다.

제4중대는 1km 정도 물러나서 저항하는 유격대와 수시간동안 교전을 하다가 중대장의 돌격 명령에 따라 일제히 돌격하자 유격대 한쪽이 무너졌다. 이에 힘을 얻은 4중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하자 유격대는 많은 시체를 버리고 분산, 도주하였다.

4중대는 이날 전투에서 사살 178명, 소총 203정, 권총 4정, 기관총 2정을 노획하는 4.3사건중 단일전투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유격대는 이날의 전투 이후로는 대규모의 부대 운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 전투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였다.

이날 항공기를 타고 공중지휘하던 유재홍 사령관은 비행기(연락기)가 추락하다가 소나무에 걸려서 경상을 입었으나 무사히 구출되었다.

(3) 남로당제주도당의 와해와 이덕구 사살

3월 말부터 전개한 제주도 전투사령부의 작전은 남로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는데 유격대의 주력이 분산, 패퇴함으로써 치명상을 입은

84) 녹하지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산 5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데다 4월 2일에는 서흥리 쌀오름에 있던 도당부가 제2연대 2대대의 공격을 받아 당책 김용관, 조직책 김양근, 총무책 김두봉, 선전책 김석환 등 도당의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므로 조직이 와해상태가 되었다.

6월 7일에는 경찰에 의해 남로당반란군 2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되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화북지서장 문창송 경위는 관내 입산자 107명을 귀순시키는 공작을 진행시켰는데, 해안으로 침투하는 유격대 분대장급 1명을 생포하였고, 이를 전향시켜 유격대 연대장 고00를 유인해 오도록 한바 연대장이 유인해 오자 이를 생포하였다. 그런데 그가 전향을 완강히 반대하다가



그림 16. 남로당반란군 2대 사령관 이덕구 시체 전시

죽은줄 알고 있던 모친과 딸을 만나보고는 전향을 결심하고, 이덕구 있는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화북지서장은 연대장을 믿고 산에 오르게 했는데, 그는 며칠 후 나타나서 이덕구 있는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였다. 이에 문창송 지서장은 그 날(6월 6일)로 특공대로 경찰 10명과 민보단 10명 등 20명을 편성하여 야간에 침투시켰는데, 6월 7일 새벽에 건월악 부근에서 교전 끝에 이덕구를 포함한 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생포된 자⁸⁵⁾는 이덕구의 호위병 겸 전령으로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란 귀중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에는 남로당 제주도당과 인민유격대의 4.3 초기 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85) 양생돌(22세. 제주지방검찰청 수형인명부 11-84)은 1949년 7월 1일 무기로 판결받아 마포형무소에 수감 생활을 하다가 6.25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옥하였다. 마포형무소의 탈옥수 명부에 출옥자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마포형무소에는 500여명이 수감되었는데 이들은 타의적으로 북한의 의용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특공대는 이덕구의 시신을 달구지에 싣고 내려왔으며, 제주경찰서 정문에 하루 동안 전시하고는 화장 처리했다. 북한 당국은 이덕구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국기훈장 3급을 수여하였고, 평양 근교의 애국열사능에 있는 그의 가묘의 비석에 ‘남조선 혁명가’라는 비문을 넣었다.



그림 17. 제주시 회천동 이덕구 가족묘지에 있는 이덕구 비석

6.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진압작전

가. 전쟁 발발후의 제주도 상황

6·25 한국전쟁전쟁 소요에 따라 7월 16일 제주도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했으며, 전황이 불리해지자 대구에서 창설되었던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1월 22일에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되었다.⁸⁶⁾ 그리고 국방부 제2조병창, 무선통신중계소 등이 설치됐고, 제주와 모슬포 등 2개소에 중공군포로수용소도 시설되는 등 많은 군사시설이 제주도에 설치, 운용하게 되었다.

육군 제1훈련소는 한때는 8개 신병연대와 2개 교도연대 및 1개 하사관학교와 수송학교, 1개 육군병원 등을 거느린 제주도에서는 최대부대로서, 1954년 8월에 폐쇄⁸⁷⁾될 때까지 3년 반 동안 많은 신병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재산무장대의 토벌작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86) 육군본부, 『육본작전지시』 第29號, 1951년 1월 21일.

87) 육군본부, 『훈령』 第290號, 1954년 5월 2일.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제1훈련소장이 제주지구위수사령관을 겸임하므로 필요할 때에는 작전 지시를 내리거나 경계지시를 내렸다.

나. 예비검속과 제주유지사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과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정부로부터의 예비검속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즉각 요시찰인에 대한 일제 검거가 이루어졌다. 6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교사에서 학생과 부녀자 등에 이르기까지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모슬포 경찰서에 검속된 자들에 대한 군 당국의 총살 집행이 이루어졌다. 모슬포경찰서 관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송악산 ‘섯알오름’에서 총살되었다. 1950년 9월이 되자 제주지역에서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은 정지되었다. 제주경찰국에서는 9월 14일 도내 사찰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예비검속자 중에서 개전의 가망이 있는 자를 석방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1950년 8월 법원장·검사장·제주읍장 및 변호사·사업가·교육자 등 유지급 인사 16명이 ‘인민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제주지역 계엄사령부(사령관 신현준 대령)로 진행되는 소위 ‘유지사건’이 발생했다. 계엄사는 8월 8~9일 이들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제주지역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다. 잔여 남로당 인민유격대 케멸

한라산의 잔존 남로당 공비들은 60여 명 정도로, 이들은 가급적 교전을 피하고 무기를 감추면서 연고지에서 부모형제들로부터 생필품을 보급받아 연명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 99동을 불태웠는데⁸⁸⁾, 이것이 전쟁발발 후 남로당빨치산계틸라의 첫 공격이었다.

남로당인민유격대원들은 하원마을 습격을 시발로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했다. 또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 세력을 확장해 갔다.

88) 하원마을회, 『하원향토지』, 1999, 379쪽.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사살자와 포로 및 귀순자가 발생하면 남로당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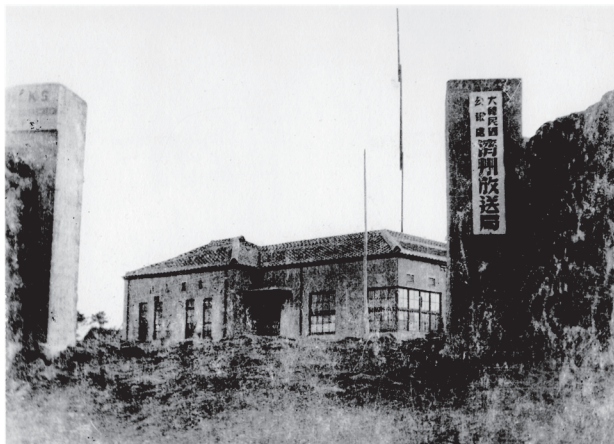


그림 19. 1952. 9. 16. 습격당한 제주 KBS방송국

유격대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납치로 남로당인민유격대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라산의 남로당인민유격대원들은 남하하는 북한인민군들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하였고, 제주도 좌익계 민간인들은 7월에 들어서자 소규모이기는 하나 제주읍을 비롯하여 각 면 단위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남로당인민유격대원을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⁸⁹⁾

1952년 9월 16일 오전 2시경, 숫자 미상의 남로당인민유격대가 국군과 경찰복으로 가장하고 KBS제주방송국을 습격, 숙직중이던 방송과장 김두규와 18세의 기술견습원 및 소년급사 등 3명을 납치하고 전화기와 방송용 시계 등을 약탈하여 도주하였다.⁹⁰⁾ 이들 납치된 3명은 며칠 후 남로당인민유격대의 아지트 부근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⁹¹⁾ 이들은 국군과 경찰로 위장하고 M-1소총과 99식 다발총으로 무장, 이등상사의 계급장까지 단 군복을 입었다고 한다.

10월 31일 오전 3시에는 경찰이 경비중임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인민유격대원 27명이 침입, 서귀포발전소를 전소시켰다.⁹²⁾ 이리하여 전기공급을 상당기간 차단되어 어려움을 느꼈다.

89) 김봉현·김민주, 전게서, p.257.

90)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 : 일신옵셋인쇄사, 1990), pp.317.

91) 『평화신문』, 1952년 9월 19일.

9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전게서, p.343.

제주 4.3 사건의 전개과정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는 8월 24일 한라산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신선대를 만들어 작전에 나섰다.⁹³⁾ 제주도에 주둔중이던 해병대는 남진하는 북한인민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의 계획에 따라 육지부로 떠나갔다.

라. 금족해제와 마지막 토벌

1954년 8월 28일에 이경진 국장 후임으로 신상묵 경무관이 제주도 경찰국장에 취임하였다. 신상묵 국장은 상당기간동안 잔존 무장대 5명의 행적이 포착되지 않자 1954년 9월 21일을 기하여 금족령을 해제, 한라산을 전면개방하고 주민들의 성곽 경비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⁹⁴⁾ 한라산 개방 1년 후인 1955년 9월 21일에 백록담 북측에 ‘한라산 개방 평화기념비’가 세워졌다.

경찰은 오랫동안 5명의 인민유격대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955년 2월 9일에는 신 국장이 직접 5명의 잔존 인민유격대 가족을 방문하여 “자수하면 생명은 절대 보호한다”고 하는 등 조속한 자수를 권고하도록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하였다.⁹⁵⁾

1956년 4월 3일, 사찰유격중대가 구좌면 송당리의 체오름에서 인민유격대 3명과 교전 끝에 인민유격대 부책임자 정권수⁹⁶⁾를 사살하였다. 이번 전과는 지난 1954년 2월 중순이래 2년 2개월만에 얻은 전과로서 이제 무장대는 4명으로 줄어들었다.

1957년 3월 21일, 제주경찰서 사찰유격대가 월평동 견월악 지경에서 식량 확보차 하산한 무장계릴라들을 포착하고 도주하는 이들을 추격하다가 대열에서 뒤떨어진 여자공비 한순애를 생포하였다.⁹⁷⁾ 3월 27일에 경찰국 사찰유격대가 한라산 중북 평안악 밀림지대에서 빨치산계릴라 3명과 교전 끝에 총책 김성규 등 2명을 사살하였고, 1957년 4월 2

93) 『제주신보』, 1950년 8월 26일.

94)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제주 : 일신옵셋인쇄사, 1990), pp.318~319.

95) 『제주신보』, 1955년 2월 10일.

96) 북제주구좌면 상도리 출신 38세. 정권수는 4·3초기에 입산하여 만 8년 동안 살인방화를 일삼던 거물급 남로당인민유격대였다. 1992년에 다량쉬동굴에서 발견된 시체들은 양민들이 아니라 정권수 휘하의 남로당구좌면당 소속 인민유격대원들이었다.

97) 북제주조천면와산리 출신. 23세. 한순애의 배낭에는 소형 식기 1개와 모포 1매, 백미와 보리쌀이 4되가 들어있었다. 한순애는 1951년 봄에 동네 할머니들을 따라 제주읍에 장을 보러 가다가 남로당인민유격대원들에게 붙잡혔다고 한다.

일에 성산포 경찰유격대가 구좌면 송당리 토굴에서 숨어살던 최후의 남로당빨치산 오원권을 생포함으로서.⁹⁸⁾ 그동안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는 완전히 소탕되었다.

98) 『제주신보』, 1957년 3월 29일, 4월 3일, 5월 15일 ; 『조선일보』, 1957년 4월 3일.

4.3사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이명인 역사학 박사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이명인 박사 (한국현대사 전공)

目 次

1. 문재인 4.3 추념사는 자가당착의 극치
2. 몽양 여운형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은
임정법통 부인행위
3. 4.3 폭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원인 및 정치적 배경
 - (1)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변화
 - (2) 10.1 대구폭동 당시 좌익은 해부용 시체로
군중을 기만
 - (3) 남로당의 베트남식 통일 추구는 이승만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
 - (4) 남·북로당의 김구 포섭과 국회프락치 공작
4. 결론

1.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자가당착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은 4.3 72주년 추도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념사를 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를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 제주를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알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 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입니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제주에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이며,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

4.3사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4.3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의 히스테리에 일방적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비극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은폐해온 당시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 연설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연설에서 당시 사망한 (폭도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 말하자면 폭동을 진압한 군과 경찰이 ‘그들을 죽인 범죄자들’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인 악당이고 가해자이고 살인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4.3 폭동 당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한 군경의 명예를 앞장서서 욱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시 군경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1948년의 제주 4.3 폭동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동이었음은 분명한 진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해방 후 박헌영의 핵심측근이자 한때 남로당 서울총책이었던 박갑동이 1983년에 쓴 저서 『박헌영』(인간사刊)에서 4.3 폭동을 “남로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1948년의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치안이 취약한 제주도를 해방구로 설정하고 현지의 공비두목 김달삼에 지령을 내려 일으킨 폭동”으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남로당 지도부의 구성원이었던 당사자의 확고부동한 증언이 있고 민간인 사망자들의 상당수도 공산폭도들에 의한 희생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기존의 역사인식을 모두 뒤엎어버리고 이를 국가폭력의 히스테리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 역사인식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역사왜곡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을 조작 또는 왜곡하여 기존의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틀(정치체제)을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에 충실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4. 3폭동이 발생하기까지의 근본배경에 대한 구체적 고찰 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당시의 민간인 사망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로 몰아붙임으로써 역사의 법정에 대한민국을 전범이자 피고로 세우겠다는 의도가 뚜렷이 보인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원고(검찰)가 되어 피고 대한민국(범죄자)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이 아니라 일부 좌파세력만의 대표인가.

당시 폭동진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며 사과와 보상까지 해야 할 일인가.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은 엄밀히 말해 원인제공자인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비유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방 전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과의 전투도중 부득이하게 중국인이나 일본 민간인들을 살상했다면 이것도 과연 한국정부가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6.25 동란은 물론이고 제주폭동을 사주한 북한당국의 책임문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국난을 맞아 고군분투한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군경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실왜곡을 통해 누가 정의이고 불의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악당인지를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들의 최종목적은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모두 바로 잡겠다는 구실로 허물어뜨린 후에 화해라는 위장된 제스처를 내세우는 척하면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여 정권을 재창출해내고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증오의 프레임에 맞춰 과거사의 기억을 왜곡, 날조한 콘텐츠

츠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역사의 실제적 진실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충실한 왜곡과 날조와 사기의 콘텐츠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식의 과거 허물기 작업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부인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는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조선태조 이성계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헌정체제 내에서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이전의 정부들의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좋던 싫던 간에 자신들의 뿌리가 대한민국 건국 후 기왕에 존재했던 이승만·장면·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정통성을 승계한 자신의 입장이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 몽양 여운형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은 임정법통 부인행위

현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마저도 부인하는 모순된 행위를 저질렀다. 2005년 3. 1절 당시 문재인이 속해 있던 노무현 정부는 중도파 사회주의자였던 몽양 여운형에게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수여하였는데, 몽양 여운형은 해방직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주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자신을 사실상 정부수반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2005년 당시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여운형에 대한 서훈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데, 입만 열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면서 망명정부에 불과했던 임정의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던 그들로서는 실로 모순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 여운형에 대한 서훈을 강행해 놓고 북한에 있던 여운형의 4녀 여원구에게 월130만원에 달하는 유족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비굴한 자세를 취하기까지 했다. 즉 당시 여원구가 자신은 북한의 차관급 공직자이기 때문에 남한정부가 주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여러 차례 매달려가며 사정하는 모양새를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것도 부족

해서 노무현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2008년 2월말에 여운형을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키는 결정을 해놓음으로써 실제 서훈은 그 며칠 후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3.1절에 하도록 꿈수까지 부렸던 것이다.

3. 4. 3 폭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원인 및 정치적 배경

- 과연 대한민국은 국가폭력의 가해자인가.

(1)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노선변화

- 평화적 노선에서 무장혁명 노선으로의 전환, 9월 총파업과 대구폭동

4.3 폭동은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해방직후부터 그때까지의 조선공산당의 노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비로소 그 발생배경과 원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도 하기 전에 안팎에서 총궐기한 공산당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느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4.3 폭동 당시 일부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은 공산당의 총공세로 몰릴 대로 몰린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방위를 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탄에 맞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애당초 해방직후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자신들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술적으로 폭력노선보다는 주로 대중적 활동을 통한 조직강화 등 평화적 노선에 치중해왔다. 그런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 결정이 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익이 찬탁을 주장한 반면, 우익이 반탁으로 갈라지면서 공산당의 집권전략에는 차질이 오기 시작했다. 당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이 감성적 민족정서에 의거, 강력한 반탁을 주장하면서 찬탁세력을 국제 공산당에 조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비판하자 공산당은 급격히 대중의 정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찬탁을 사실상 식민통치의 연장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사회정서상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 대중에게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먹혀들어 가고 있던 공산당이 자금난까지 겹치게 되자 무리수를 둔 것이 바로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이었다. 당시 공산당원 박낙종이 주도한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이 남한의 경제질서를 교란시킨다고 판단한 미군정은 박헌영 등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박헌영 등은 일단 북으로 피신한 다음,

4.3사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그때까지 전략적으로 신사협정을 맺고 있던 미군정에 대해 초강경 대결의 자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철도노조가 주도한 1946년 9월의 총파업이었다. 총파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먹혀들어갔다고 판단한 조선공산당은 연달아서 10월1일 대구에서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박헌영 선생 체포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대구에서 시작된 시위는 경상도 일대로 번져나가다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 10. 1 대구폭동 : 좌익은 해부용 시체로 군중을 기만

당시 사범학교 학생으로서 대구폭동에 참가했다가 월북했던 김계철의 증언(1996년 10월1일자 대구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1946년 9월 하순 대구사범의 좌익세포에 몸담고 있던 선배의 심부름으로 대구의대의 좌익학생 대표에게 쪽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시체 네 구를 준비하라’는 메모였다고 한다. 쪽지를 전달받은 대구의대의 좌익학생 대표는 김계철을 데리고 해부실로 가더니 약물에 담겨 있는 시체와 봉대에 감겨 있는 송장들을 보여 주면서 “본 대로 전하라”고 했다. 이어 10월 1일 대구에서 좌익 노동자들이 ‘쌀 배급’, ‘일급제 반대’,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시위를 벌였다. 다음날 흰 가운을 입은 대구의대 학생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면서 시체를 들고 나와 시위를 선동하였는데 써먹은 시체는 김계철이 보았던 해부용 시체였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서가 폭도들에게 점령당하자 경찰관들은 달아났고, 좌익 폭도들은 무기를 탈취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풀어 준 뒤 경찰과 지주들,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 학살을 자행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른바 ‘반동분자’를 처단한다는 구실로 가족들과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당사자들을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찢어 죽이는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 가족들까지 학살을 했고 이러한 모든 살인행위가 ‘위대한 혁명적 행위’로 둔갑되었다. 특히 씨름장사 출신인 나윤출은 대구폭동 당시 공(살인)을 많이 세웠다 하여 그 덕분에 후일 월북한 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까지 선출되었다. (실록 『남로당』의 저자 김남식의 증언)

좌익이 선동하고 평소 사회에 불만을 가진 깡패와 양아치, 그리고 부화뇌동한 민중이 대거 참여한 무차별 살인과 폭동에는 인텔리 계층인 좌익 의대생들과 의사들까지 대거 동조했다. 경북도립의원에 실려온 부상 경찰관들은 화단 주변에서 폭

도들에 의하여 맞아죽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대구의대 학생(3학년 김만재)의 증언에 따르면, 공산폭도들은 경찰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타살하였고 사망 직전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죽음직전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희생자들에게도 “아직 덜 죽었다”고 잔인하게 큰 돌로 머리를 찡는 등 확인타살을 했다고 한다.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 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나왔다.”

(코오롱그룹 창업자이자 대구 동구 공화당 국회의원(6대, 7대)을 역임한 이원만의 회고록 《나의 政經50년》에서)

폭동이 일어난 다음날인 10월2일 오후 미군은 황급히 대구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장악하려 했지만 이미 대구 인근으로 폭동의 불길은 번져나가 성주, 칠곡, 구미 등 경북지역에까지 무차별 살육의 피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대구시보> 1946년 10월 13일자에 따르면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폭도들이 약목지서를 습격하여 주재 중인 세 경찰관을 기둥에 결박한 다음 낮과 도끼로 찍어 죽였고 또 왜관에 있는 칠곡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과장 외 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서장은 두부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찢어 죽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성주경찰서에서는 폭도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경찰관 수십 명이 유치장에 갇힌 채 그대로 석유를 뿌리고 방화살인을 당하기 직전 충남에서 출동한 경찰대가 도착하여 아슬아슬하게 이들을 구출해냈다고 한다.

(3) 남로당의 베트남식 통일 추구는 이승만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

1946년 9월 총파업과 대구 10. 1폭동은 해방직후 조선공산당이 평화적으로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던 중 신탁통치 찬성방침을 밝힌 후에 대중의 지지기반을 점차 상실해나가자

180도로 표변하여 극단적인 폭력노선을 표방한 후 첫 번째 시험작이 된 사건이었다. 당시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지도부가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배경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자신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좌익계 정당인 조선인민당(여운형)과 신민당(백남운)을 합쳐서 새로운 좌익정당(남로당)을 창

당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헌영 일당은 3당 합당으로 조직과 입지가 더욱 거대해진 남로당의 당권을 반드시 자신들이 장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하게 폭동을 일으켜 실행사를 했던 것인데, 이 덕분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라이벌인 여운형과 백남운을 몰아내고 남로당의 당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월북했지만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이후 더욱 더 폭력노선에 치중하게 된다. 이런 폭동이 한번 씩 일어날 때마다 소련군정과 김일성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제주 4. 3폭동은 이런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일어났다. 당시 제주폭동이 성공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제주는 남로당의 완전 해방구가 되어서 별도의 자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을 것이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남로당은 계속해서 남한전역으로 빨치산투쟁을 확대하여 곳곳에 해방구가 건설되었을 것이다. 남로당은 패망전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베트콩)처럼 별도의 정부로 인정되어 베트콩이 파리평화협상에서 미국, 북베트남 호치민 정부, 남베트남 티우 정부와 함께 당당히 하나의 정부자격으로 참가했던 것처럼 남로당 또한 미국과의 평화회담에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와 함께 회담의 주체로 당당히 참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무능했던 자유베트남의 티우 정권과는 달리 남북한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강했고 10대 후반 독립협회 시절부터 뉘기 시작한 그의 천부적인 연설실력과 선동술, 조직장악 능력은 세계 어느 거물급 정치인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겨우 세계의 변두리 공산당에 불과했던 남북 노동당의 실력으로는 그를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4) 남·북로당의 김구 포섭과 국회프락치 공작

당시 유엔이 한반도 전역에서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정하자 이에 불리함을 느낀 소련과 북한정권은 이에 반대하고 유엔한국위원회의 입북을 거절했다. 그런데 1947년 12월까지 이승만과 함께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했던 한독당의 김구는 그 무렵 반탁노선의 한민당을 찬탁노선으로 전향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당 총무부장 장덕수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는데, 때

마침 장덕수가 한독당의 비밀당원이자 현직 경찰관(경사)이던 박광옥에게 대낮에 자기 집에서 소총으로 저격당해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정 검찰이 수사결과 사건의 배후로 김구를 지목하자 시중의 여론은 김구를 비난하게 되었고 김구는 점차 대중의 정서에서 멀어지게 된다. 김구는 워낙 거물이어서 미군검찰에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미군정과의 정치적 타협으로 법정에서 두 번 불려나가 증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중의 여론은 김구가 암살의 배후라고 단정하고 있었고 한독당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¹⁾

당시 한독당 상무위원이었던 조경한(趙擎韓, 1900~1999. 6대 공화당 국회의원, 전남 순천)의 증언에 따르면, 임정 선전부장 엄항섭이 자신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 장덕수 암살사건의 여파로 한독당이 절대 불리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5.10 총선거를 반대하고)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하며 임정 주불연락원 서영해가 김구를 찾아와서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김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²⁾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1997년 5월 26일자 노동신문의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싸운 통일혁명렬사」라는 제하의 대남공작원 성시백을 추모하는 기사에서 이때 김일성이 직접 성시백을 김구에게 파견하여 회유했음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김구의 남북협상에 자신들이 배후로 작용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성시백이 1949년 적발된 국회프락치사건의 배후였음도 아울러 밝혔다. 그때까지 남한좌파들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숙청을 주도해나가던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국회프락치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남로당과는 별개로 북로당의 직계간첩이었던 성시백은 이외에도 여러 신출귀몰한 공작을 전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49년 5월 4일과 5일에 전방에서 강태무·표무원 등 2명의 대대장이 각각 대대병력을 이끌고 월북한 사건이었다. 당시 성시백의 조직원이었던 강태무와 표무원은 각각 춘천 주둔 국군 6여단 8연대의 1대대장과 2대대장으로 재직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소속 부대원들을 이끌고 집단월북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 4.3폭동과 여순반란사건이 진압된 후 이승만 정부가 대대적인 숙군작업을 벌여 군내 좌익프락치들이 거의 다 제거되었다고 판단할 무렵 기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었다. 군내 프락치들이 대부분 남로당 직계였던 반면에 이들 강태무와 표무원은 그들과는 별개로 북로당 성시백의 공작조

1) 조덕송 『민족대드라마 증언』 다다미디어 1991 pp.90~109

2) 강성재 외 『남북의 대화』 고려원재 1987 pp.357~358

4.3사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직에 속해있어 남로당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초대 육군 참모 총장이던 이응준(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 한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연달아서 성시백은 같은 해 9월 21일에 해군 수송함 스미스호의 월북사건을 일으켰다. 원래 미국상선으로 있다가 퇴역한 스미스호는 그 후 한국해군이 인수하여 수송함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납북당일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인천항을 향해 가던 중 이 배의 승조원으로 있던 성시백의 직원들이 선장과 갑판장 및 선원들을 선내에 감금하고 자신들이 배를 몰고 북한으로 들어감으로써 납치에 성공한 것이다. 스미스호는 그 후 한국전쟁 시기에는 인민군과 빨치산을 이남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9월 24일에는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한 L-5형 비행기가 월북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인 1950년 5월에는 육군항공대 L형 비행기 2대와 해군 소해정 '강철호'의 월북이 이어졌는데, 역시 성시백 조직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성시백은 전군을 흔들만한 큼지막한 공작들을 연속으로 성공시켰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약과라고 할 정도로 더 큰 사건을 터뜨렸다. 바로 1949년 6월 중화민국 장개석 정권은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대패하여 중국대륙을 완전히 넘겨주기 일보직 전이었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장개석 총통은 긴급히 방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진해별장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기자들이 배석하였지만 짙막한 인사말과 간단한 사진촬영을 마친 후 이·장 두 정상은 내실에 들어가 비밀회담을 하였는데, 이 회담의 내용이 성시백을 통해 이북으로 넘어가 북한의 김일성과 중공의 모택동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이다.

당시 성시백은 박헌영의 요구로 자신이 구축해놓은 제헌국회내의 프락치조직망을 모두 남로당에게 넘긴 후 새로 2대 국회 출마자들 중 일부에게 포섭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주다가 1950년 4월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오제도 검사의 회고에 따르면, 성시백이 체포된 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벽지 속에서 무슨 보고서 같은 것이 발견되어 살펴보니 바로 이승만·장개석 비밀회담의 내용을 이북에 보낸 보고서의 사본이었다. 습자지에 먹지를 깔고 깨알같은 글씨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은 이북에 보내고 사본을 벽지 속에 남겨둔 것이었다. 보고서에는 이승만·장개석 대화 내용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헛기침을 몇 번 했다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수사팀을 아연실색케 했다.

오제도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어떻게 두 정상 간의 비밀회담 당시 통역 한 명이 입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가 바로 자유중국 대사관에 통역으

로 근무하고 있던 김성민이었다. 그런데 김성민은 이미 그때 홍콩으로 도피해 버린 후였고, 그 후 그는 중국대륙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25 당시 인민군 장교로 전선에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성시백을 취조하던 중 성시백이 당시 안면이 있던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기봉에게 50만원의 뇌물을 주고 김성민을 중화민국 대사관에 통역으로 취직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오 검사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 후 정식으로 이기봉을 수사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기봉의 압력으로 자신이 해임당할 뻔 했다가 당시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장관 신성모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당시 38선에는 사흘이 멀다하고 남북한 군대의 소소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제주 4.3폭동으로부터 시작된 남로당의 빨치산 투쟁은 제주 한라산에서부터 출발하여 여순사건 후 지리산을 거쳐 백운산, 팔공산, 태백산, 덕유산, 일월산, 일출산 등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고 대한민국 군경토벌대는 이들 빨치산과의 전투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여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보유중인 탄환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이런 전선의 사정과는 별도로 이미 성시백에게 포섭당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왔던 김구는 그것도 모자라 제3차 파리유엔총회 당시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정부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신도 개인적인 대표단을 보내 이를 방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김규식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때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개인적 한풀이 차원에서 절대해서는 안 될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려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뜻을 접은 것이다.

4. 결 론

1948년 당시 갓 출범한 대한민국은 주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을 두고 있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이대통령과 장개석 총통 간의 비밀회담의 내용이 일자일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되어 이북으로 날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런 위기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갔다. 이승만이 심혈을 기울인 농지개혁도 당시 국회에서 한민당의 반대를 누르고 추진되었고 그 결과 자작농 비율이

4.3사건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92%까지 올라갔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다. 그러자 농민들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급상승하였다. 그래서 당시 빨치산들의 재산현지(在山現地) 투쟁에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빈농들이 대거 이승만 지지로 돌아서버렸기 때문에 빨치산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 되어버렸다.

당시 남로당 서울총책이었던 박갑동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남로당은 농촌에서 대대적인 빨치산 투쟁으로 해방구를 대거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4. 3폭동이었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주둔 국군 14연대를 출동시키기 직전 부대내의 좌익세포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하여 일으킨 것이 바로 여순반란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진압되었으나 반란에 참가한 국군 패잔병 및 남로당 패거리들이 대거 산으로 들어가 저항하면서 장기적인 빨치산 투쟁의 발단이 되었다.

박갑동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남로당 및 그 산하단체에 가입한 인원들만 약 1백50만 명 정도였고 그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만 합쳐도 남로당 지지계층은 약 7백만 명에 달했으나 보도연맹을 통한 대거 전향케이스가 나오면서 남로당의 조직기반 자체가 점점 허물어져갔다. 그러자 북한은 더이상 베트남 식 통일이 불가하다고 보고 기습적으로 전면남침을 단행해 밀고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이미 1946년부터 계속된 북한과 남로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6.25를 맞아 속수무책으로 초전부터 계속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이승만이 이끌던 대한민국 정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자, 살인자, 학살자, 잔인한 악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군경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국민들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사를 빨리 청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화해라는 구실하에 모든 반대한민국 세력과 연대하여 대망의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중을 보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뜻있는 국민들이 이에 꾸준히 저항하고 과거사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거짓을 남발하고 누가 진실을 알리는지를 규명하는 노력을 줄기차게 하여야 한다. ‘과거의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이고 약자이고 공산당의 침략에 대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항상 정정당당하게 대응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과거사의 실제적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문재인 정부의 조작과 선동과 사기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나서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여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에 앞서서 걸만 야당의 탈을 쓰고서 정작 하여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와 좌파에 빌붙어서 기생하려는 사이비 야당인들을 먼저 퇴출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김대중 대통령(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때)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되었다.

조사위원들은 2003년 10월 15일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 및 좌 편향적으로 작성 되었다. 이 진상조사보고서 허위 및 좌편향적인 핵심 내용은 제주4.3 폭동을“제주4.3 무장봉기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군 9연대장 송요찬과 2연대장 함병선과 국군과 경찰은 폭동을 진압하였는데 국군과 경찰의 합동 진압군을 제주도민 13,000여명의 총살 즉 학살자로 표현하였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표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 허위 및 좌편향적인 내용 즉 가짜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3.1 발포사건이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그 증거는,¹⁾

1) 3.1 발포사건 개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결론 534쪽에 “3.1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 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그 증거는,

47년 3.1 제주북초등학교에서 3만 군중이 행사를 마치고 일부가 불법 가두시위를 하고 시위

1) 진상조사보고서 534쪽

대가 관덕정을 거의 다 빠져나갈 즈음 기마경찰관 임영관이 제1구 경찰서로 가기 위해 사거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갑자기 6살의 어린이가 뛰어나와 어린이가 말발굽에 채여 쓰러졌다. 기마경찰은 어린이가 말에 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자 사고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이 기마경찰을 향해 “저놈 잡아라!”하면서 던진 돌이 말에 맞아 놀란 말이 뛰자 기마경찰은 당황하여 군중들에게 쫓겨 경찰서로 급히 도망쳤다. 이때 경찰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응원 나온 육지경찰들은 대구사건 때 경험했던 경찰들로, 갑자기 기마경찰이 경찰서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군중이 몰려오자, 46년 10월 1일 대구에서와 같이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겁이 나서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아 6명이 즉사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주 도립병원에는 응원경찰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는데 응원경찰 2명이 경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덕정에서 총성이 나고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 8명을 군중들이 들것에 들거나 부축하여 도립병원으로 들어오자, 대구사건에서 경찰이 시위 군중에 비참히 죽은 것을 목격한 응원경찰 중 하나인 이문규 순경이 군중들이 도립병원을 습격하는 줄 알고 공포감에 총을 쏘아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것이 3.1절 발포사건이다. 이것은 육지경찰들이 공포심에서 나온 돌발적인 사건이지 경찰 지휘자의 명령에 의해 시위하는 군중을 계획적으로 발포한 사건이 아니다.²⁾ 그리고 기마경찰이나 경찰은 어린이가 말에 치인 것을 모르고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만 알고 발포한 사건이다.

①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과 남로당원을 선동하여 파업을 하다.

47년 3.1발포사건 후 제주남로당은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3월 10일부터 총파업을 하라고 제주도민과 남로당원을 선동하여 3월 10일 제주도청 직원 140명이 3.1 발포사건을 항의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고, 북제주군청, 제주읍사무소, 학교 등 156개 단체 41,211명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심지어 모슬포·중문·애월 파출소의 경찰까지 파업에 동참하였고, 3월 13일 중문지서 경찰 6명이 3.1절 발포사건에 항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② 3월 18일 56개 직장이 파업을 해제하였고, 한 달 동안 3.1발포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다 3월 말에는 전원 파업을 해제하고 직장에 복귀하다.³⁾

③ 47년 3월 말까지 파업에 가담한 자 3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4월 10일까지 합 500여명이 연행되었다. 500여 명 중 260여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중 52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52명이 집행유예, 56명이 벌금을, 168명이 기소유예, 나머지는 훈방조치 하였다.⁴⁾

2) 제주 경찰국 「제주 경찰사」 1990. 284쪽

3) 독립신문, 1947. 3.20

4) 제주신보, 1947. 4.12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④ 미군정에서는 발포사건의 장본인인 도립병원 앞에서 총질을 한 이문규 순경을 파면하였고, 파업에 가담한 경찰 66명에 대해서는 직장 이탈사태로 파면되었다.

47년 4월 2일 제주도 군정장관 스타우드 소령이 해임되고 베로스 중령으로 교체되었고, 4월 10일 제주도지사 박경훈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임하여 유해진으로 교체하였고, 3월 31일 제주감찰청장 강인수를 해임하고 김영배로 교체 하였고, 강동효 경찰서장은 다른 비리와 함께 책임을 물어 파면시켰다. 경찰 고문관 패트릿지 대위도 레데루 대위로 교체하였다. 군정이나 경찰이나 똑같이 3.1발포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조치였다. 이것으로 3.1발포사건의 항의는 48년 4월말 끝났다.⁵⁾

3.1 발포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후 남로당 5.10선거 반대 전국 2.7폭동의 연장으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 김달삼을 중심해서 제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48년 4월 3일 12개 지서를 기습하고, 우익인사와 그의 가족까지 죽이고, 5.10선거를 반대, 선거관리위원들을 죽이는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3.1 발포사건이 제주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4월 3일 우익인사와 그 가족까지 죽이고, 5.10선거는 반대하는가? 이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으로, 그 이유는 제주4.3사건은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로 정의하여 폭도들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허위 및 좌 편향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주장은 그 동안 좌파들이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다.

2) 제주 4.3사건은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남로당 전국 2.7폭동의 연장이지 3.1사건과는 관련이 없다.⁶⁾

① 남로당 중앙당의 남한 건국 5.10선거 전국 반대투쟁은 48년 2월 7일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221명이 연행된 것은 2.7투쟁 전인 48년 1월 22일이다. 진상조사보고서 146쪽에 2.7투쟁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149쪽에 고문치사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152쪽에 제주남로당 간부 221명을 연행한 것을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경찰이 고문치사도 하고 제주 남로당 간부 221명도 연행한 것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3.1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탄압 때문에 제주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48년 1월 22일 연행자 221명은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을 때 연행한 것이지 3.1발포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② 1948년 2월 7일 남로당 중앙당은 30만 명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

5) 「제주 경찰사」 504쪽

6) 진상조사보고서 147쪽

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적화통일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대구사건을 경험으로 하루 만에 진압을 하였으나 파업 30건, 맹휴 25건, 총돌 55건, 시위 103건, 방화 204건, 검거인원 8,479 명 사망 39명, 부상 133명으로 전쟁을 방불케 한 폭동이었다.

③ 제주도는 남로당 간부들이 48년 1월22일 경찰서에 연행되었기 때문에 2.7폭동에 가담하지 못하고 일부가 2일이 지난 후 48년 2월 9일-11일 제주남로당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6개의 경찰지서 습격, 뼈라살포,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폭도들의 시위 등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있어 경찰은 폭동자 290명을 연행하였다. 이 290명 연행은 2.9폭동에 가담하여 연행한 자들이지 3.1발포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④ 1948년 2월 9일 안덕면 사계리에 육지에서 파견된 최 안덕지서주임과 제주 출신 오 순경이 순찰 중 설날 전날이고 하여 송죽마을 고망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 마을 청년 이양호(25세) 임창범(28세)은 5.10선거 반대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 2명이 있자 48년 2월 9일 오전 9시 청년들과 함께 경찰관 2명을 덮쳐 칼빈 총을 빼앗고 향사로 끌고 가 마을에 머물게 된 이유를 대라고 하면서 구타하여 죽기 직전이었다. 이때 마을사람이 안덕지서에 극비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2대의 트럭에 타고 사계리에 출동하였다. 청년들은 경찰 2명을 죽음 직전까지 구타하고 진압경찰이 오자 구타한 경찰들을 향사에서 300미터 되는 권개물 쪽으로 끌고 가다 버리고 도망쳐 경찰 2명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 일로 제주 경찰은 분노하였다.

임창범의 집에서 마을주민 100여명의 남로당원 명단과 문서가 발견되어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여 주동자를 조사하자 임창범의 어머니가 이 일로 자살을 하였다. 이 사건도 3.1발포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⁷⁾

⑤ 48년 2월 10일 한림면 고산리 청년 100여명이 고산지서 앞에서 건국 5.10선거 반대시위를 하자 경찰관이 해산하라고 외쳐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신응선의 다리에 총을 쏘아 해산시켰다. 그리고 94명을 연행 조사하였다.

⑥ 48년 3월 경찰은 남한 건국 5.10선거 반대 시위자들을 연행하여 조천중학교 2학년 학생 김용철(21세) 군이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3월 6일 사망하였고, 3월 14일 대정면 영락리 청년 양은하(27세)가 모슬포지서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3월말 한림면 금릉리 청년 박행구(22세)가 서청과 경찰관에게 곤봉으로 맞고 총살을 당하여 경찰과 남로당원들은 험한 분위기였다.⁸⁾

7) 「4.3은 말한다」 1권 544쪽

8) 4.3은 말한다 1권 556쪽~557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⑦ 모슬포지서에서 양은하를 고문 치사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체포하였고, 조천지서와 모슬포지서에서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11명을 체포하여 군정재판에 기소하여 조천지서 경찰관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3년, 모슬포지서 경찰관 5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려 과잉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⁹⁾

이상의 고문치사 사건은 47년 3.1발포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2.9폭동을 해서 연행 조사하다 일어난 사건이지 3.1발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상의 사건이 3.1발포사건 때문인 것 같이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는, 4.3사건은 3.1발포사건이 기점이 되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해서이다. 무장봉기라고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주4.3 사건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하여 폭도들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문치사 사건은 4.3폭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조천중학교 2학년 학생 김용철(21세)군이 사망한 날자는 3월 6일이다. 김달삼의 4.3폭동 결정은 3월 6일 이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주4.3 폭동을 결정한 후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였지 고문치사사건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자고 한 것이 아니다.

3) 48년 1월 22일 신춘회의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 검거사건과 3.1 발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¹⁰⁾

① 48년 1월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원 김석천이 전향하여 제주남로당 간부들이 5.10 선거 반대 2.7투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알려주어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였다.

② 48년 1월 22일 김석천의 신고로 조천면 신춘리에서 남로당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곳을 경찰이 기습하여 106명을 연행하였고, 1월 26일 또 115명을 연행하여 총 22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③ 연행자 중에는 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 안세훈, 그리고 김유환, 김용관, 이좌구, 이덕구 등 간부들이 있었고, 조몽구와 김달삼은 연행도중 도망쳤다. 조사 후 63명은 훈방조치 하였고, 나머지는 48년 3월 15일 모두 석방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석방시키지 않으려 하였지만 특별한 죄가 없고, 또 남로당이 그때까지만 해도 합법정당이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고, 자유 총선거를 위하여 미군정에서 자유선거 분위기를 위해 풀어주도록 하여 3월 초까지 끝다가 모두 석방

9) 조선일보 1948년 5월 9일자

10) 진상조사보고서 152쪽

시켰다. 이로 인해 남로당 중앙당이 전국적으로 5.10선거를 반대하던 2.7폭동에 제주남로당 지도부는 가담하지 못하게 되어 제주남로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가 없고 수배자도 없어 건재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제주4.3 폭동을 주동하게 되었다. 만일 이 때 제주남로당 간부들을 석방시키지 않았다면 제주4.3폭동은 일어날 수 없었다.

④ 주한미군 육군사령부 일일정보보고서 1948년 2월 5일-6일에 의하면 1월 22일 제주남로당 조천지부(963-1153) 불법집회를 기습하여 압수한 문서를 번역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남로당 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 폭동지령 수령” “경찰 간부와 고위관리를 암살하고 무기를 노획할 것”라고 지시 하였다고 한다.

※ 이상으로 48년 1월 22일 남로당 제주지도부 221명은 2.7폭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경찰이 연행한 것이지 3.1발포사건에 관련이 있어서 연행한 것이 아니다. 위 사건이 3.1발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증거는 221명 모두 기소하지 않고 석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양은하 외 2명의 고문치사 사건은 5.10선거 반대시위를 해서 연행하여 고문 치사한 것이지 3.1사건과는 관련이 있어 연행한 것이 아니며, 4.3폭동 결정 후의 사건이다.

진상조사보고서 128쪽에 3.1사건에서 4.3사건까지 경찰이 2,500여명을 연행하였다고 하면서 4.3사건은 3.1발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였다고 허위 및 좌 편향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있을 수 없는 거짓주장이다. 그 이유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은 2,500여명을 연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500명을 연행하였다는 증거 제시도 검증되지 않은 잡지 신천지 1948년 8월 호를 인용하고 있다.

2.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주 4.3폭동을 “구국투쟁이다”라는 지지 주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¹¹⁾ 그 증거는,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534쪽 상단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 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고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상조사보고서 167쪽에 “반미 구국투쟁을 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고 한 것은,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7쪽에

11) 진상조사보고서 534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기후 사태가 거의 악화됨을 간취한 도상위는 3월 15일경 도 파견 오르그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궐기 시키는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 하였다”

는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서 주장한 그대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도 5.10선거 반대 폭동을 구국투쟁이라 하고 있다. 어떻게 5.10선거 반대 폭동이 구국투쟁이며 반미가 구국투쟁인가! 이는 좌파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다.

1) 제주 4.3사건은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¹²⁾

① 제주 4.3폭동의 목적

가. 남한 건국 5.10선거 반대

나. 반미투쟁

다. 조직 수호와 방어 수단으로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배족노들을 거꾸러뜨려야 한다.....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궐기하였습니다.”

② 제주 인민유격대 조직¹³⁾

가. 각 면에 혁명정신과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 선발하여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였다.

나. 연대와 소대 조직.

다. 제1연대= 조천, 제주, 구좌면- 3.1지대(이덕구)

제2연대= 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면 - 2.7지대(김봉천)

제3연대= 서귀, 남원, 성산, 표선면 - 4.3지대(?)

라. 특공대 - 경찰임무

마. 특경대 - 반동들의 동정 감시

12) 진상조사보고서 167쪽

13) 투쟁보고서 11쪽

바. 정치소조원 - 유격대 사상교육

사. 자위대 - 각 읍 면과 행정단위로 10명씩 조직.¹⁴⁾

4.3사건 전에는 1개면에 1개 중대까지만 조직하였으나 4.3 후 4월 15일 위와 같이 연대를 조직 보강함.

③ 제주 4.3폭동 결정에 대하여.¹⁵⁾

제주 5.10선거 반대 2.9투쟁이 한창일 때인 48년 2월 중순, 남로당 제주도당은 남로당 간부 22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직이 폭로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조천면 신촌리에서 남로당 도당 간부와 면당책임자들인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이삼룡, 김두봉, 고칠중, 김양근 등 19명이 모였다. 이 회의에서 김달삼은 5.10선거 반대투쟁을 더욱 더 강력히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무력으로 5.10선거 반대투쟁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몽구 등은 무장투쟁은 신중을 기하자고 하면서 반대하여 김달삼의 강경지지자가 12명, 조몽구의 신중론자가 7명으로 투표로서 무장투쟁이 결정 되었다.

④ 남로당 제주도당의 4.3폭동 결정 배경

가. 5.10선거 반대 무력투쟁을 하면 기폭제가 되어 전국에서 호응이 있을 것이다.

나. 경비대는 진압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다. 미군과 소련이 곧 철수하면 북한의 김일성과 남로당의 박헌영의 세력이 강하고 머지않아 49년도에는 인민군이 38선을 넘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라.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들은 무장폭동에 성공하여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하여 즉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하여 폭동을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여기 지도에는 전남 도당 조직지도 위원 오그 이명장이 참석하여 4.3폭동을 지도하였다.¹⁶⁾

2) 4.3폭동 준비에 대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은 신춘회의에서 무장투쟁이 결정되자 2월 15일부터 조직개편에 들어갔으며, 군사부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강규찬, 군사부장에 김달삼 등 간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오그 이명장은 2월 28일 육지로 갔다가 3월 15일 제주에 다시 도착하여 지도하였다.

14) 투쟁보고서 22쪽. 제주민중항쟁 1권 316쪽

15) 진상조사보고서 157쪽

16)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및 3.1사건에 가담한 김봉현의 증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① 남로당 제주도당은 48년 3월 15일 전남도당에서 파견한 오르그(조직지도위원) 이명장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였다.

가. 조직수호와 방어 수단으로서

나.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 쫓기 시키는 무장반격전을 결정한다.

다. 군사부 밑에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군사위원장에 김달삼이 취임한다.

라. 인민해방군 조직은 유격대, 자위대, 특경대로 조직한다.

마. 제주도 13개 읍과 면 중 제주, 조천, 애월, 한림, 대정, 중문, 남원, 표선 등 8개 읍·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계 320명으로 48년 3월 28일까지 편성 완료한다.

바. 무기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연막탄 7발, 죽 창, 철창을 준비 한다.

사. 48년 3월 28일 김달삼은 제주폭동을 48년 4월3일 오전2시-4시 무장 반격전을 하기로 연장 결정하였다.

아. 마을마다 자위대를 조직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¹⁷⁾ 4.3폭동 암호는 콩과 팥이었다.

자. 남로당 중앙당은 47년 7월에 군사부를 신설하였고, 그 군사부 하부에는 특수행동대가 있어서 그 노선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 제주 도의 인민유격대이다. 남로당 제주위원회의 인민유격대 즉 공비들의 주요 목표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 의원선거를 저지하는 것이다.

※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조선사회주의 운동사 사전 및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있는 유용한 내용은 그대로 인용하고 불리한 것은 인용하지 않았다.

3) 제주인민유격대 포고령(48년 4월 10일 인민해방군 제5연대)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 단정을 죽임으로써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 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UN조사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에 철퇴시켜 간섭 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 인민해방군의 목적 달성을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하려는 극악 반동분자는 엄벌에 처

17)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17쪽

함.

-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 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 친일파 민족반역 도배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관 대청원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 전 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¹⁸⁾

우와 여히 전 인민에게 포고함.

단기 4282년 4월 10일
해방지구 완전지대에서
인민해방군 제5연대

위의 문건은 제주인민유격대가 뿌린 선전 전단지인데 48년 4월 15일 당시 인민유격대 제5연대는 편제에는 없었으나(이것은 인쇄할 때 오자인 것 같음) 이들의 투쟁 목표가 잘 나타난 문건이다.

※ 제주4.3폭동 목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였다.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주 폭도들과 진압군을 같은 위치에서 무장충돌이라고 작성한 것은 절대 잘못이다.

※① 이상과 같이 제주 4.3사건은 목적과 조직과 무기를 가지고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하여 인민군으로 조직 경찰지서 12개를 기습 공격하여 경찰과 우익 인사까지 죽인 것은 폭동이요 내란이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는 ‘폭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무장대’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이나 폭동이라고 하지 않고 그동안 좌파들이 주장한 대로 “무장봉기다” “구국투쟁이다” “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하고 있다. 폭동은 즉시 진압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다. 그런데 “진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등한 위치의 “무장충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북한과 남한이 38선에서 싸움을 할 때 “무장충돌”이라고 할 때 쓰는 용어로, 제주인민군 즉 남로당 제주도당(공산주의 단체)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공산국가의

18) 김봉현·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 투쟁사」문우사 1963, 84쪽~85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산하기관으로 보는 용어이다. 그래서 위 진상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민공화국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 증거로 49년 군법회의 재판과 2001년 헌법소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② 3.1절 발포사건이 제주 4.3사건의 도화선이고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항거한 것이라면 어째서 우익인사 가족까지 죽이고, 5.10선거 지지자를 죽이고, 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8.25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공격했는가? 제주 4.3폭도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찰과 우익 가족까지 죽이고 국군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제주 4.3사건은 내란이며, 폭도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저지하였고, 이덕구의 9.15사건은 대한민국을 타도하려고 국군을 공격하였다.
- ③ 48년 10월 24일 이덕구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것은 제주 4.3사건이 내란임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9연대 군법회의 판결문의 죄명도 내란죄이다.

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무장봉기라고 하였는데 이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으로 무장봉기가 아니라 폭동(내란)이다.¹⁹⁾

진상조사보고서 167쪽과 534쪽 상단에 “1948년 4월3일 새벽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중지와 단선 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무장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이다.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도 「제주인민유격대」또는 제주인민군이라 하여 스스로 반란군임을 입증하고 있다.(이하 제주인민군) 즉 「제주인민유격대 즉 제주인민군」이라는 말은 곧 “내란군”이라는 말이다.²⁰⁾ 그 증거는,

1)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내란)

① 제주 4.3폭동 가담 인원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한라산 중턱의 수산봉 고내봉 파군봉 등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자 이것을 신호로 김달삼이 사령관이 되어 자정을 기해 30여명이 99식 소총으로, 400여명은 죽창과 철창으로 무장을 하고 새벽 2시부터 400여명과 협조자 1,000여명이 경찰과 서북청

19) 진상조사보고서 534쪽

20) 투쟁보고서 81쪽~82쪽

년 숙소와 제주도내에 있는 24개 지서 중 12개 지서를 기습 공격하였고, 이에 앞서 우익인사의 집을 기습 공격하여 제주 4.3폭동이 발생하였다.²¹⁾ 이날 폭도들의 동원 수는 폭도 400여명, 협조원 1,000여명 합 1,400여명이었다.

② 폭도들 12개 지서 공격

신엄지서 송원하 순경이 폭도들의 칼과 죽창에 여덟 군데나 찔렸으나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다. 그러나 송원하 순경 부친은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남원지서 협조원 방성화는 즉사하였고, 김석훈은 도끼에 맞아 팔이 잘렸고, 고일수 순경은 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방성언은 부상을 당하였다. 폭도들은 무기고에서 총과 실탄을 탈취하여 도망쳤다.

세화지서에서는 황 순경과 김 순경이 부상을 당하였고, 대정지서는 경찰관 이무웅 순경이 중상을 입었고, 조천지서는 양창국, 유 순경이 부상을 당하고, 화북지서 에서는 협조원 이시성이 불에 타 죽었고, 폭도들은 김장하 경찰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고, 지서에 불을 질러 지서가 전소 되었다. 외도지서에서는 선우중태 순경이 총에 맞아 즉사 하였다.

③ 폭도들 양민 학살

4월 3일 자정을 전후하여 먼저 애월면 구엄마을 우익인사 문영백의 집을 폭도 100여명이 기습하여 문영백이 도망치고 없자, 큰딸 문숙자(14세), 둘째딸 정자(10세)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데도 잠옷차림의 두 소녀를 폭도들은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문기찬(33세)도 죽창으로 찔러 죽였고, 문용준도 죽창에 찔려 며칠 후 죽었다. 또 임신 중인 고칠군의 처는 폭도들의 몽둥이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문창순(34세)은 죽창에 찔려 죽었다.²²⁾

새벽 2시 한림면 한림리 서청원들이 숙식하고 있는 한림여관과 경찰숙소를 40여명의 폭도들이 기습하여 이북 출신 김록만 순경이 죽고, 경찰 김순만 순경 외 2명이 중상을 당하고, 이 여관에 투숙하였던 제주 9연대 김익렬 연대장 외 경비대원 5명이 기적적으로 탈출하였다.

제주감찰위원장 현주선(46세)은 폭도들의 칼에 세 군데나 찔렸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총무 강한봉, 간부 김창우 박창희도 같은 시간에 기습을 받아 부상을 당하였으나 목숨만은 살아났다. ²³⁾

④ 폭도들 우익 청년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학살하였다.

48년 4월 4일 폭도들은 연평리 대청단원 오승조(36세)를 죽였고,

21) 투쟁보고서 30쪽.(한국전쟁사 437쪽에는 무장병력 500명, 협조자 1,000명 합계 1,500명이라고 하였다.)

22) 4.3은 말한다 2권 28쪽

23) 4.3은 말한다 2권 30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4월 6일 이호리 대청총무 이도연(37세), 단원 양남호(32세)를 대청 간판과 사무실을 부수며 “대청 활동과 5.10선거 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서 죽였다.

4월 7일 한림면 저지마을 대청 대원 김구원, 김태준, 고창윤 등이 죽었고,

4월 13일 제주읍 화북지서에서 유격대의 총에 맞아 임선길 순경이 죽었고,

4월 17일 조천면 선흘리에서 대청단원 부동선, 부용하, 고평지 등이 죽었고,

4월 18일 신촌에서 경찰관 김성호의 부친 김문봉(64세)을 살해하였고, 박운봉 경위 5촌인 박영도(40세 애월 면사무소 서기)를 죽이는 등 폭도들은 같은 도민을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학살하였다.²⁴⁾

※ 1948년 4월 3일 폭도들이 이상과 같이 경찰과 우익과 그 가족까지 잔인하게 죽인 살인 만행이 폭동이 아니고 어떻게 경찰에 항거한 무장총돌이고 무장봉기라고 하는가? 경찰에 항거하여 무장봉기한 것이라면 경찰에 항거를 해야지 10세 문정자와 14세인 문숙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을 이상과 같이 학살하였는가? 이들은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장총돌이라고 하였는가?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이토록 폭도들의 살인 만행 폭동을 경찰에 항거한 무장봉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폭도들의 살인 만행과 학살에 대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위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히 과오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경찰관과 우익을 죽인 것은 정당한 것인가? 이는 있을 수 없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가짜보고서이다.²⁵⁾

4. 제주 4.3폭동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없다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주장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²⁶⁾

1) 제주 4.3폭동이 남로당 중앙당 지령이 없다는 주장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그 증거는,

진상조사보고서 164쪽 “파견원이 최후적 지시를 가지고 국경(국방경비대) 프락치를 만나러 갔던 바, 프락치 2명은 영창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횡적으로 문상길 소위를 만났던 바, 이 동무의 입을 통해서 국경(국방경비대)에는 이중세포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 중앙 직속의 정통적 조직이며, 또 하나는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출신 프

24) 4.3은 말한다 2권 67쪽

2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536쪽

26) 진상조사보고서 164쪽

락치의 조직이었음. 그래서 4.3투쟁 직전에 고 하사관이 문 소위에게 무장투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니 경비대도 호응 꺾기해야 한다고 투쟁 참가를 권유했던 바, 문 소위가 중앙 지시가 없으니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고 함. 그래서 제주 4.3사건은 중앙당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단서가 된다²⁷⁾ 고 하면서 중앙당의 지령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주장이다. 그 증거는,

① 위의 내용에도 “국경에는 이중세포가 있다는 것. 그 하나는 문 소위를 중심으로 중앙 직속의 정통적 조직이며, 또 하나는 고승옥 하사관을 중심으로 제주도출신 프락치 조직이 있었음”하였다. 남로당의 국방경비대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장교는 중앙당에서 지령을 내리는 선이 있고, 또 다른 한 선인 하사관은 도당에서 관리하는 두 선이 있다.²⁸⁾

② 남로당은 하사관은 도당에서 관리하고 장교는 중앙당에서 관리를 함.(조선사회주의 운동사 사전)

③ 하사관이 반란에 성공하면 중앙당은 반란 성공 후 장교에게 지령을 내려 반란에 참여하게 함.

④ 이는 장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4연대 반란 때도 48년 10월 19일 하사관 지창수 상사가 반란에 성공했을 때 장교 김지회 중위가 지창수를 찾아가 반란의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지창수에게 죽을 번 한 일이 있을 정도로, 김지회는 중앙당에서 지령이 없어 몰랐다가 48년 10월 20일 중앙당 간부 문화부장 이현상의 지령을 받고 14연대 반란군 사령관이 된 것이 가장 좋은 증거이다.

박갑동은 남로당의 군사부 내 공작은 장교에 대한 것은 중앙당 조직부 특수공작 과에서 담당하고, 하사병사는 각 도당 특수공작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⁹⁾

⑤ 남로당 군 침투공작은 이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장교는 당 중앙부가, 사병은 지방당부가 관리하였다. 중앙당이 장교를 관리한 것은 장교의 선발과 교육, 배치 등의 권한이 중앙사령부에 있고,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이며, 도당에서 사병을 관리하는 것은 사병 모집이 도 단위로 행해지고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³⁰⁾

⑥ 제주 4.3폭동은 이미 남도당에서 48년 3월 15일 전남 당부에서 제주도 당부로 오르기 이 동무를 파견, 무장지령을 내렸다고 투쟁보고서 10쪽과 76쪽에 명시되어 오르기 이명장이 참여 지도하였고, 전남도당의 참여는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이지, 중앙당의 지령이 없는데 전

27)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77쪽

28) 해방전후사의 인식 3권 1987년 한길사 421쪽
김남식「남로당 연구」1984년 돌베개 379쪽

29) 박갑동 저 「통곡의 언덕에서」1991년 서당, 285쪽

30) 황남준 「해방전후사의 인식 3권」 421쪽, 1987년 한길사
김남식 「남로당 연구」379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남도당 오르그가 제주도당에 참여하여 지도할 수는 절대 없음.

투쟁보고서 10쪽에 “3.1사건 후 고승옥이 4명을 국방경비대 프락치로 입대시킨 후 그 해(47년) 5월 제주에 온 중앙 올구 이명장 동무를 통해 전남당부에 가서 그 지도 문제와 활동방침을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상부의 지시 하에 움직이는 것이 남로당 좌파 조직체계이다.

⑦ 이토록 국가적인 5.10선거 반대 폭동을 일으키는데 중앙당의 지령 없이 김달삼을 중심으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들만이 결정은 절대 할 수 없음.

1949년 1월 19일 14연대 반란 수사관 특무대 김창룡 대위가 이재복을 체포하여 빈철현 대위와 같이 조사할 때 이재복이 조경순을 통해서 김달삼에게 48년 2월 초순 폭동을 지령하였다고 하였고, 이재복의 레포 인 전남도립병원 간호사이며 김지회의 애인인 제주출신 조경순이 이재복의 지령을 김달삼에게 전해 주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시인하였다고 빈철현 대위가 증언하고 있음.

⑧ 제주인민유격대가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25선거는 참여하였다는 것이 중앙당의 지령인 증거로, 5만2천 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제주도 안세훈·김달삼 외 4명이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것이 중앙당 지령에 의해서 5.10선거 반대 폭동을 일으킨 증거이다.

5.10선거는 소련과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 대표 박헌영이 반대하여 유엔에서는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 만이라도 선거를 하도록 한 선거이다. 일개 도당인 제주도당이 중앙당의 지령 없이 자발적으로 단독으로 5.10선거 반대 폭동을 일으켰다는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있을 수 없는 허위주장이다.

⑨ 제주4.3폭동 당시 인민유격대 간부로 활동하였던 김봉현은 1919년 한림면 금악리에서 출생, 일본 공산당 출신이며 해방과 함께 제주에 와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제주도당에서 이덕구·조몽구와 같이 핵심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이며, 47년 2월 민전 조직 때 문화부장을 역임한 자로서 그가 제주4.3폭동 40주년을 맞아 1988년 5월 일본의 문예지 민도 기자와 인터뷰 하었는데 그는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소상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는 중앙당 파견 오르그 천검산이 남로당 제주도당을 지도하였다고 하였다. 김봉현은 제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주남로당 조직은 3.1사건 후 더욱더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년까지도 남로당 전남도당의 지도를 받고 있어 광주로부터 지령문을 받았다. 이 지령문은 남로당원이 경영하는 칠성통의 모자점이나 약방의 물품 반입 과정에서 끼어 들어왔다.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는 이러한 지령문을 놓고 다시 협의를 거쳐 읍·면의 연락책을 통해 담배개비 속에 지령문을 넣어 지방세포에게 전달하였다.³¹⁾

중앙당의 지령은 극도의 보안유지상 서면으로 한다. 연락책을 통해 지시하는 것은 즉시 폐기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⑩ 48년 2월 7일 남로당원 30만 명이 동원되어 5.10선거 반대 폭동을 일으켰다. 제주도는 48년 2월 9일 폭동을 일으킨 그 연장이 4.3폭동이다. 5.10선거 반대는 북한의 김일성, 남로당의 박헌영 그리고 남로당의 정책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선거를 반대하여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무산시킨 것이 중앙당의 지령의 증거이다.

이상으로 보아 제주남로당은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제주4.3폭동을 일으켰다.

⑪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한국전쟁사」1권 해방과 건국(1968년)에서 “남로당 특별공작책임자이며 군내 적화 총책임자인 이재복(1949.1.19 체포, 46세. 평양신학교 32회 졸업. 영천제일교회 목사. 46년 10.1 대구폭동 가담. 49년 12월 처형)은 제주도 폭동에 이어 본토 내에서 반란을 야기시킴으로서 국군의 토벌병력을 단절 또는 분산시켜 우선 제주도의 위기를 감소시키려 하였고, 본토 내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군인적인 호응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전격적인 토벌작전으로 제14연대의 반란군은 조기에 각개격파 당하여 입산 공비화 하였고, 뒤따라 전군적인 대숙군이 단행되어 그들의 군내조직이 발본됨으로서 남로당이 3년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던 꿈은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기술하여³²⁾ 제주4.3폭동, 14연대 반란, 대구 6연대 반란사건이 “이재복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근거는 14연대 반란사건을 김창룡 이하 수사관들이 이재복을 조사한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⑫ 가. 투쟁보고서 1948년 3월 15일 전라남도 당부에서 제주도 당부 로 “오르그”이 동무를 파견 무장반격 지령과 함께³³⁾

나. 도당부상위에서는 이상 도당부의 지령을 받고 같은 해 3월 15일 도 파견 “오르그”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첫째, 당의 조직 수호와 방어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전도민을 꺾기시켜 무장반격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준비 및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 준비기간

48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민유격대 폭동을 3월 25일까지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3월 28일 모여 준비 부족으로 48년 4월 3일 폭동을 일으킨 것이며,³⁴⁾ 여기 이명장은 남로당 중앙당 간부이다.³⁵⁾

31) 4.3은 말한다 1권 529쪽

32)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89쪽

33) 투쟁보고서 10쪽

34) 투쟁보고서 10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제주 4.3폭동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한 폭동이다.

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제주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 측 김달삼과의 4.28 평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은 우익 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라는 주장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오라리 방화사건 때문에 4.28 평화 협상이 깨진 것이 아니다.³⁶⁾ 그 증거는,

1) 1948년 4월 28일 정오 김익렬 9연대장은 제주인민군사령관 김달삼과 만나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 대정면 구역리 구역초등학교에서 만나 협상이 되었고, 이 내용을 제주 미군 제59군정 맨스필드 대령에게 보고하였다.

2) 48년 4월 28일 협상을 해놓고, 29일 제주인민군은 제주읍에서 2킬로 떨어진 오라리 연미마을 대동청년단장 박두인과 부단장 고석종을 납치하여 죽였는데 그 시체는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였고,³⁷⁾

4월 30일 오전 8시 대청단원 부인인 강공부(23세) 임갑생(23세)이 제주인민유격대에 납치되어 마을에서 1킬로 떨어진 민오름으로 끌려가 오후 5시까지 소나무에 묶여 있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임갑생이 끈을 풀고 도망쳐 출동한 경찰을 만나 폭도들에게 끌려간 내용을 설명하자 경찰은 민오름을 뒤졌으나 납치된 박두인과 고석종은 찾을 길이 없고 강공부는 죽어 있었다.

경찰 수사관과 미군 방첩대는 출동한 경찰과 임갑생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익렬과 김달삼의 4.28 평화협상은, 협상 다음 날 제주인민유격대가 4명을 납치하여 3명을 학살하였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이미 깨졌고, ‘김달삼이 김익렬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⁸⁾ 이렇게 되어 4.28 평화협상은 폭도들에 의해 깨진 것이다.³⁹⁾

3) 5월 1일 오전 9시 전날 폭도들에게 무참히 죽은 임신 중이었던 강공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우익청년 30여명이 오라리마을 폭도라고 지목된 집 5세대 12채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들은 오후 1시경 제주읍을 향해 마을을 출발하였다.

35) 투쟁보고서 9쪽

36) 진상조사보고서 191쪽

37) 4.3은 말한다 2권 150쪽

38) 투쟁보고서 78쪽

39) 4.3은 말한다 2권 151쪽

4) 진상조사보고서 198쪽 “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였다는 세칭 오라리사건이 벌어지고, 5월 3일에는 미군이 경비대에 총공격을 명령함에 따라 협상은 깨어졌고, 이후 4.3사건은 견잡을 수 없는 유혈충돌로 치달게 되었다.”고 허위 및 좌편향적으로 주장하면서 경찰과 우익과 미군 때문에 평화협상이 깨지고, 4.3사건이 확대 되었다고 뒤집어씌우고 미군을 규탄하고 있다.

짐승도 새끼를 배면 보호를 해준다. 하물며 산달이 가까운 임신부를 산으로 끌고 가 죽여 놓고, 그 임신부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화가 나 불을 질렀는데 협상을 파기한 원인을 먼저 임신부를 죽인 폭도들이 아닌 오히려 임신부의 장례를 지내고 불을 지른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 이상과 같이 폭도들은 28일 협상해놓고, 29일 우익청년 2명과 30일 우익청년 부인 2명을 납치하여 세 명을 죽여서 협상이 깨진 것이지 5월 1일 방화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다.⁴⁰⁾ 그리고 폭도들은 제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김익렬을 이용한 것이지 협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유력한 증거는 북한의 8.25선거에 52,000여명이 투표를 한 것이다

6.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박진경 연대장이 강경진압을 하여 죽였다고 주장 하는데, 박진경 연대장은 강경진압을 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⁴¹⁾

1) 48년 5월 6일 김익렬 연대장이 폭도들 진압에 소극적이며, 폭도 사령관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하였으나 이용만 당하였고, 5월 5일 대책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육박전을 함으로 9연대장 직에서 해임되고 게릴라전에 조예가 깊고 제주도 지리를 잘 아는 박진경 중령이 9연대장에 부임하였다.⁴²⁾

박진경 연대장이 9연대장에 부임한 후 제주4.3폭동을 완전히 파악한 결론은, 산으로 도피한 자는 하산하도록 선무활동을 한 후 그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체포하여 수용소 안에 수용하고, 폭도들과 협조자를 찾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고 합법적이고 빠른 시일에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박진경 연대장은 산에서 내려오도록 선무활동을 한 후 산

40) 4.3은 말한다 2권 155쪽

41) 진상조사보고서 219쪽

42)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0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에 있는 산사람에 대해서는 폭도로 간주하고 무조건 체포명령을 내려 48년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3,126명을 체포하고 경비대에 저항하는 자 8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연행자를 조사하여 500여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설득하여 훈방조치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박진경 연대장은 법대로 처리하였지 제주 사람들을 죽이는 강경 진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⁴³⁾

2) 박진경 연대장이 폭도들을 무참히 죽이지 않고 체포하여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합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여 제주도민들의 인명 피해를 적게 하고 진압에 효과가 있었다.

48년 5월 20일 김달삼의 지령을 받은 9연대 문상길 중대장은 9연대 1대대 소속 하사관을 시켜 “특수야간훈련이 있다”하고 대정출신 강기창과 성산면 강정호, 남원 김태홍 등이 뭉쳐 트럭 1대에 하사관 11명과 사병 30명 계 41명이 트럭을 타고 모슬포 부대를 탈영하여 2킬로 떨어진 대정지서에 밤 11시30분에 도착하였다.

대정지서는 경찰 9명, 협조원 4명 계 13명이 지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탈영병들이 서덕주·김문학·이환문·김일하 순경과 보조원 임건수 등 5명을 총을 쏘아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지서주임 안창호와 허태주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중상을 입었고, 소형원·송순옥·김정남 등은 도망쳐 무사하였다.

이들 41명은 실탄 5,600발을 가지고 탈영하였으나 다음날 박진경 연대장의 포위작전에 20명이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21명은 폭도들과 합세하였다.⁴⁴⁾

3) 박진경 연대장이 강경진압을 하여 죽였다고 손선호의 최후진술을 그대로 진상조사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그 증거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일에 폭도사령관 김달삼과 9연대 남로당 프락치 대대장 오일균 소령과 연대 정보관 이윤락 중위와 제주남로당 조직부장 김양근과 대책회의에서 “대대 반동의 거두 박진경 연대장과 반동 장교 숙청”할 것을 합의하였다. 5월 10일은 박진경 중령이 9연대장에 부임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아 진압작전을 한 일이 없다. 박진경 연대장이 김달삼에게 협조할 것 같지 않자 아예 죽여 버리기로 합의하였다.⁴⁵⁾ 이 합의에 의하여 문상길 중대장은 양희천 상사, 손선호 하사, 신상우·강승규 중사, 배경용 하사를 선동하여 48년 6월 18일 새벽 3시경 잠을 자고 있는 박진경 연대장에게 총을 쏘아 암살하였다.

부하가 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은 어떤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4.3 진상조사보고서

43) 1948년 5월 27일 통위부 담화문 발표

44) 4.3은 말한다 3권 118쪽

45) 제주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78쪽~80쪽

227쪽에 박진경 연대장이 강경진압을 해서 죽였다는 살인자 손선호 하사의 최후진술을 은근히 강조하고 암살자를 비호하고 있다.

문상길 중위나 신상우 하사나 김양 변호사의 발언과 재판기록에 의해서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 인용을 해도 그들의 주장을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문을 인용하여 살인범을 옹호하는 진상조사보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규탄하고 연대장을 암살한 자를 비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이는 인민공화국에서나 할 수 있는 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4.3사건 진상조사 수석전문위원인 양조훈 씨가 공저한 「4.3은 말한다」3권 218쪽에서 박진경 연대장에 대해 “제주도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산화한 창군 영웅이란 시각과, 다른 하나는 미군정 시절에 출세하기 위해 무차별 토벌을 강행한 민족반역자란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⁴⁶⁾ 라고 박진경 연대장을 표현하여 박진경 연대장이 민족반역자도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은 좌익에서 본 시각으로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박진경 연대장을 민족반역자로 볼 수 있다면, 송요찬·함병선과 국군과 경찰과 이승만 대통령까지 반역자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반역 국가로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시각을 갖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양조훈이 현재 제주도 부지사이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다 총살하였다.” 하면서 그 책임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송요찬·함병선, 그리고 진압군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민족반역자로 만든 보고서이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판결문과 법원의 판결문이나 제주4.3사건 특별법도 인정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즉 노무현 정부는 좌파정부라고 하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진상조사보고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7. 제주4.3 폭동 주동자들은 남한의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25선거에 적극 참여하였다.⁴⁷⁾

1) 제주 남로당 대표 북한 최고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

1948년 8월21일~26일 해주에서 개최되는 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남조선 대표 360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주도 대표 안세훈·김달삼·강규찬·이정숙·고진희·문등용 등이 제주 해안을 경비

46) 4.3은 말한다. 3권 218쪽

47) 진상조사보고서 236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대가 철통같이 경계하는 데도 8월 2일 제주를 출발하여 38선을 넘어 해주에 도착하였다. 36명의 주석단의 명단에 김달삼도 있었고, 김달삼은 김일성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국기2급 훈장과 영웅칭호를 받았다.

2) 제주4.3 폭동 주동자들은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25선거에 적극 참여하였다.

1948년 8월 25일 조선 최고인민회의에 남조선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이 대의원을 뽑기 위해 밤마다 인민공화국이 되어 투표하였는데, 5.10선거 제주 총유권자 85,517명 중 52,000여명이 8.25선거에 참여 하였다고 김달삼이 해주 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그 증거물로 5만2천 장의 투표한 용지를 제주도에서 해주까지 가지고 가서 대의원들에게 보였다. 이는 제주도민 61%가 참여한 것이다. 김봉현은 72,000여명이 투표해서 85%가 참여하였다고 하였고, 김달삼은 북한에 가서 연설할 때 제주도민 85%가 지지하였다고 하였다.⁴⁸⁾ 이 북한 8.25선거는 남한 전 지역에서도 있었다. 결국 제주 남로당 폭동 주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5.10선거는 무력으로 반대하여 2개 선거구를 무산시키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61%인 52,000여명이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 이상으로 보아서 제주 폭동 주동자들은 북조선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무슨 민중봉기라고 거짓주장을 하는가! 낮에는 대한민국이었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었다. 이것으로 제주 4.3폭동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으킨 2.7폭동의 연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하기 위한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폭동임을 입증하였다. 제주 4.3폭동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이상으로 보아 어떤 명분에서도 제주도 4.3사건을 무장충돌이니, 무장봉기라고 할 수 없다.⁴⁹⁾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에서 ‘제주4.3사건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노력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제주4.3사건 행사 때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였다.

좌파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행사가 있을 때 태극기에 대해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를

48) 김봉현·김민주 앞의 책 153쪽~154쪽

49) 「4.3은 말한다」3권 258쪽

원하는 자들이다.

8.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된 이유는 이덕구의 9.15사건 때문이다.⁵⁰⁾

1)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에 진압군의 무차별 강경진압 때문에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으로 이는 허위주장이다. ⁵¹⁾ 그 증거는,

① 제주인민군사령관 이덕구의 살인 만행

김달삼이 북으로 가자 이덕구가 제2대 제주도 인민군 사령관(폭도사령관)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48년 7월 말 제주도가 조용하여 진압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제주도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⁵²⁾ 그런데 평온한 제주도에 이덕구가 제주인민군 사령관이 되면서 9.15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덕구와 내란 주동자들은 48년 9월 15일 밤에 중문면 도문리에 살고 있는 문두천을 찾아가 대창과 칼로 난자하여 죽이고,

9월 18일에는 성산면 고성2구 민보단장 김만풍을 죽이고 폭도들이 이장을 찾아갔다가 이웃에 사는 양민 오만순을 이장으로 잘못알고 칼로 찔러 죽였다.

48년 9월 25일 구좌면 김녕리 특공대장 박인주도 마을 내 장례식에 갔다가 폭도들의 칼에 찔려 죽었다. 이때 폭동 주동자들은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나라 건설에 힘쓰고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말을 듣고 협조하라.”고 하였다. ⁵³⁾

48년 10월 1일 도남리 장례식에 나타나 대동청년단장 정병택(22세)과 그의 아버지 정익조(50세), 같은 마을사람 김상혁을 폭도들은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리고 대동청년단원 4명을 납치해 갔다가 그중 3명은 죽이고, 한 명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48년 10월 1일 이덕구는 중문면 도순리에 주둔하고 있던 정찬수, 박홍주, 최영규, 김병호 등 5명의 순경들을 죽이고 2명을 납치하였으며, 이 기습으로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였다.

48년 10월 6일 구좌면 김녕리 부근에서 20명의 경찰과 40명의 폭도들과의 사격전이 벌어져 경찰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0월 7일에는 200여명이 조천지서 앞에서 시위도 하였다.⁵⁴⁾

50) 진상조사보고서 241쪽

51) 진상조사보고서 241쪽

52) 4.3은 말한다 4권 30쪽

53) 「4.3은 말한다」4권 30쪽

54) 「4.3은 말한다」4권 36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 48년 9월 15일에는 5.10 선거도 끝나고 8.15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고, 북에도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주인민유격대가 무력으로 이토록 경찰과 우익인사를 죽이고 경찰을 기습한 9.15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제주도를 공산화하려고 한 사건이다. 이상의 사건도 무장폭동이 아니고 서청과 경찰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란 말인가! 이상의 사건을 보고서에서 싹 빼버린 이유는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함이다.

② 제주도 경비사령부 신설

이상의 보고를 받은 송요찬 9연대장은 깜짝 놀라 폭도 토벌에 들어갔고, 정부에서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사령관에 제5여단장인 김상겸 대령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여수에 있는 14연대 1개 대대를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도록 이동명령을 내렸다.

※ 그런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이덕구의 살인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신설한 것만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⁵⁵⁾ 이덕구의 만행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 양민을 집단으로 총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③ 여수 14연대 반란

이덕구의 9.15사건이 제주도에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여수에 있는 14연대 1개 대대에 10월 18일 제주도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전남도당은 여수인민위원회로 연락하고, 여수인민위원회에서는 14연대 안의 남로당원 지창수 상사에게 지령을 내려 반란을 일으키게 하여 제주도 폭동 진압을 못하게 하였다.

48년 10월 19일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반란을 일으킨 여수 14연대 안의 남로당원 지창수 상사 외 40명의 남로당원들은 김일영 대대장을 비롯한 장교 20여명과 반란에 저항한 하사관과 사병 43명을 죽였고, 지창수 상사가“우리는 제주도에 진압하러 가지 않겠다. 우리는 경찰과 싸우자”하는 구호에 의해 14연대 전체가 반란군이 되었다. 이 반란군은 여수·순천·보성·광양을 점령한 후 구례를 향해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광주 4연대 일부와 마산 15연대 연대장 최남근 중령, 대구의 6연대가 반란에 가담하여 국군

55) 진상조사보고서 262쪽

15개 연대 중 5개 연대 일부가 반란에 가담하였고, 국군 안에 남로당원들이 1만여 명이 넘게 있어 이승만 정부가 남로당에 의해 전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⁵⁶⁾

48년 11월 3일 구례군 파도리에서 14연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진압군 12연대 김두열 소위 중대가 반란군에 의해 90여명이 포로가 되었고,

48년 11월 4일 구례군 산동마을에서 진압군 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이 반란군 포위망을 뚫지 못해 자살하여 국군과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48년 11월 5일 연대장을 찾기 위해 구례에서 남원으로 가다가 화엄사 근방에서 진압군 12연대 2대대가 반란군 매복에 걸려 국군 50여명이 전사하고 80여명이 또 포로가 되어 국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와 반대로 반란군과 제주도 폭도들의 사기는 충천하였고, 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반란군을 지원 차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제주 폭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신생 대한민국이 금시 전복되는 줄 알고⁵⁷⁾ 제주 폭도들은 국군을 공격하여 진압군이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⁵⁸⁾

48년 11월 2일 남로당 경북도당이 무너져 중앙당 군사부장 이재복이 직접 지령하여 대구 6연대 안에서 이정택 상사 외 좌파들에 의해 또 반란이 일어났다.

48년 11월 14일 박헌영의 강동정치학원 출신 180여명이 북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38선을 넘어 오대산에 침투하여 반란군과 합세하기 위하여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 폭도들과 협조자들은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와 대한민국이 금시 망하고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공산국가가 곧 실현되는 줄 알았고, 또한 폭도들은 협조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여 협조자들은 열성적으로 폭도들에게 협력하였다. 제주 폭도들은 무모하게 국군에도 공격하여 엄청난 희생을 자초하였다.

신생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과 육본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만일 미군이 한국에 없고 북한의 인민군 일부가 38선만 넘었다면 한반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공산국가가 되고도 남았다.

48년 11월 5일 백인엽 12연대 부연대장은 연대장이 자살하고 2대대가 대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부대원을 이끌고 군산에서 구례에 도착하여 14연대 반란군 사령관 김지회와 정면대결의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만일 백인엽 12연대가 반란군에 패한다면 힘 있는 자에게 대세가 기울 듯이 전국의 남로당원 1만여 명이 전군에서 반란을 동시에 일으킨다면 신생 대한민국의 전복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박헌영과 김삼룡과 김달삼과 이덕구는 이것이 목표였다. 그러므

56) 「한국전쟁사」 1권 451쪽.

57) 4.3은 말한다 3권 171쪽

58) 「한국전쟁사」 1권 475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로 백인엽 소령의 12연대와 김지회 중위의 14연대 반란군과의 전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결정될 최대의 위기였고, 11월은 신생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달이었다. 미군은 철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골치 아픈 남조선에서 빨리 철수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14연대 반란으로 철수가 늦어지고 있었다.

백인엽 부연대장은 구례초등학교에 연대본부를 두고 김지회 반란군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8년 11월 7일 새벽 4시 14연대 김지회 반란군 800여명이 구례초등학교에 있는 진압군 12연대를 포위 공격해 왔다. 김지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백인엽 부연대장은 전 병력으로 반격하여 2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4연대 반란군이 대패하여 14연대 반란군 잔당들은 지리산 문수리로 숨어들어가 유격대가 되어 다시는 구례 근방에 얼씬거리지 못하였다.

12연대가 대승하자 구례·남원·하동 산청 주민들이 국군에 협력하게 되었고, 남로당이나 군안의 좌파들이 주춤하였고, 제주 폭도들도 진압군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48년 11월, 12월, 49년 1월에 제주도 폭도들과 협조자들이 많이 처형되었다.⁵⁹⁾

④ 9연대 안의 남로당원 강의현 소위 반란에 실패

14연대 반란이 성공하자 48년 10월 28일 제주도 9연대 구매과장 강의현 소위(육사4기), 박격포 소대장 박노구 소위가 주동이 되어 송요찬 연대장과 우익 장교들을 죽이고 부대를 장악, 반란군이 되어 폭도들과 합류하여 제주도를 완전히 공산화하려다 사전에 송요찬 연대장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이 일에 가담한 자는 남로당 세포원 장교 6명, 사병 80명이었다.⁶⁰⁾

⑤ 제주 남로당원 경찰 제주 적화음모 실패.

48년 11월 1일 제주경찰 11명과 도청·법원·경찰청·읍사무소·해운국에 속해 있는 75명의 남로당원들이 새벽4시 경찰서 안에 있는 간부를 죽이고 경찰서를 점령하고 9연대와 폭도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 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75명 전원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이덕구 이하 폭도들은 14연대 반란의 성공으로 사기가 충천하여 제주도를 공산화 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왔다. 이상의 사건으로 제주 4.3폭동은 제주도를 공산화 하려는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내란임을 입증하였다.⁶¹⁾

⑥ 제주 폭도들 국군 6중대를 공격

한림면에 9연대 2대대 6중대가 폭도들을 토벌 중에 있었다.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권 478쪽. 서울, 동아출판사 1967년

60) 「4.3은 말한다」 4권 119쪽, 136쪽

61) 「4.3은 말한다」4권 134쪽

48년 11월 2일 구례에서 14연대 반란군과 12연대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제주 폭도들은 6중대를 낮에 집중공격을 하고 산으로 도망쳤다. 6중대원들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가 폭도들의 매복에 걸려 6중대장 이하 14명이 전사하였고,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였다.⁶²⁾

2대대장은 3중대장에게 폭도 토벌을 명령하였다. 3중대도 폭도들의 매복에 걸려 중대장이 쓰러지자 사병들은 기관총과 무기 다수를 버리고 도망쳐 폭도들의 무기가 더욱 더 보강되었다. 3중대장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7명의 장병이 전사하였고 많은 수가 부상당하였다.

2대대장은 5중대장 이근양 대위에게 폭도 토벌을 명령하였다. 이근양 중대장은 11월 3일 새벽 6시 30분 폭도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 포위 공격하였다. 시체를 확인하니 폭도 100여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 조사하였다. 포로들의 자백으로 제주인민군의 보급창, 무기 수리 공장, 식량창고, 폭도들의 아지트와 조직과 인원을 처음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송요찬 연대장은 국군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폭도들의 아지트를 기습 공격하였다. ⁶³⁾

※ 국군은 하루 만에 중대장 이하 21명 죽고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제주4.3폭동이 확대되어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제주인민군과 협조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국군이 폭도들에 의해 하루 만에 21명의 국군이 전사한 이상의 사건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양민을 초토화 작전으로 집단 총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폭도 100명은 학살이 아니라 진압군과 전투 중에 사살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4.3사건 희생자 명단에는 국군과 경찰을 죽인 살인자 폭도가 19명밖에 없다고 가짜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썼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이다.

9. 제주인민군 사령관 이덕구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이덕구는 대한민국이 곧 망할 줄 알고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포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장병·경찰원들이여! 총부리를 잘 살피라. 그 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총은 우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산 총이다. 총부리를 당신들의 부모·형제·자매들 앞에 쏘지

62) 한국전비사 1977년 1권 282쪽

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4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말라 귀한 총자 총탄 알 허비 말라. 당신네 부모·형제 당신들까지 지켜준다. 그 총은 총 임자에게 돌려주자. 제주도 인민들은 당신들을 믿고 있다. 당신들의 피를 희생으로 바치지 말 것을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 쫓겨 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일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당신들은 총부리를 농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은 인민의 편으로 넘어가라. 내 나라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지켜주는 빨치산들과 함께 싸우라. 친애하는 당신들은 내내 조선인민의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 하라.」⁶⁴⁾

※ 제주인민군 사령관 이덕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내란임을 입증하였다. 그런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상의 이덕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싹 빼버렸다. 그 이유는 내란이 아니고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함이다. 이래도 제주4.3사건이 무장폭동(내란)이 아니고 무장봉기인가!

10. “제주도에 계엄령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주인민군 무차별 공격.

① 1948년 11월 28일 위미리는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위미리 초등학교가 전소되었고, 우익 50여명이 죽고 10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50여 호 중 150여 채가 전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② 48년 11월 5일 새벽 3시 270여명의 폭도들은 17명이 방어하고 있는 중문지서를 기습하여 김석전 순경과 김호석 순경이 폭도들의 총격에 숨졌다. 폭도들은 안덕지서도 동시에 공격하였다. 이 소식을 보고받고 서귀포경찰서에서는 30명의 경찰을 한 트럭에 태우고 중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가다가 폭도들의 매복에 집중공격을 받고 운전수 오유삼이 허벅지에 총을 맞아 차가 멈췄다. 또한 기관총사수 김재환이 총을 맞았고, 분대장 김남군 경사가 총에 맞아 즉사하였다. 사찰주임 박운봉이 차를 전속력으로 달려 몰살을 면하였다.

송요찬 연대장은 경찰의 급보를 받고 3대대에 명령하여 중문지서의 폭도들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송요찬 연대장의 출동명령을 받고 출동한 3대대 진압군이 중문지서 입구에서 매복하고 있던 폭도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국군 1명이 전사하고 부상병이 속출 하였으나 운전병이 침

64) 「4.3은 말한다」 4권 68쪽

착하게 운전하여 사격권을 벗어난 후 모두 하차하여 폭도들을 잡으려고 색달동산을 포위하였는데 폭도들은 하늘로 갔는지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마을로 들어가 숨었는지 흔적도 없었다. 송요찬 연대장은 중문지서가 있는 마을 사람들을 면사무소에 집합시키고 “폭도들을 숨겨준 가족은 나와라!”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고 나올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산으로 도망자는 일단 폭도가 아니면 협조자로 보고 모두 사살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⁶⁵⁾

- ③ 48년 11월 7일 아침8시, 폭도들은 서귀포경찰서를 대낮에 공격하다 여의치 않자 민가 72채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 시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⁶⁶⁾

※ 10.24 선전포고와 11월 2일 국군 공격과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폭동을 진압할 수 없으며, 폭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제주도 우익은 다 죽게 되고 공산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48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상과 같은 이덕구의 폭동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이 진압군이 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 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터무니없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계엄령을 내려 총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2) 이덕구의 9.15 살인 만행 등 제주도 적화음모 실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상의 이덕구의 9.15 살인 만행과 9연대 강의현 소위 반란 실패와 제주경찰 적화음모 실패와 9연대 6중대 공격에 대해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경비사령부를 신설한 원인과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내란군을 진압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보고서는 “계엄령을 내려 진압군이 제주도민을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총살하였다”고 기록하여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사람들을 집단학살한 자로 만들었다. 이는 4.3 특별법을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13,000여명을 국군이 학살하였다고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여 보상도 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4.3사건 특별개정안으로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81-292쪽을 보면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도 계엄령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피소된 사건 및 학자들의 견

65) 「4.3은 말한다」 4권 244-247쪽

66) 「4.3은 말한다」 4권 227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해와 증언들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다. 계엄령은 미군과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선포 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보처가 발행한 관보 14호에 의거 48년 11월 17일이다. 그런데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계엄령이 선포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 계엄선포가 불법이라고 하였는데, 2001년 4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 계엄령은 합법적이다.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된 원인을 이상과 같이 이덕구와 폭도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국군과 경찰과 서청의 강경진압 때문이다.”고 하면서 “계엄령과 진압군의 초토화 때문에 많은 양민이 죽었다.”고 진압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⁶⁷⁾

이덕구가 국군과 경찰과 우익을 공격하여 죽이지 않았다면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으며, 진압군이 폭도들과 협조자들을 죽일 이유가 없고, 48년 7월 말 제주4.3사건은 끝난 것이다. 그런데 진압군의 강경진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되었다고 진압군이 학살 만행 집단 같이 허위 및 좌편향적인 가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괴선박 또는 잠수함이 제주도 근해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왜곡에 대하여⁶⁸⁾

① 1948년 10월경부터 터져 나온 이른 바 ‘괴선박 출현 설’ 혹은 ‘소련 잠수함 출현 설’은 강경작전을 합리화 시켰으며, 유혈사태의 구실로 작용했고,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다⁶⁹⁾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군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4.3전개 과정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점이면 으레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527쪽) 또는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계속 터져 나오던 괴선박 출현 설은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서야 ‘근거 없는 낭설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강경진압작전의 중요한 빌미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강경진압작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진압군을 비난하기 위하여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⁷⁰⁾ 그 증거는,

(가) 1948년 8월 17일 한림면 비양도 해상에서 괴선박이 나타나 경비대 경비선이 정지를 명했으나 도망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자 도주함. 이때는 제주도가 조용할 때임.⁷¹⁾

(나) 1948년 10월 8일 제주시 북방 10마일 해상에 붉은 별이 새겨진 백색 기를 단 잠수함이 목격됨.⁷²⁾

(다) 1948년 10월 8일 상오 11시 50분경 성산포 전면 5마일 해상에 잠수함 출현. 동일 하오

67) 진상조사보고서 276쪽~286쪽

68) 진상조사보고서 256쪽~259쪽

69) 진상조사보고서 276쪽~286쪽

70) 진상조사보고서 259쪽

71) 1948년 8월 21일자 서울신문

72) 미 육군 정보보고서 48년 10월 5일자

- 동 20마일 해상에서 부산 쪽으로 향해 중인 인민공화국 기를 게양한 잠수함이 목격됨.⁷³⁾
- (라) 1949년 1월 3일 삼양리 해상에 소련 표지를 단 선박 2척 출현함.⁷⁴⁾
- (마) 1949년 5월 16일 묵호 주변 국군경비대 508호 함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할 때 국적불명의 잠수함에 나포됨.⁷⁵⁾ 제주4.3사건이 거의 진압됨.
- (바) 1949년 11월 15일~16일, 18일 괴선박이 제주도 대정면 모슬포 서 방 10마일 및 남서방 10마일 해상에 출현함.⁷⁶⁾ 제주4.3사건이 거의 진압됨.
- (사) 신성모 내무부장은 2주간에 걸쳐 인천에서 선편으로 전라북도에 도착, 육로로 전라북도 지리산과 전라남도를 시찰한 후 1950년 2월 16일 국회에서 시찰 결과보고를 할 때 “50년 2월 5일 밤 12시에 제주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제주읍에서 2마일 반 거리에 8천~만 톤급 소련선박 1척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50년 3월 2일자 독립신문)
- “제주도에 가서 하루 밤을 자고 여기에서 들은 바에 확실히 제주도에 가서 상륙시켜 제주도 교란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까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는 중요한 고비가 되는 시점이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기 전에 괴선박 출현설이 터져 나왔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는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계속 터져 나오던 괴선박 출현 설은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가서야 ‘근거 없는 낭설’임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덕구 이하 폭도들의 9.15 만행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엉뚱한 내용으로 뒤집어씌워 제주 양민을 집단 총살한 것처럼 허위 및 좌편향적인 가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신성모 내무부장은 50년 2월 5일에 보았다고 하여 이때는 4.3폭동이 거의 진압되는 과정이었다.

5) 이덕구의 9.15사건 후 제주도민이 많이 처형된 이유

송요찬 연대장은 폭도들이 지금까지 큰 피해 없이 활동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폭도들을 진압하려면 먼저 폭도들을 협조하는 중산간마을을 폭도와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협조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9연대 정보과에서는

- ① 남로당과 인민위원회에 가입한 자(남로당 가입자 3만여 명)
- ② 전단지를 뿌리고, 전봇대를 넘기고, 도로를 파괴하여 진압군의 작전을 방해한 자

73) 1948년 10월 14일 서울신문, 1948년 10월 13일 동아일보

74) 1949년 1월 6일 동아일보

75) 1949년 5월 17일 조선일보

76) 주한 미 육군 정보보고서 49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③ 5.10선거에 투표하지 않고 8.25선거에 가담한 자.(52,000여명 북한 8.25선거에 가담함.)

④ 먹을 것과 옷을 보급해 주고 폭도를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한 자 등,

이들을 중심으로 폭도들에게 협조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송요찬 연대장은 “산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내려오라.”고 선무활동을 하면서 1948년 11월 23일 계엄포고령 제1호에 의거 중산간 마을에 소개령을 내리고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해변마을로 이사시킨 것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1차로 기회를 주었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산간 마을은 폭도들이 은거하지 못하게 모두 불태워 폭도들과 마을을 차단하고 거울을 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자수하여 내려왔다. 그리고 전 병력을 동원하여 제주도 360개 오름을 다 뒤지며 폭도들의 아지트를 찾고 있었다. 중산간 마을과 산에 있는 폭도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이사를 시킨 것이지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다.

48년 12월 30일 송요찬 연대장은 밤낮 쉬지 않고 그물망작전으로 내란군을 추격하여 1,820여명을 사살하였고, 1,380여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되자 이덕구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폭도 진압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12월 31일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11. 9연대 2연대와 임무교대를 ‘실전 경험’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주장하나 이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⁷⁷⁾ 그 증거는,

9연대는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93명이 전사하고 52명 이상의 탈영병과 많은 장병들이 부상당하고 86명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여 부대를 재편성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육본에서는 9연대를 대전으로 이동시키고 대전의 2연대를 제주로 이동명령을 내려 선발대는 12월 19일 도착하였고, 본대는 12월 29일 함병선 2연대장과 장병들은 제주에 도착하였다.

① 군대는 전투 시에도 부대 임무교대를 할 수 있으며, 9연대는 전사자와 반란자, 부상자가 너무 많아 재편성을 해야 했다. 그리고 48년 10월 28일 9연대 구매과장이 중심이 되어 장교 6명, 사병 80여명이 송요찬 연대장과 지휘관들을 죽이고 9연대를 장악하여 반란을 일으켜 폭도들과 합세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어 부대를 재편성해야 했고, 육본에서는 만일 9연대가 14연대와 같이 반란군이 되어 폭도들과 합세한다면 신생 대한민국은 도저히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

77) 진상조사보고서 303쪽

남로당원이 가장 적어 반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대전의 2연대와 임무교대 시켰다.

② 대전의 2연대는 46년 2월 대전비행장에서 이형근 대위가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는데, 이형근 대위는 전에 좌익단체에 가입한 자는 극비에 조사하여 지원을 받지 않아 좌익 사상을 가진 자가 거의 없는 연대여서 육본에서 대전의 2연대가 제주도 진압부대로 가장 안전하여 선발한 것이다.

※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실전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과 이 대통령이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는 지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좌익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군을 악당같이 묘사하였다. 그리고 실전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하였다고 국군을 규탄하고 있다.

국군 2연대가 내란군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란군이 잠자는 국군 2연대를 먼저 공격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덕구의 제주인민군이 이처럼 국군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국군 2연대가 제주인민군과 협조자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 국군이 폭도들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폭도들의 만행과 학살로 제주도에서는 우익이 살 수가 없고, 제주도는 공산화 되었을 것이다.

12.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전투 기록이 없다. 이유는, 진압군이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1) 오등리 전투.

함병선 연대장은 본부와 2대대를 제주읍에, 1대대는 서귀포, 3대대는 한라산 중턱에 배치하고 언제든지 즉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8년 12월 31일 송요찬 연대장이 “폭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계엄령도 해제하였다”고 해서 제주 폭도들이 진압되고 평온을 찾은 것 같았고, 도민들은 국군을 환영해 주어 장병들은 흐뭇하여 주둔지에서 자고 있었다.

49년 1월 1일 새벽1시, 이덕구는 폭도 600여명을 이끌고 오등리 3대대를 포위 공격을 하고 도망쳤다. 이때 폭도 10명이 죽고 국군도 10명이 전사하고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폭도 10명은 학살이 아니라 전투 중에 사살되었다.

3대대 장병들은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전우가 죽고 부상을 당하여 신음하고 있자 흥분하여 폭도들 공격에 나섰다. 함병선 연대장은 급보를 받고 2대대를 지휘하여 현장에 도착하니 폭도들은 흔적조차 없고 부하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⁷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2) 경비사령부 다시 보강

육본에서는 폭도들이 국군 2연대 3대대를 공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보강하고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중대장과 동료들이 죽자 2연대 장병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폭도 진압에 나섰다.

3) 월평리 전투

1949년 1월 6일 월평리에 폭도 1개 중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제2대대가 포위 공격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제2대대 6중대 1소대장 이동준 소위는 첨병 소대장으로 새벽 선두에서 전진하고 있을 때 폭도 보초와 만났다. 이때 국군의 암호는 서울-대전 이었고, 폭도들 암호는 2-7이었다. 이동준 소위가 “암호!”하니 “둘”하고 응답이 왔다. 이에 적이라고 판단하고 “땅에 엎드려!”하고 명령함과 동시 사격을 가하였다. 양쪽은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날이 밝아오자 폭도들은 불리해져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폭도들의 은폐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도망쳐 숨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전투에서 6중대에서 3명이 전사하고 중대장 전동식 중위(육사 5기)가 대퇴부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었다. 이동준 소대장도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 폭도들은 30명이 사살되었다.⁷⁹⁾ 폭도 30명은 학살이 아니라 전투 중에 사살되었다.

※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 312쪽에는 검증받지 않은 독립신문을 인용, 폭도 153명을 사살하였다고 서술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진압군이 무차별 학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4) 폭도들 의귀리에 있는 국군 2중대 공격⁸⁰⁾

49년 1월 12일 아침 6시 30분 폭도 200여명을 동원하여 의귀리에 있는 2연대 2중대를 집중 공격을 하였다. 2시간이 걸쳐 양쪽은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고, 폭도들은 산으로 도망쳤다. 전투가 끝난 현장에는 폭도 96명이 죽어 있었고,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여 포로가 되었으며, 국군은 M1과 99식, 칼빈 등 60여점을 노획하였다. 국군은 일등상사 문석준, 일등중사 이범팔, 이등중사 안석혁, 임찬수 등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국군의 피해가 적은 것은 제2연대 2중대 설재런 중대장이 폭도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폭도들의 피해가 많았다.(이윤 중사 진중일기 102쪽) 폭도 96명은 학살이 아니

78)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5쪽.

79)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6쪽

80) 진상조사보고서 321쪽

라 전투 중에 사살되었다.

5) 국군2연대 총공격

49년 1월 27일 함병선 연대장은 폭도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은 산에서 얼씬하기만 하면 총을 쏘았다.

49년 2월 5일 2연대 장병들은 37밀리 박격포와 L-5 연락기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360개 오름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폭도들은 흔적도 없고 방공호 속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되어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장병이 없었다. 함병선 연대장은 이들을 수용소를 건설하여 수용하여 적극 돕고 있었다.⁸¹⁾

산에 있는 산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폭도들이 “북조선 인민군이 수원까지 왔다, 남조선 해방은 3일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북한의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제주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의 인민군은 오지 않고 폭도들이 진압군에 토벌되자 폭도들이 진압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49년 1월 8일 새벽 1시 이덕구는 폭도들을 이끌고 제주읍을 공격하고(강용삼 저 대하실록 제주100년 655쪽 - 도청 방화는 1월 3일 내부에 의한 것임)- 삼양지서까지 공격하여 세를 과시하였다.⁸²⁾ 함병선 연대장은 자수자가 많고 360개 오름을 뒤져도 산에는 한 사람도 없어 ‘이제는 폭도 진압이 끝났는가!’하였는데 폭도들이 제주읍을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절할 노릇이었다. 함병선 연대장은 폭도들을 역 포위하려고 1개 대대를 긴급 출동시켜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폭도들은 많은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흔적도 없이 도망친 후였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폭도들은 흔적조차 없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다.⁸³⁾

49년 2월 11일 2연대 보급차량이 99식 소총 150정을 군 트럭 2대에 싣고 구좌면 김녕리 부근을 통과할 때 폭도들의 매복에 걸려 총기 150정 모두 탈취 당하고 국군 23명이 전사하였다.⁸⁴⁾ 폭도들의 기습 때문에 군 차량이 제주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폭도들의 전력은 대단하였다.

※ 진상조사보고서 313쪽에 49년 1월 12일 의귀리 전투 후 폭도들이 군대를 직접 공격한 기록

81)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5쪽.

82)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6쪽.

83)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6쪽

84) 「한국전쟁사」 1권 1967년 446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은 보이지 않는다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폭도들에 불리하면 아예 빼버리든가, 아니면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허위 및 좌편향적인 주장이다.

6) 제주 전투사령부 더욱 보강

49년 3월 2일 육본에서는 폭도들의 공격이 점점 대담해지자 전투사령부를 더욱 보강하여 전투사령관에 유재흥 대령, 참모장에 함병선 중령과 6사단 유격대를 지원 받아 진압에 나섰는데 일반인과 폭도를 구분할 수 없어 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다.⁸⁵⁾

유재흥 사령관은 제주도민의 협조 없이는 폭도들이 이토록 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산과 마을을 완전히 차단하여 폭도들이 산과 마을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식량공급이 중단되어 산에 있는 산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고 폭도들도 식량이 없어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산사람들은 줄을 이어 많은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 자수하였다.

7) 남원면 산록 전투⁸⁶⁾

1949년 2월 15일 2연대 정보과에서는 남원면 산록에 폭도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함병선 연대장은 본부중대 150여명을 인솔하여 현지에 도착하여 야영을 하였다.

폭도 700여명은 16일 새벽 2시경 야영을 하고 있는 2연대 본부중대를 기습하였다. 함병선 연대장은 폭도들이 밤에 기습해 올 것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때 폭도들의 기습을 받았다. 국군과 폭도들은 4시간이나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폭도들은 화력에서 국군에 미치지 못하고 날이 새면 지원부대가 오기 때문에 불리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결국 폭도 160여명이 사살되고 많은 폭도들이 부상을 당하였다.⁸⁷⁾ 폭도 160여명은 학살이 아니라 전투 중 사살되었다.

※ 그런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진압군이 기습 공격하여 160명을 사살해 전과를 올렸다고 보고서를 사실과 정반대로 기록하여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양민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인 것 같이 4.3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하였다.

8) 녹하악 전투

1949년 3월 제2연대 2대대와 3대대 등이 한 곳을 터놓고 폭도들을 포위하면, 제2연대 1대대

85) 「한국전쟁사」 1권 446쪽.

86) 진상조사보고서 316쪽

87) 서재권 「평란 제주도기행」신천지 1949. 9월호 176-177쪽

가 남제주군의 중문 서북방적악-노르악- 한대악을 연하는 선을 차단하여 폭도들을 포착 섬멸하는 작명이 하달되었다.

『나(제1대대 4중대장 김주형)는 제1대대 전투대대장 임부택 소령에게 “녹하악과 절악 일대를 야간수색을 하고 13시까지 계획된 차단선을 점령하겠다.”고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는 이미 출동한 중문리 동북방에 있는 제1중대가 숙영하고 새벽 3시에 야간 수색 중, 컴컴한 밤길을 약 한 시간 정도 행군하여 녹하악 동쪽 고개 마루에 당도할 찰라 폭도들과 마주쳐 전투를 하게 되었다. 폭도들이 고개 정상을 선점하고 사격을 하고 있어 나는 불리함을 알게 되어 선두의 1개 분대만으로 폭도들을 견제하게 하고 주력은 포복으로 녹하악 정상을 선점하였다. 고지 정상에서 지형을 살펴보니 동북쪽 멀지 않은 곳에 절악이 있음을 알아내고 적 주력에게 집중사격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새벽 5시경 중대는 고개마루의 적에게 집중사격을 하였다. 격전 끝에 적은 10여구의 시체를 버리고 물러났으나 우리는 고개 마루를 확보하고 수명의 중상포로를 획득하였다. 중상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폭도들은 제주도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진두지휘한 1,000여명이며, 작전 목적은 “제1중대 기지를 유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이들은 전날 밤 20시에 인접한 안덕 사무소와 지서를 습격 방화하였다. 그러면 인접 제1중대가 이튿날 출동할 것이고 기지에는 소수의 잔류 병력만 남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 1중대 기지를 유린하여 무기, 탄약, 식량, 피복 등을 탈취하려는 작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야간이라 행군이 늦어져 새벽 4시경에 고개 마루에 도착하였는데 뜻밖에 국군과 마주쳤다는 것이다.

고개 마루에서 물러난 적은 약간 후퇴하여 응사해 왔다. 불의의 공격을 받은 폭도들은 다시 1킬로 정도 후퇴하여 동에서 서남으로 흐르는 소하천을 의지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지근거리에서 숨 막히는 사격전이 11시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돌격뿐이라고 판단하고 절악의 소위에게 기관총과 박격포로 엄호사격을 하게하고 11시 30분경에 중대에 돌격명령을 내렸다. 적은 국군의 일제 돌격에 압도된 듯 분산되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차후 집결지를 정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으며, 도처에서 각개 격파 됨으로 이후로는 이와 같이 대병력에 의해 작전은 없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폭도 178명을 사살하였고 많은 무기도 노획하였다.」⁸⁸⁾

이렇듯 폭도 178명은 국군이 학살한 것이 아니라 전투 중 사살된 것이다.

88) 백선엽 「실록 지리산」고려원 1992. 139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주인민군이 국군과 전투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국군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9) 노루오름 전투⁸⁹⁾

애월면 애월초등학교에 있다가 다시 원 마을에 주둔했던 6사단 유격대 1개 중대가 산물내 앞 노루오름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

1949년 3월 9일 토벌대가 험한 개남밭 골짜기에서 일렬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 토벌대가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폭도 50여명이 유리한 지형에 매복하고 있다가 토벌대의 선두는 통과시키고 중앙부를 집중 공격하였다. 매복 기습공격을 받은 토벌대는 중대장과 소대장이 쓰러지고 부대원은 흩어져 주둔했던 원마을까지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폭도들은 토벌대원 36명을 사살하고, 총 40여정과 식량 4석, 담배 300갑을 노획하였다.⁹⁰⁾

※ 진상조사보고서 323쪽에 “특수부대는 노루오름에 주둔하는 등 산악지역으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라고만 서술하고 진압군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36 명이 전사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듯 진상조사보고서는 국군이 양민을 죽인 것만 부각시키고 국군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진압군이 제주 양민을 총살한(학살) 것처럼 하기 위함이다. (여기 특수부대는 6사단 유격대를 지칭한 것이다)

10) 2연대 정보과 활동

2연대 정보과장 김명 대위는 50여명의 특수부대를 조직 한라산에 침투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이 특수부대 조직은 1개 분대는 국군, 1개 분대는 경찰, 나머지는 민보단원으로 조직하였다. 특수부대 이윤 중사는 49년 2월 20일부터 의귀리 전투 후부터 민심수습을 위하여 선무공작을 하였다. 3월 1일부터는 각 부락의 청년 간부들을 교육하였다.⁹¹⁾ 3월 24일부터 특수부대원이 되어 한라산에서 정보수집에 전력을 다하였다.

49년 4월 7일 특수공작대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한라산에 침투하였다. 이윤 중사는 남제주군 특수공작대 책임자로 그는 10명을 직접 선발하였고, 최근 귀순한 오송주를 공작대에 합류시켰다.

4월 15일 오송주 노인을 통하여 방공호 1개 속에 폭도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야간에

89) 진상조사보고서 323쪽

90) 「이제야 말해준다 II」175~178쪽

91) 주한 미 육군사령부 「일일 정보보고」1949년 4월 1일

기습하여 26명을 생포하였다.

4월 18일에는 그동안 생포한 남자 32명, 여자 16명, 계 48명을 데리고 하산하였다.

4월 23일 남제주군 남로당 군당 특공대가 은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기습하여 13명을 생포하였고, 이 생포자 중에는 자원하여 특수공작부대에 협력하겠다는 분이 있었다.

5월 14일 이 협력자는 남원면 남로당 위원장 김계원과 제주 남로당 간부들이 모두 남원면에 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어 이윤 중사는 국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5월 26일 새벽 3시 남원군 수악계곡에 있는 이들의 숙영지를 포위 기습하여 23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다. 8명의 포로 중에는 남원군 면당위원장 김계원이 있었다.⁹²⁾

이 김계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희생자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익이 적극 반대하여 희생자가 되지 못할 정도였다.

※ 진상조사보고서 323쪽에 “특수부대란 2연대 작전참모 김명 대위가 지휘하는 50명 규모의 부대로서 산악지역을 배회하다 무장대를 만나면 제주 사투리를 구사해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었다.”라고만 기술하였다. 그리고 특수공작대의 전투내용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국군이 제주 양민만 학살하였다고 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전투 내용을 4.3진상조사보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진압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학살하여 제주4.3은 폭동과 내란이 아니라 민중봉기라고 하기 위함이다.

결론

이상과 같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고서는 인민공화국에서나 작성할 문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2.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도 가짜로 하였기 때문에 희생자로 된 13,600여명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제주 평화공원 내 사료관 전시물은 제주4.3사건과는 거리가 무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중앙위원회는 20년 장기 적폐위원회로서 즉시 해체되어

92) 이윤 (제2연대 1대대 2중대 특별공작조장) 진중일지128쪽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야 한다.

6. 2020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금성사 외 5개 출판사의 제주4.3사건 내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일 위의 건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에 호소할 것이다.

5. 제주4.3사건 위원회 및 기획단 명단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10.15현재)

구 분	성 명	주 요 직 책	비 고
위원장	이한동-김석수-고건	국무총리	
당연직	김정길-안동수-최경원- 송정호-심상명-강금실	법무부장관	보고서 검토 소위 위원
	조성태-김동신-이준- 조영길	국방부장관	"
	최인가-이근식-김두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최선정-김원길-이태복- 김성호-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전윤철-장승우-박봉흠	기획예산처장	
	박주환-정수부-성광원	법제처장	"
	우근민	제주도지사	
위촉직	강만길	상지대학교 총장	
	김상웅	전 대한매일 주필	"
	김정기	전 서원대학교 총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창욱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주관위원)
	유재갑	경기대학교교수	"
	이돈명	변호사 · · 전 조선대학교 총장	
	이황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임문철	제주중앙성당 주임신부	
한광덕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		
간사	김한욱 - 강택상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374 * 제주4.3사건서 진상

2)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분	성명	주요직책
단장	박원순	변호사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당연직	이수만-성백영	법무부 서울고검 사무국장
	하재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김지순-장인태-권육 권선택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유장근-최정일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호성-서유창-김영택	제주도 부지사
위촉직	김종호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대표
	강창일(간사)	배제대 교수, 제주4.3연구소장, 국회의원
	고창후	변호사
	김순태	방송대학교 충남대전지역 학장
	도진순	창원대학교 교수
	오문균	경찰대公安문제연구소 연구원
	유재갑	경기대학교 교수
	이경우	변호사
	이상근	전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실장
서기	박찬식-김종민	전문위원

진상조사팀

- 수석전문위원 양조훈(제주사람)
- 전문위원 나중삼 장준갑 김종민 박찬식
- 조사위원 김애자 장윤식 김은희 조경희 배성식 박수환 현석이
민은숙 부미선 김정희 정태희 등 15명

朝鮮日報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東亞日報

제1 1588-2020

donga.com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제주 4.3사건 보고서』는 가짜이므로 다시 써야 합니다.

1. 1948년 4월 3일 좌익폭도들은 어린 소녀들까지 죽였다.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백명은 11개 지사를 공격하여 고일수 순경의 목을 잘라 죽이고, 김경하 순경부부를 대상으로 펠러 죽이고, 선우중대 순경을 총을 쏘아 죽이고, 문정자(10세), 문숙자(4세) 소녀까지 바보같이 죽이고, 문기천(33세) 문정순(34세)을 죽여 4.3 폭동을 일으켜 놓고 지금 와서 이를 무장봉기라고 가짜 주장을 하고 있다.

2. 폭도들은 남한 건국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 선거를 지지하였다.

폭도들은 남한의 5.10선거를 반대하여 37개 선거구 중 22개 선거구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선관위원을 죽이고, 선거하려는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가거나 죽여 선거를 방해하였다. 반면 북한의 8.25 선거에는 5만2천명이 지지투표를 하여, 폭도대장 김달삼은 투표용지를 갖고 북에 가서 제주도민 85%가 투표했다고 연설했다. 제주 4.3사건이 경찰탄압으로 발생했다면 왜 남한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선거를 지지했는가?

3. 2대 폭도시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48년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폭도의 공격으로 경찰 58명, 우익 235명이 죽을 때 폭도는 15명만 죽었다. 폭동이 여기서 끝났으면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간 김달삼이 돌아오지 않자, 이덕구가 제2대 폭도시령관이 되어 9월 15일부터 제주도 우익의 경찰을 죽이고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4.3사건 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무장봉기로 포장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한 사실을 빼 버렸다.

4. 폭도시령관 이덕구가 국군을 공격, 21명이 전사하면서 4.3사건이 확대되었다.

이덕구는 선전포고 이후 48년 1월 2일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21명이 전사했다. 이후 계속된 전투로 국군 1800여명, 경찰 153명, 우익 1700명이 죽고 폭도들과 협조자도 많이 죽었다. 11월 2일 사건은 개입령이 내려진 원인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4.3보고서는 이 사건도 빼 버렸다.

5. 아무 잘못이 없는에도 정부가 개입령을 내려 양민을 학살했는가?

이상의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는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개입령을 선포 하고 내란을 진압하였다. 그런데 4.3 정부보고서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정부가 개입령을 내려 13,900명을 학살하였다며 정부를 규탄함으로써 모든 고등학교 95.8%가 제주4.3폭동을 무장봉기로 서술하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규탄하게 만들었다.

6. 결론 : 제주 4.3보고서는 가짜이다. 다시 써야 한다.

이 보고서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 4.3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 탄압에 저항해서 일어난 민중 의거로 포장함으로써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를 도둑하고,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시켰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자는 책임 지고 교체되고, 이 보고서는 다시 써야 한다.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상임대표 서경석(선진화시민협동상임대표), 이선교(현대시포럼 대표)

고 문 이선교(해국민협총합의의위원), 박세원(한국국민운동본부위원), 정용래(대한민국상무위원), 박희태(대한민국23지방자치단체), 우정환(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 이상재(대한민국공민회위원), 김승호(이토도민중영양단체위원장), 정승원(한국국민협동총합의), 박정우(한국국민협동총합의위원), 김경자(대한민국사회의정당), 신명철(유공포럼대표), 김기택(해방운동가들의 사랑의행).

이계성(한국국민협동총합의 대표), 이상현(한국국민협동총합의 상임위원), 정용래(대한민국공민회위원), 서우홍(정), 김근기(이토도민중영양단체사무총장), 이희범(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최민식(한국시민단체협의회위원장), 수호진(영해부대총사관장), 김영홍(前 제주경찰청장), 권동원(자유노동자연맹대표), 박진식(前 제주도행정부지사), 이영환(제주4.3사건정밀조사위원회), 오규택(제주4.3사건정밀조사위원회), 홍석표(제주4.3사건정밀조사위원회), 정명원(위원장 박원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
진상조사팀장 양조훈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



제주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김재동 목사 (대한역사문화원장)

머리말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5.10선거를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남로당 중앙위원회와 남로당 전라남도위원회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일어난 폭동이자 반란이다.

1948년 4월 3일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를 살해한 자들은 순수한 제주도 주민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유격대 및 남로당원들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신춘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무장공격을 결정하고 중앙당의 승인 하에 자체 양성한 유격대와 국방경비대 제9연대를 동원하여 일거에 제주 전역을 장악하여 인민공화국 수립을 꾀하려고 했다. 인민공화국 수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곧 체제전복이 전제되므로 남로당 제주도당이 반란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남로당 반란군측은 소위 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 명의로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선전포고문’과 ‘국방군과 경찰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약 3,000매를 인쇄하여 요소요소에 살포했다. 이것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행동이 반란행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남로당 중앙당은 제주도당에게 최초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렸다가 그 후 지도원을 통해 경비대 동원을 명령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장기간 군·경을 상대로 전투를 하면서 친정부 인사들과 경찰가족을 살해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게양했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으며, 국군과 장기간 치열한 전투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던 점을 종합해볼 때 제주4·3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명백한 반란인 것이다.

1. 제주4·3폭동 및 반란의 배후 - 남로당 중앙당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당이 5.10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폭동 지령’을 내려 발발하였는데, 중앙당은 폭동 지령을 제주4·3 발발 이전에 문서와 올구¹⁾를 통해 ‘폭동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동 지령을 내렸다.

남로당 중앙당(조선공산당)은 47년 7월에 군사부를 신설하였고, 그 군사부 하부에는 특수행동대가 있어서 그 노선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 제주도의 인민유격대이다. 남로당 제주위원회의 인민유격대 즉 공비들의 주요 목표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 의원선거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1) 1948년 1월 22일 새벽3시, 제주도 신촌리에서 남로당원 비밀모임에서 압수된 2·7구국투쟁 지령문에는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남로당의 강력한 투쟁계획 지령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갈 것을 지시하였다. 노획된 문서 중에 암호문이 나왔는데, 암호를 해독해 보니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시하는 “폭동 지령문”이었던 것이다. 이 지령문에는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방첩대 정보요약, 2월 5일 노획문서 번역)

(2) 2.7폭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나자 남로당 중앙당은 2월 중순에 남로당 특별공작책임자인 이재복을 제주도에 보내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 김달삼에게 “UN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면 우익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켜서 단선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1권 해방과 건국(1968년)에서 “남로당 특별공작책임자이며 군내 적화 총책임자인 이재복(1949.1.19 체포, 46세.

1) 올구는 영어 organizer의 준말이다. '오르그'는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지도원'을 일컫는 말로 북한의 '정치지도원'과 같은 존재들이다. 4·3을 배후조종한 세력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고, 이들이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지도원들이었다.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평양신학교 32회 졸업. 영천 제일교회 목사. 46년 10.1 대구폭동 가담. 49년 12월 처형)은 제주도 폭동에 이어 본토 내에서 반란을 야기 시킴으로서 국군의 토벌병력을 단절 또는 분산시켜 우선 제주도의 위기를 감소시키려 하였고, 본토 내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군인적인 호응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군의 전격적인 토벌작전으로 제14연대의 반란군은 조기에 각개격파 당하여 입산 공비화 하였고, 뒤따라 전군적인 대숙군이 단행되어 그들의 군내조직이 발본됨으로서 남로당이 3년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던 꿈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기술하여 제주 4.3폭동, 여수14연대 반란, 대구6연대 반란사건이 “이재복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근거는 14연대 반란사건을 김창룡 이하 수사관들이 이재복을 조사한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3) 남로당중앙당은 1948년 3월 15일 ‘신춘회담’에 거물급인물을 파견하여 무장폭동을 지시하였다. 남로당의 폭동 지령은 ‘첫째 당의 조직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 둘째 단선 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전 도민을 쫓기시켜 무장반격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남로당중앙당의 거물급인물은 당시 중앙당에서 내려온 강문석, 이재복, 이중업 세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김봉현이 일본 문예진 <민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인물은 천검산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고 그 천검산은 군사이론에도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아 그 사람은 이중업이 틀림없다.

2. 제주4·3폭도들의 잔인한 학살사례

- ① 1948년 11월 28일(음력 10월 28일) 07:00경 공비들이 남원면 남원리를 습격할 당시 민보단원이었던 남원리 200번지 거주 정남휴(호적명 정남국, 1916년생)의 처 김영선(당시 31세, 임신 6개월)을 비롯해서, 장남 정태연(10세), 장녀 정태희(8세), 차남 정태인(6세), 누이동생 정계양(25세), 정정양(17세), 정계양의 장녀 고성춘(3세), 차녀 고양춘(2세), 3녀 고계춘(1세), 그리고 집에서 가사를 돕던 외가친족 이복길(15세)을 납치, 구덩이에 파묻어 살해했다.(정남휴 증언)

- ② 1948년 11월 10일(음력 10월 10일) 04:00~05:00경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던 이월색의 아버지 이장원, 어머니 남금례, 숙부 이수남, 남동생 이만국(9세), 이만선(7세), 이만복(4세), ‘어진이’라고 부르는 여동생(3세), 2세 등 8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월색도 일본도와 창으로 7군데를 찔렸으나 돼지 움막으로 기어들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며, 남동생 이만선(7세)은 무서워서 “엄마, 엄마”하며 우는 것을 일본도로 배를 두세 번 찌르자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어머니 옆에 쓰러져 죽었다. 살해 이유는 평소 돈과 쌀 등을 지원해주지 않았고, 제주읍으로 도피성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공비에게 제보하여 참혹한 변을 당한 것이었다. (이월색 증언)
- ③ 애월면 용흥리 양영호(梁榮鎬)는 경찰에 근무하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경찰을 그만 두라’는 아버지의 권유로 퇴직,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48년 10월 28일(음력 9월 26일) 폭도들이 용흥리를 습격, 동리 강병호(姜柄浩, 1925년생) 등과 함께 납치당하여 생사불명 되었는데 이듬해 체포된 인민유격대의 진술을 근거로 애월면 장전리 속칭 건나물 옆 동녘동산(현재 소공원 조성)에 묻혀 있는 시체를 발굴해 보니, 시체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른 새끼손가락 굵기의 철봉을 향문에서 입까지 찔러 죽였었다. (강병옥 증언)
- ④ 1948년 11월 19일 밤 10시경 폭도 10여명이 구좌면 월정리를 습격, 공회당에 방화한 후 4시간 가량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인, 방화하고 새벽 2시경 월정리 328번지 박서동(1942.9.26생)의 집에 들이닥쳐 ‘통시’(돼지우리)에 숨은 모친 윤원길(尹元吉 33세)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36곳을 찔러 죽인 후 배를 갈라 6개월 된 태아를 꺼내 6곳을 찔러 죽였다. 이어서 누이동생 박매옥(2세)을 창으로 14곳을 찔러 살해했다. 부친이 구장을 지낸 반동가족이었다는 이유였다. (“월간 관광제주” 1988년 11월호)

당시 폭도들의 만행에 대해 동아일보(1948년 5월 8일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인민봉기를 했으면 했지 총탄에 맞아 거꾸러진 시체를 다시 칼로 난자하고, 목을 매고, 심지어는 귀를 자르고 코를 깎아버릴 뿐 아니라, 임신부의 배를 찌르지 않으면 안 될 원한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당시 폭도들은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전형적인 민심이반 책동이였다. 인민유격대가 군경복장으로 습격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48년 4월 21일 밤11시 대정면사무소에서 숙직 중이던 박근식(구역출신), 정을진(하모 출신) 등 면 직원 2명이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했다. 당시 습격자들은 경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22일, 대정경찰복장을 한 무리들이 선관위원을 공격해 살해, 등록기록을 탈취하였다.
- ② 1948년 8월 1일 오후 3시 31분, 김녕지서가 폭도 약 30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폭도들 다수는 일본제 철모와 경관 제복을 입었고 M1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 ③ 1948년 12월 3일과 4일 새벽 사이에 세화리를 습격한 무장대는 종달리도 덮쳤다. 4일 새벽 무장대는 민보단원들을 공회당 앞에 집결시켰다. 무장대가 군인 복장을 한 것에 속아 순순히 모였던 민보단원 이태화(48), 현임생(45), 윤두선(32), 임두선(25), 강기옥, 오경봉 등이 현장에서 희생당했다.
- ④ 1952년 9월 16일 오전2시경, 숫자 미상의 무장대가 국군과 경찰로 가장하고 제주방송국을 습격, 숙직 중이던 방송과장 김두규와 18세의 기술견습원 및 소년 급사 등 3명을 납치하였다. 이들 납치된 3명은 며칠 후 무장대 아지트 부근에서 무참히 살해되어 땅에 묻힌 채로 발견되었다.

3. 제주4·3 왜곡의 주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

를 국내외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되어 공포하였다.

조사위원들은 2003년 10월 15일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여러 군데 허위 및 좌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작성된 허위 및 좌편향적인 내용의 핵심은 제주4·3폭동을 “제주4·3무장봉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진압군을 제주 양민의 학살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4·3정부보고서는 1947년에 발생한 3.1사건이 4·3사건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친다.²⁾ 그러나 3.1기념식장의 발포 사건 때문에 4·3이 발발했다는 주장은 좌익들의 억지 선동이다. 4·3정부보고서는 좌익 폭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3.1사건을 억지로 끌어들였고, 경찰의 발포에 대항하여 4·3폭동이 일어났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4·3공산폭동을 4·3항쟁으로 미화, 왜곡했다. 즉, 4·3정부보고서는 3.1사건을 왜곡하여 제주4·3사건을 항쟁으로 뒤바꾼 국민 대사극의 시작인 것이다.

1) 거짓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

4·3정부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등 좌편향과 왜곡으로 작성되어 가자, 4·3중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우파인사들은 보고서 작성이나 위원회 운영에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한광덕 예비역 장군, 이항우 교수, 나종삼 전문위원 등 우파위원들이 4·3정부보고서 내용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퇴해 버렸다.³⁾ 좌편향 정부보고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서 버리자 4·3정부보고서는 대다수였던 좌파위원들에 의해 ‘그들만의 방향을 향해’ 일사천리로 내달렸다.

4·3정부보고서는 제민일보에서 연재했던 ‘4·3은 말한다’의 복제판이었다. 4·3정부보고서의 진상조사팀에 있던 양조훈 수석전문위원과 김종민 전문위원은 4·3정부보고서 작성의 주축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제주신문에서 시작한 4·3취재단의 책임자 및 주요 요원으로, 제민일보로 옮겨간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현장 취재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4·3취재는 이 사건을 국가 폭력에 의해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는 즉 반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반 인권적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 이를 신문에 연재했고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에

2)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02쪽.

3) 《뉴데일리》, 「박원순이 왜곡 조작한 ‘제주4·3보고서’」, 2014.8.13.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대한 자료 수집의 경험이 많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생각한다면, 신문의 저널리즘과는 달리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 학구적인 입장과 중립적인 자세로 규명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인선⁴⁾이었다.

4·3정부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우파의 시각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제출된 수정의견들은 전부 묵살되었다. 2003년 3월 29일 4·3중앙위원회에서 1차 정부보고서를 통과시킬 때 9월 29일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재심의 하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차 발간보고서를 늦게 배포해 주는 바람에 수정의견 제출자들은 의견 집필에 철야작업을 해야 했고, 결국에는 제출된 수정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

2)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내력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보수(우파)측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김대중-노무현을 지지했던 진보(좌파)측 인사들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함으로써 출간되었다.

1) 1997년 12월의 대선에서는 여당의 이회창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4·3 사건 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며, 대선 후에는 여·야 모두 제주4·3사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여·야 모두 제출한 제주4·3사건 특별법안이 하나로 통합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3)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공포되었다.

4)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명(당연직 8, 위촉직 12)으로 구성된 제주4·3위원회가 발족되었다.

5)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을 채용하게 된다.

6) 계약직 공무원에 공채된 사람들은 나종삼, 양조훈, 김종민, 박찬식, 장준갑 등 5명이다.

7)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장 임명 문제가 기로에 서서 4·3진영에서는 배재대 교수인 강창일을 단장으로 강하게 밀었으나 2000년 10월 국사편찬위원회 이상근 실장이 단장으로 내정한 것만이 아니라 이한동 국무총리로부터 임명 사인

4) 현길언. 전계서, p.44.

까지 받은 상태였다.

8) 양조훈, 고희범은 추미애 의원,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 김성재 정책수석 등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서명한 내용을 번복하여 진보측의 의도대로 박원순 변호사를 기획단장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9) 수석 전문위원 양조훈은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제주도에서 모금 운동을 했다고 말했으며, 김종민과 박찬식 등 유능한 인재를 전문위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했고, 기획단장 임명에도 깊이 관여함으로써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의 핵심 인물로, 유능한 인재 김종민과 박찬식을 데리고 왔다고 말한 것은 전문위원 5명 중 3명을 선발전에 미리 내정하였음을 실토한 것이다.

10) 서북청년단 출신을 주축으로 한 제주경찰이 1949년 6월 7일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2대 사령관 이덕구를 사살하면서 이덕구의 호위병 양생돌을 생포하는 과정에 제주4·3사건 진실을 밝히는 귀중한 문서 압수한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수측에서는 자료중 제일 가치가 많은 자료임으로 자료집에 넣으려고 하자 진보측 발간 실무를 맡은 김종민은 그 자료는 국가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아니어서 자료집에 넣을 수가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보수측 전문위원과 진보측 전문위원간에 자료 선택 문제로 옥신각신 언쟁을 하다가 김한욱 지원단장 중재 하에 임시 자료집 제12권에 겨우 포함되어 발간되었다.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른 역사왜곡 실태

1) 남로당 중앙당 지령의 은폐

(1) 1948년 1월 22일 압수된 문서, 2·7폭동지령문

남로당이 내린 2·7 폭동 지령은 제주 4·3사건의 발단이였다. 2·7구국투쟁 실현을 위해 모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거물급 간부들이 대거 1948년 1월 22일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2·7폭동은 좌절됐다. 이 좌절된, 연기된 폭동이 제주의 4·3폭동이다.⁵⁾

1948년 경찰은 1월 22일 새벽 3시에 남로당 간부 모임이 열리던 핵심 조직 아지트인 신촌리를 급습하여 압수된 문서는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남로당의 강력

5)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진실 도민보고서』, 80쪽.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한 투쟁계획 지령으로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른바 ‘2·7구국투쟁 지령문’이었다.

경찰이 1월 22일 남로당 조천지부(신촌리)를 급습하여 노획한 문건에는 “남로당이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시”했으며, 또한 문건에는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4·3정부보고서는 폭동 지령문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153쪽)했다. “이 문건은 누가 지령했는지 그 실체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진행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투쟁 결정과정을 보더라도 그 시점에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미군 971방첩대의 보고서 ‘제주도 남로당의 음모’에는 유엔위원단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밝혀져 있었으며, 이 내용은 바로 남로당이 2·7 폭동을 지령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2·7폭동은 4·3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2)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4·3폭동의 주체였던 제주인민해방군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김달삼이 월북할 때 가지고 가기 위해 인민해방군 측에서 자기들의 활약상을 직접 작성한 문서로, 1부는 이덕구가 소지하고 있다가 그가 사살될 때 경찰 측에 입수되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는 3월 중순경 무장반격 지령을 받아 3월 15일 중앙에서 파견된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무장반격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⁶⁾ 4·3폭동의 주체세력은 중앙당의 지령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들의 후계체인 남한 좌익들은 경찰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발적인 저항으로 일어났다고 4·3정부보고서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3)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4·3폭동 당시 김달삼의 휘하에 있던 폭도대장 김봉현과 유격대원이었던 김민주는 일본으로 밀항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를 썼다. 여기에서도 중앙당의 지

6)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10쪽.

령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김봉현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천검산’이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이 4·3폭동을 지휘했다고 밝혔다,⁷⁾ 천검산은 남로당 중앙당의 군사부장 이 중업이나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으로 추정되고 있다.

(4) ‘브라운대령 보고서’

1948년 7월에 작성된 미군 ‘브라운대령 보고서’에서도 본토에서 제주도로 파견된 남로당 조직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브라운 대령은 1948년 5월까지 고도로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에 의하여 4·3폭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주도 남로당의 활동은 전라남도 도당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도당 본부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⁸⁾

2) 김익렬의 ‘4.28평화회담’의 허구

4·3정부보고서에는 ‘4.28평화회담’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진압 사령관이었던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김달삼과의 회담을 이르는 말이다. 4·3정부보고서는 이 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지만 경찰과 우익단체들의 방해로 4·3은 견잡을 수 없는 유혈충돌로 치달았다고 4·3의 책임을 경찰과 우익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⁹⁾ 그러나 4·3정부보고서에 등장하는 4.28평화회담이라는 것은 허구였다.

4.28평화회담은 김익렬의 ‘유고’에서 주장한 말이다. 김익렬은 1988년 12월 사망했고, 사후에 유고가 발표되었다. 김익렬의 유고는 김달삼과의 협상, 조병옥 경무부장과 의 갈등 등 4·3에 대한 김익렬의 시각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그러나 김익렬은 그의 유고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김익렬의 ‘기고’¹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익렬의 기고는 김달삼과의 면담 1개월여 후에 작성하여 언론에 기고한 것이었다.

김익렬은 4·3폭동 발발 직후인 1948년 4월말에 인민해방군사령관 김달삼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48년 6월 중 김달삼과의 면담과정을 ‘기고’로 작성하여 8월 6, 7, 8일에 걸쳐 국제신문에 발표했다. 그리고 1970년대 다시 ‘유고’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사후에 발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기고와 유고는 같은 사건을 다룬 회고

7) 고문승, 『제주사람들의 설움』, 387쪽.

8) 주한미육군 군정청 일반문서, 『제주4·3사건자료집』 9권, 44쪽.

9)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98쪽.

10) 김동일, 『제주4·3사건의 거짓과 진실』, 206쪽.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임에도 불구하고 김익렬의 증언은 너무 많이 엇갈린다. 김익렬은 너무 많은 거짓 말을 하고 있었다.¹¹⁾

김달삼을 만나 1개월 후에 쓴 기고와 죽기 전에 쓴 유고가 일치하는 증언이 별로 없었다. 김익렬은 4·3사건에 대하여 유고에서는 관의 압정에 대한 ‘민중폭동’으로 표현하지만 기고에서는 ‘좌익계열의 폭동’으로 규정한다. 면담 날자도 김익렬의 기고에는 4월 30일이지만 유고에는 4월 27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회담 장소, 배석자, 회담 내용, 회담 결과까지 김익렬의 진술은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면담 후의 상황에서도 기고에서는 협상 결렬로 묘사하였지만, 유고에서는 협상 성공 후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거짓말을 했다.¹²⁾

‘4.28평화회담’은 무슨 거창한 평화회담이 아니라 그냥 면담이었고, 4월 28일에 열리지도 않았다. 4·3정부보고서는 김익렬의 기고를 묵살하는 대신 김익렬의 유고를 대대적으로 인용했다.

3) ‘오라리 사건’의 날조

4·3정부보고서는 협상을 파기하기 위하여 미 군정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경찰이 실현하여 오라리 사건을 왜곡 날조하여 만들었고, 이것이 협상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라리 사건의 실체를 보면 1948년 4월 30일에 동서지간의 두 대동청년단원의 아내 두 여인이 남로당 자위대에 납치되었다.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남로당 자위대에 의해 살해되었고 다른 여인은 탈출하여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뒷날 남로당 자위대에 의해 살해된 여인의 장례식이 경찰관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동청년단원들에 의해 치러졌다. 장례가 끝나자 대동청년단원들은 마을로 들어와서는 입산한 좌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5세대 12채의 민가를 불태웠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날 무렵인 오후 1시경, 무장대 20명 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다. 청년단이 급히 피해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피살되었다.

오후 2시경, 서청·대청 단원들로부터 무장대 출현 소식을 접한 경찰기동대가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오라리 마을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장대

11)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진실 도민보고서』, 84쪽.

12) 김동일, 『제주4·3사건의 거짓과 진실』, 174쪽.

는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민들은 불붙은 집을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산 쪽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마을 여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때 마을 여인의 소녀는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졌을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오랫동안 머리 위를 맴돌았다”고 증언했다.¹³⁾ 이 사건으로 결국 김익렬 식 협정은 파기되었다는 것이다.

4·3정부보고서의 주장에 따르면, 4.28평화회담에서 국군과 인민해방군 간에 72시간(3일)의 휴전을 약속했는데, 5월 1일 벌어진 오라리 사건이 이 휴전을 깨뜨렸고, 그래서 4·3은 견잡을 수 없는 유혈 충돌로 치달았다는 것이었다.¹⁴⁾ 즉 5월 1일 오라리 사건을 협정 위반으로 몰기 위해 4월 28일을 협상일로 조작한 것이다.¹⁵⁾

4·3정부보고서에서는 오라리 사건을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오라리 방화사건은 미군 촬영반에 의해 입체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아, 미군의 계획적인 사건이었고, 방화사건이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해 놓은 것은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이틀 전인 4월 29일에는 오라리 대청단장과 부단장이 오라리 폭도들에게 납치당해 살해당했고, 30일에는 대청단원의 부인들마저 납치당해 한 명이 살해당했다. 이런 사실은 빼 버린 채 4·3정부보고서는 우익단체원들이 방화하는 장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건을 왜곡시켰다.

우익단체원들이 마을에 방화하고 철수하자 이번에는 마을에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본 민오름의 폭도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피신 중이던 강규찬 순경의 모친을 길에서 살해했다. 다음에는 폭도 출현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총을 쏘며 마을로 진입했다. 이 장면은 미군기에서 공중 촬영되었다. 이 기록물은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고, 현존하는 4·3의 유일한 영상물이다. 항공기 운용은 4·3폭동이 발발한 이후 4월 중순부터 전단지 살포, 참관 등의 작전에 항공기 두 대를 상시 운용하고 있었고, 항공 촬영은 단 장군의 방도를 앞두고 상황 보고용으로 촬영 중이었는데, 여기에 우연히 오라리 사건의 일부가 촬영된 것이다.

경찰이 진입하자 폭도들이 철수해 버린 마을에서 불을 끄다가 경찰을 보고 도망가던 고무생 여인이 경찰에 피격되었다. 이번에는 사건 정보를 입수한 국군경비대 9연대가 마을로 진입하자 경찰은 철수해 버렸고, 9연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

13)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98쪽.

14)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198쪽.

15) 협상 날짜는 기고에는 4월 30일로, 유고에는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이라는 문구로 보아 4월 27일이다.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처럼 ‘오라리 방화사건’은 그날 오라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중의 하나였고, 그날 벌어진 ‘오라리 사건’은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4·3사건의 와중에 제주 여러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4) 다랑쉬 사건의 날조

1992년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 오름 근처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유골 11구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여자 3명에 어린이 한 명이 포함된 4·3 당시의 유골들이었다. 그러자 제주도에서는 선동의 광풍이 몰아쳤다. 다랑쉬 유해는 선량한 양민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랑쉬굴은 선량한 양민을 학살한 잔인한 군경들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다.

다랑쉬굴의 유해는 양민들이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 구좌면당의 전투원들이었고, 여자들은 취사병, 어린이는 취사병의 아들이었다. 다랑쉬굴은 남로당 구좌면당의 비밀 아지트였다. 그리고 이들은 군경에게 학살된 것이 아니라 진압대에 포위된 채 굴속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항전하다 전사한 인민해방군들이었다. 그리고 진압군이 다랑쉬굴을 발견하게 된 것도 인민해방군의 세화리 대습격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1992년 다랑쉬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 당시 다랑쉬굴에 진입했던 함만실, 오지봉 채정옥 등은 생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랑쉬 사건의 내막을 증언했다.

5) <4·3희생자 숫자 부풀리기> 사기극

제주4·3의 진실에서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4·3희생자 숫자에 대한 부분이다. 4·3정부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걸핏하면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3만 명, 또는 수만 명 이상이라고 희생자를 부풀리고 국민을 선동했다. 그러나 4·3정부보고서에 4·3희생자는 13,564명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4·3희생자 위패는 14,117기라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4·3희생자가 수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선동이다.

4·3평화공원에 있는 위패 14,000여기가 희생자라는 것도 일종의 선동을 위한 용

어 장난이다. 4·3희생자 중에 4·3사망자는 10,344명이기 때문이다. 희생자라는 명칭 때문에 4·3사건 당시 사망자가 14,000여 명으로 오해하는 이가 많다. 4·3희생자라는 의미에는 후유장애인과 생존자, 생사가 불확실한 행방불명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3피해자 조사는 여러 번 있었다. 4·3직후부터 90년대까지의 조사에서 사망자 숫자는 8천~9천여 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조사가 거듭될수록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조사에서는 1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가짜 희생자도 증가했다는 뜻이다.

사망자 10,000여 명의 숫자에는 군경과 폭도, 양측에 의한 피해자가 망라되어 있다. 이 사망자 중에 폭도 측에 의해 살해된 양민은 1,764명, 군경 전사자는 336명이다. 1만여 명의 사망자 중에서 2천여 명은 폭도에 의해 살해된 숫자인 것이다.¹⁶⁾ 폭도에 의해 살해된 2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 8천여 명은 무고한 양민 사망자와 군경에 대항하다 전사한 인민해방군이 혼합되어 있는 숫자다. 이 중에서 무고하게 죽은 양민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 숫자를 가늠할 길은 아직 없다. 4·3희생자에 대한 정보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에 정확한 숫자는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이 파악할 수 있다.

4·3정부보고서에는 4·3폭동의 무장 세력을 50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인민해방군이 만 9년 동안 군경들과 전투하며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500명은 심하게 축소시킨 숫자다. 김봉현·김민주가 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는 제주인민해방군의 핵심세력을 3천명이라 기록했고, 미군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는 ‘약 4천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신상준 박사의 『제주도4·3사건』에는 전성기의 무장 세력이 3천~5천명으로, 존 메릴이 쓴 논문 ‘제주도 반란’에도 3천5백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러 기록들을 감안하면 제주인민해방군 숫자를 대략 4천여 명 수준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중에 절반 정도인 2천여 명 정도는 교전 중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경에 의한 사망자 8천여 명 중에서 우선 군경과 교전하다 사망한 숫자를 빼고, 또한 4·3폭동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망자의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가 무고한 양민의 사망자 숫자라 할 수 있다. 4.3 당시 군경이 수만 명을 죽였다는 선동은 불순한 선동일 수밖에 없다.

16)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371쪽.

17) 제주4·3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536쪽.

제주 4.3 왜곡의 시작,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비판

맺음말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 내지 민중항쟁이 아니라 건국과정에서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계획적인 무장반란이자 공산폭동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제주4·3공산폭동을 민중봉기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곳이 제주4·3평화기념관이다.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해 적개심을 심어주는 심각한 역사왜곡의 장이 되고 있다. 수많은 역사박물관과 기념관을 방문해보았지만 이렇게 제주4·3평화기념관처럼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곳은 처음이다. 그야말로 최악이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에 왜곡 편향된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만 9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장폭력으로 대항한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이승만 정권과 경찰과 국군이 제주도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처럼 전시되어 있다.

(2)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나 자료만 있고 남로당의 무장폭력 만행을 언급하고 있는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와 그것이 게재되어 있는 <제주4·3사건 자료집> 제12권은 없다.

(3) 4·3과 아무 관련도 없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전시실이나 광주 5.18사진, 필리핀, 남아공 등의 민중 항쟁 사진을 전시한 것도 관람자들로 하여금 4·3당시 군경의 진압작전을 학살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전시물이다. 다량쉬굴 모형이 대표적인 전시물이다.

(4) 4·3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도 과장된 전시물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6.25전쟁중의 전주에서 좌익들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의 사진이라든지 여순반란사건의 사진을 마치 제주4·3당시 군경진압군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전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4·3영상기록 평화와 인권’이라는 13분짜리 영상물을 보면 ‘다만 제주4·3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화면은 한국전쟁, 여순사건의 자료를 사용했음을 밝힌다’라는 짝막한 자막을 앞에 넣고 4·3과 전혀 무관한 6.25전쟁과 여순반란사건 사진을 인용하여 마치 4·3당시 진압군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느끼게 제작 상영하고 있다. 특히 여순반란사건 사진은 반란군이 경찰과 양민을 학살한 사진인데 이것을 제주4·3과 결부시켜서 상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4·3사건을 똑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5) 가장 기가 막힌 것은 희생자 위패만 있어야 하는 제주4·3평화공원 안에는 절대 있어서 안되는 공산폭동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당시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였던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보규,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등 여러 폭동분자들의 위패가 지금도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역사왜곡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진상조사보고서 때문이다. 시급히 폐기처분해야 할 망국적인 문서다. 만약 정부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제주4·3사건의 반국가적인 역사왜곡을 바꾸지 못한다면 제주4·3폭동을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학살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이 나라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성명서 발표

성명서 발표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성명서

1948년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48년 4월 3일 새벽 2시부터 제주도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그 가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폭동이었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선량한 제주 시민을 선동하여 북조선 건국선거에 참여하게 하고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 및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7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공산당에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던 것은 공산반란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양민을 끌어들이고 희생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군경 입장에서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경진압을 하였던 것이며, 이로 인한 희생에 대해 군경의 위법성 또는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무고한 희생자 없이 무장내란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진압의 결과 2년 후 6.25남침이라는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건졌다는 점에서 진압군의 책임은 면책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폭동과 내란의 주범인 남로당에 있다. 정부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들이 12만 8천명의 남한 양민을 학살한 역사부터 진상규명하여 처벌하고 배상을 물어야 한다. 제주4.3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정하였다.

제주4.3보고서는 4.3사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의 제1차적 목적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제주4.3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4.3의 진실을 감추었다. 폭동을 봉기로,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폭도의 만행을 감추었던 것이다. 따라서 4.3보고서는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일으킨 내란이었음을 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

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과 희생자 명예회복만을 부각함으로써 4.3사태가 공산폭동 반란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왜곡하였다. 1948년 4월 3일 좌익폭도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살상하고 남한 선거 반대, 북한 선거 지지를 하였고, 1948년 9월 15일은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빼버렸다. 심지어 폭도들이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여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런 왜곡의 결과로, 제주4.3 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고 있다. 공비토벌을 학살로 규정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군경을 죽인 2,500여명의 살인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폭동이고 반란인 사건은 국가가 보상하고 기념할 사건이 아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4.3사태의 가해자는 공산폭도이며 따라서 4.3사태의 무고한 희생자는 원칙적으로 공산폭도와 그 유족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 국가는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지 폭도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역사적 진실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국민화합 차원에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는 있다. 국가가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과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적인 6.25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가 하면, 제주4.3 공산폭동을 꿈을 끈 사람들로 칭송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까지 공산당이 이끄는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고 노력하다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말해 제주도민을 공산폭도로 모독하였다. 기가 막히게도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국가폭력, 심지어 학살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4.3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 꿈을 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원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으로

민족분열이 되었다는 취지의 반역적 발언까지 하였다. 이것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호국영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영령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으려 획책하고 있다. 좌파정당의 4.3 특별법 개정안¹⁾ 제안이유를 보면 4.3을 해방 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로 봄으로써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 하고 있다²⁾. 이들의 활동은 인권과 평화를 가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의의 파괴행위에 불과하다.

진정한 화합은 잘못의 인정과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고 감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4.3사건이 왜곡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립하는 일은 국민적 원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4.3을 대하는 국민들이 진정한 희생자들의 영령 앞에 고개 숙여 마음 속 깊이 추모할 수 있게 만든다. 4.3사태의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있었지만 남로당을 소탕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감동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외면한 배상과 보상은 정의가 아니며, 실제적 진실을 저버린 절차적 정의는 부끄러운 정의이다. 4.3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자들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불온한 꿈이었음을 늦게나마 성찰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생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3인) 2019.3.21.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가 113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의 공복인 국가기관은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첫째, 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 둘째,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하라!
- 셋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발언들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노무현 정권에서 날조된 제주4.3보고서와 이에 근거해 제정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라!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4.3을 왜곡하였거나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산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생자 보상에서 제외하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국정조사하라!
- 넷째,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하라!
- 다섯째, 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 조사하여 단속하라!
- 여섯째, 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 일곱째, 교육당국은 교과서 등에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2020. 6. 4.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반역행위하는 대통령 문재인을 고발한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고 발 장

고 발 인 1. 자유연대 대표 이 희 범
2.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 민 정

피고발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②), 여적죄(동법 제93조), 일반이적죄(동법 제99조),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해체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문

가. 형법 제90조 ②, 제93조, 제99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①, ⑤

2. 고발의 경위

피고발인은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조작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고, 내란죄, 여적죄,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자입니다. 피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피고발인의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의 중단을 끊임없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감수성이나

개전의 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고발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적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차원에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3. 대통령의 국가수호 책무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권한행사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탄핵소추 의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재직중일지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도 자유민주체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대상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 범죄사실

가.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

피고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단속하여 사법처리를 지시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주어진 책무에 반하여 오히려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를 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백두청송위원회, 민예청 등 친북단체들의 반국가 활동을 단속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구속1명)에 불과하였습니다.¹⁾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

1) 국보법 위반 사범 줄어드는데... 경찰청 보안국 되레 덩치 키워, 문화일보, 2020년 05월 06일, 찬양고무죄로 기소된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

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²⁾고 국민을 속여 대북지원과 대한민국을 북한의 책임질이 되게 할 뻔한 것을 비롯하여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고³⁾, 국군의 적인 6.25전범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자고 하더니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등⁵⁾, 중북성향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4.3 추념사⁶⁾에서 이적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라고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였고, 교묘하게 4.3의 본질을 왜곡하며 실정법 체계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휴전상태이고 체제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념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념이 대한민국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이념의 문제를 경시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북한과 중북주사파에 대하여 할 발언을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발언하는 피고발인에 있어서의 적은 대한민국으로 임혀집니다. 4.3사건은 엄연히 정치와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살이었고 진압이었는데 그 해결이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산 반란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피고발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 학살의 주범들에게 오히려 4.3특별법으로 보상을 하려는 시도야말로 법상식을 벗어난 위헌입니다. 또한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에 의한 범죄

2) 비핵화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동아일보, 2019. 06. 29.

3) 문 대통령이 北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월간조선, 2018년 2월.

4) 文대통령, '김원봉 공적' 재거론...'서훈논란' 다시 부상하나, 연합뉴스, 2019. 06. 06.

5) [김용삼의 현대사 추적]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는 이유, 펜앤드마이크, 2019. 02. 28.

6) 2018년 및 2020년 4.3 사건 추념사, 정부24, 2018. 04. 03.

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가 무의미해집니다. 공산폭도와 반란군의 악행 및 그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지 않는 피고발인은 정의를 배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4.3추념사에서 남로당 무장폭동으로 촉발된 4.3사태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학살’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덧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는 이적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남로당원이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입각한 통일정부의 꿈이었으며, 남로당원이 말하는 통일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고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 수립을 지지하는 우익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남로당의 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이루지 못해 분열된 것은 대한민국 군경의 진압 탓으로 돌리는 피고발인의 발언들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피고발인은 공산폭도를 꿈을 꾸는 사람들로 칭송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까지 공산당이 이끄는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고 노력하다 처참한 죽음을 맞은 것처럼 말해 제주도민을 끌어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독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공산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국가폭력, 심지어 학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공산주의 꿈을 꾸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도모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으로 민족 분열(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시사)이 되었다는 취지의 반역적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여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이적성 표현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그치지 않고, 호국영령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영령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탈이념을 가속화시켜 사상전에서 무장해제를 가져와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파를 반통일세력으로 프레임화 하여 처벌받아야 할 공산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우파는 불의, 좌파는 정의로 만들어 책임의 주체

와 객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정당의 4.3 특별법 개정안⁷⁾ 제안이유를 보면 4.3을 “해방이후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로 봄으로써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 했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했던 남로당의 범행을 은폐하고 항쟁으로 둔갑시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동 및 반란을 포함한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의 목적은 인권과 평화를 가장한 민주적기본질서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선거부정, 공수처설치, 자유를 뺏 개헌시도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국민을 기만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하는 발언과 계속된 이적행위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 있고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안보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과 그 추종자들의 행위는 대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해당합니다.⁸⁾

피고발인은 추념사에서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4.3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에 대하여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범 죄자들을 이승만이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꿈 꾸는 사람들이란 김일성을 따르는 박헌영의 남로당 골수분자들로서 해방 후 나라가 세워질 때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제주 반란사건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압군과 경찰들, 그리고 그 가족 등을 무참히 살해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지 않은 제주도민들까지 처참하게 살해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제주도는 그들의 반역 폭동으로 인하여 5.10선거를 못했고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공기를 걸고 살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먼저 꿈꾸는 자들이라 하고 이들의 반역 폭동을 보상하고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폭도를 진압하였던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먼저 꿈꾸는 자들이 만들려던 세상 즉 김일성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포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3인) 의안번호19332, 2019.3.21.

8)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가 113

피고발인의 4.3추념사에서서의 발언은 북한의 선전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호응 가세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여 주장한 것이며, 전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에게 공산세력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반국가적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동조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행위입니다(대판 2016도8137).

피고발인이 추진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⁹⁾은 북한이 제안하는 통일방안과 유사합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단계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에서 피고발인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¹⁰⁾ 피고발인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10 총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의 주장은 미군이 철수한 후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10 총선거를 끝까지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박헌영과 좌파들이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자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여 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이적표현물 제정 및 공표가 가능하도록 교육지침을 제정하게 한 국정 최고책임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지침에 근거하여 집필한 4.3역사 등은 공산반란행

9) 文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추진?”, 2019. 5. 27. dongA.com, 이종훈

10) 美 국무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경축사 이례적 공개..건국 100주년 주장 문제인 정권 정면 무시, 2018. 8. 15. 리버티코리아포스트, MK Lee

위를 적법하게 진압한 행위조차 국가폭력 등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성 역사기술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발인과 관련자 전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발인의 내란선동죄

피고발인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선동이란 일반 대중에게 감정적인 자극을 주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선동을 하였습니다.¹¹⁾ 피고발인의 선동은 대중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증대시켜 촛불정국을 위협적으로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선동으로 국민은 물론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까지 겁박 당하였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좌익의 물리적 위협이 거세어서 계엄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은 문재인이 대중을 선동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강압을 받아 정상적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다. 피고발인의 일반이적죄, 여적죄 및 반국가단체 등 동조죄

피고발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2018년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북한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¹²⁾를 체결하게 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형법제93조)를 범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를 제작한 죄(국가보안법 제7조⑤)를 범하였습니다.

군사분야 합의문상 고정익 항공기, 무인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정밀 타격력을 제약하고 북한군은 언제든지 기습에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의문은 NLL 기준 북쪽 50km와 남쪽 85km까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 포격 등 군사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35km나 양보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방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한국군의 대비훈련을

11) 윤상현 "문재인, 혁명 뿐이라며 선동...이것은 내란선동", 중앙일보, 2017. 1. 14.

12) 9·19 남북군사합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특집, 정책위키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화수역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NLL을 다시 협의한다는 뜻으로 이로써 서북 5개 도서는 북한의 기습 강점 위협에 상시 노출됐으며 수도권은 측방 위협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국군이 피로써 지켜온 영토선인 서해 NLL을 일거해 형해화시키는 문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정하고, 북한에 한강하구의 수로들을 조사해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군 특수부대에게 한강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감시초소(GP),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체결하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적화야욕의 변화가 없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게 만든 이적성 합의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은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 고 발언했습니다.¹³⁾ 이와 같은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집단에 종속화시키겠다는 반역적이고 매국적인 여적행위입니다.

5. 결론

피고발인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군경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6.25 전범이자 살인독재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

13) [전문]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전문, 연합뉴스, 2017. 12. 15.

다. 이러한 반체제사상을 지닌 피고발인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면 명백한 내란선동죄가 성립합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반헌법적 발언과 같은 말은 상상조차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 한 두 번도 아니고 수회 반복해서 작심한 듯 발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지위에서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제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규정한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수호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단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발인은 많은 국민이 4.3사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도록 선동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위험상태에 놓인 정도를 넘어 북한의 의도대로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북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4.3 사건 추념사 등 증거자료 별첨

2020. 6. 4.

고 발 인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 중

고발장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거제목	작성자	작성일	출처
1	국보법 위반 사범 줄어드는데... 경찰청 보안국 되레 덩치 키워	문화일보	2020. 05. 0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601071109315002
2	비핵화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동아일보	2019. 06. 2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9/96243110/1
3	문 대통령이 北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	월간조선	2018년 2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860&Newsnumb=2018022860
4	文대통령, '김원봉 공적' 재거론...'서훈논란' 다시 부상하나	연합뉴스	2019. 06. 06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6049500504
5	[김용삼의 현대사 추적]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는 이유	펜앤드마이크	2019. 02. 28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68
6	2018년 및 2020년 4.3 사건 추념사	정부24	2018. 04. 03.	https://www.gov.kr/search/pi?srhQuery=4.3%EC%B6%94%EB%85%90%EC%82%AC+%EC%A0%84%EB%AC%B8&realQuery=&reQueryFlag=&policyType=G00301&sdate=&edate=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40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3인	2019. 03. 21	의안번호19332.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참고판례		1990. 04. 02	89헌가 113
9	文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추진?”	dongA.com,	2019. 05. 2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7/95713759/1
10	美 국무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경축사 이례적 공개..건국 100주년 주장 문재인 정권 정면 무시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MK Lee	2018. 08. 15	https://www.lkp.news/news/article.html?no=5014
11	윤상현 "문재인, 혁명 뿐이라며 선동...이것은 내란선동",.	중앙일보	2017. 1. 1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00663
12	9·19 남북군사합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특집,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808
13	[전문]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대 연설 전문	연합뉴스	2017. 12. 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63436

기자회견



